

2011-2015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5년 성과 및 향후 과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2011-2015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5년 성과 및 향후 과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발행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발행일 2016년 10월

발행인 이은애

연락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1층

T. 02-353-3553 F. 02-383-3553 H. www.sehub.net

기획/정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은애, 장지연, 송기호, 인성환, 금민정, 박범용, 이성찬, 송소연

디자인/출력/인쇄 사회적기업 리드릭(02-3667-4945)

* 본 책자의 내용은 무단으로 전제할 수 없으며,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관한 문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1~2015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5년 성과 및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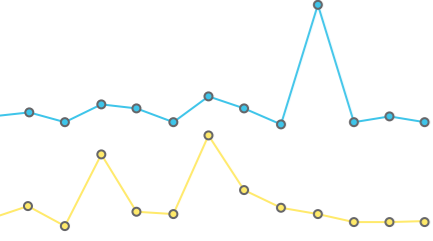
2016. 10.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일러두기



- 01.** 본 자료집의 정책성과 분석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현황과 사업을 대상으로 함.
- 02.** 본 자료집에서 사용한 통계와 지표들은 서울시와 중간지원조직의 행정보고서, 부처별 연구보고서와 보도자료 및 기타 자료 등을 근거로 하고 있음.
- 03.**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계열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와 수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고한 부처 및 부서 간 보고서별 집계 방식과 유형별 분류에 따라 분석의 범위와 수준의 일관성이 다소 결여될 수 있음.
- 04.** 사회적기업의 경우 보통 인증사회적기업을 의미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할 경우(예비)를 덧붙임.
- 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아이쿱, 한살림, 행복중심, 두레, 대학생협 등의 다섯 개 주요 사업체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음.
- 06.** 통계 및 평균을 구함에 있어 최대값과 최소값의 극단적 값을 제외하거나 반올림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수치와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1부. 들어가며

08

- I. 성과분석 배경 및 목적 08
- II.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등장 배경 09

2부.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흐름

12

- I. 2011년 정책 환경 12
- II.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패러다임 변화 13
- III. 민선6기 지방선거 이후 정책 환경 17
- IV.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20
 - 1.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 전략 20
 - 2.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 로드맵 23

3부.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장 현황 진단

26

- I. 사회적경제 기업 4배 확대, 신생 휴면기업 활성화 대책 필요 26
- II.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치 창출 성장 30

4부.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5년의 주요 성과

38



- I.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38
 - 1. 주체역량강화 39
 - 2. 시장조성 51
 - 3. 사업서비스 지원 57
 - 4. 자본 및 자산 연계 64
- II.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화 측면의 성과 69
 - 1.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촉진 및 지원체 육성 69
 - 2. 지역의 사회적경제 의제 발굴 및 특성화 사업 육성 71
- III.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지원 전략의 성과 85
 - 1. 공공재정 효율성 제고 85
 - 2. 사회성과지수 87
 - 3.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행복지수 89

5부. 향후 과제

91

- I.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활성화 91
- II. 상호공제조합(기금) 육성 기반 조성 94
- III. 조직유형별 지원에서 미션유형별 지원제로 재편 95
- IV.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공자산의 커뮤니티 위탁경영 확대 96



별첨

98

- 서울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공약권고 및 서울시 이행도 98
- 참고자료 109

1부 들어가며

국내 경제는 2008년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기 불황과 고용불안정, 소득양극화 등의 문제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최근 드러난 조선업의 위기는 거제와 울산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시민생활 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위축과 고용창출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국가나 시장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여 협동하고 연대하며 평등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조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적경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2016년 현재 시점에서 서울시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을 진단하고 서울시의 특성화된 지원전략이 타당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국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행 전략과 방향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1. 성과분석 배경 및 목적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미친 파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에 이어 신흥경제국과 아시아에 금융 불안이 가중되고 세계 경제는 장기침체의 기류로 덮여 있다. 국내 경제 역시 세계적 경제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기불황과 고용불안정, 소득양극화 등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최근 드러난 조선업의 위기는 거제와 울산 지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 시민생활 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위축과 고용창출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회

적경제는 이윤극대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국가나 시장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여 협동하고 연대하며 평등을 추구하는 경제행위이다. 일반 시장경제 기업들처럼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공동체의 수요에 대응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기업과 달리 사회적경제 기업은 이런 경제활동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순환되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재투자하여 빈부격차와 고용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생태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1년 말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를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양적 확충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합의하였고, '서울 시민의 행복도 제고와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공동 목표로 사회적경제의 '인재-자본-시장-자조기반'이라는 네 개의 기둥이 조성되도록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 왔다.

본 성과분석은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과 이를 통해 이루어 낸 사회적·경제적 성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서울시의 특성화된 지원 전략이 타당했는지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방향을 세우는 데 활용하고자 함이다. 또한 국내 경제위기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행 전략 및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등장 배경

산업혁명과 함께 발전한 자본주의는 생산성의 혁신적 향상을 가져왔지만, 기업 활동이 자본을 소유한 개인의 이윤추구와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용되고 대다수 노동력은 분배의 불공평과 빈곤을 겪게 되고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자본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윤창출과 경쟁을 지향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이익과 협동과 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가 등장하였으며 대안경제로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연구되고 실험되어져 왔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고 있는 호혜성, 민주적 참여, 협동과 연대 등의 원칙과 문화는 어떤 경제적 성과보다 더 뛰어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2010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작,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등의 정책 사업을 통해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고, 2011년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문제해결에 혁신적 해법의 마련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진화된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해나가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조직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서울형 공유기업, 사회적경제연합체와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은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유사한 원칙들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라는 하나의 부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의 특성

사회적경제 개념을 정의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회적경제가 포괄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유럽연합이 정의하고 국내 관련 법률 제정 시 고려했던 사회적경제의 고유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조직 설립의 일차적인 목적이 조직 구성원 혹은 더 넓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
- 공공기관으로부터 의사결정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영의 자율성 확보
-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나, 잉여 배당은 제한되고 기업에 재투자됨 : 잉여 분배에 있어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에 우선함
- 폐업 또는 매각 시, 잔여 재산은 유사 목적을 공유하는 조직에 귀속됨

첫 번째 특성으로 조직 설립의 목적을 '공익적 기여'에 두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 활동이 투자된 자본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즉, 경제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구성원 또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재투자 수단이지 활동의 주요 동기가 아님을 말한다.

두 번째 특성인 '경영의 자율성 확보'는 사회적경제를 공공 부문과 구분하는 주요 요소로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결사체 조직의 역동성을 근거로 하는 넓은 의미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세 번째,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란 영리기업의 일반 원리인 '1주 1표'가 아닌 '1인 1표'의 원리 혹은 지배구조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경영을 의미하며, 다섯 번째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특성은 '공익적 기여'를 조직의 설립 목적으로 하는 첫 번째 특성과 연결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개인의 자산화보다는 투자 자본에 대한 배당 제한, 노동과 이용고에 따른 배당 도입, 공익 목적사업을 위한 비분할 적립 및 재투자 등 다양한 실천 방안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내 사회적경제의 등장 배경

국내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게 된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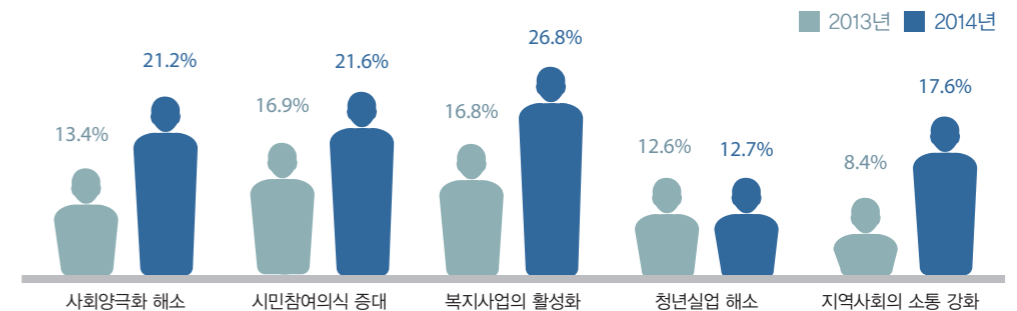
- 글로벌 시장경제 확장 속에서 지역경제 위기 가중
- 내수 활성화를 가능케 할 시민 생활경제의 중요성 부각
-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력 급감으로 새로운 노동수요 창출 필요
- 취약계층의 노동을 통한 사회통합력 제고 필요
- 고령화 등으로 증가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지역커뮤니티 재건 필요
- 시민사회의 창의성과 사회적 자본 증식 및 연계의 필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수요 증가

이에 사회적경제 조직은 한시적 재정지원에 의존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커뮤니티가 보유한 특유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내발적 발전을 이끄는 지역경제 재구조화 이룰 가능케 할 생태계 조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이자 핵심 사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 서울 시민의 사회적경제 인식 및 기대

2015년 서울서베이 결과 또한 서울 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사회적경제의 긍정적 영향 - 서울시민 인식조사



자료: 서울연구원(2015. 12)

서울 시민 10명 중 6명(58.1%)이 '사회적경제' 용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4.4%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복지사업의 활성화와 사회양극화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컸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과 활동으로 시민참여의식이 증대할 것을 기대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는 2012년 29.9%에서 2014년 57.7%로 2배 정도 상승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30.2%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크게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2부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흐름

유럽의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실천을 토대로 형성된 반면, 국내 사회적경제는 정부 주도 하의 재정적·제도적 지원과 결부되어 있다.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은 2007년 고용노동부의 정책에 따라 사회적기업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2011년까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은 한시적이고 획일적인 인건비 지원에 치우쳐 정부의존적인 기업과 유사 사회적기업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한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회적기업 정책워크숍'을 시작으로 '서울 시민의 주도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1. 2011년 정책 환경

국내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정책의 역사는 2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자활공동체기업 육성(복지부, 1996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공정위, 1998년), 사회적일자리를 이용한 사회적기업 육성(고용노동부, 2003년),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농림부, 2011년), 마을기업 육성(안행부, 2011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기재부, 2012년) 등의 순으로 확대되어 왔다.

2011년 초, 중앙정부 내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정비하고자 청와대 서민정책비서관 주재로 사회적기업 TF가 가동되어,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시 가점 부여제 도입·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포함·부처지정형 사회적기업 육성제도 및 통합적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수립·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법인격 부여 등의 제도적 정비작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2011년 2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협동조합연구소·사회투자지원재단 주최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동향과 과제 공감'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협동조합기본법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 후,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결성 및 법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참여가 증가하였고,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형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및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2012년까지 1천개 신규 서울형 사회적기업 지정 후 2년간의 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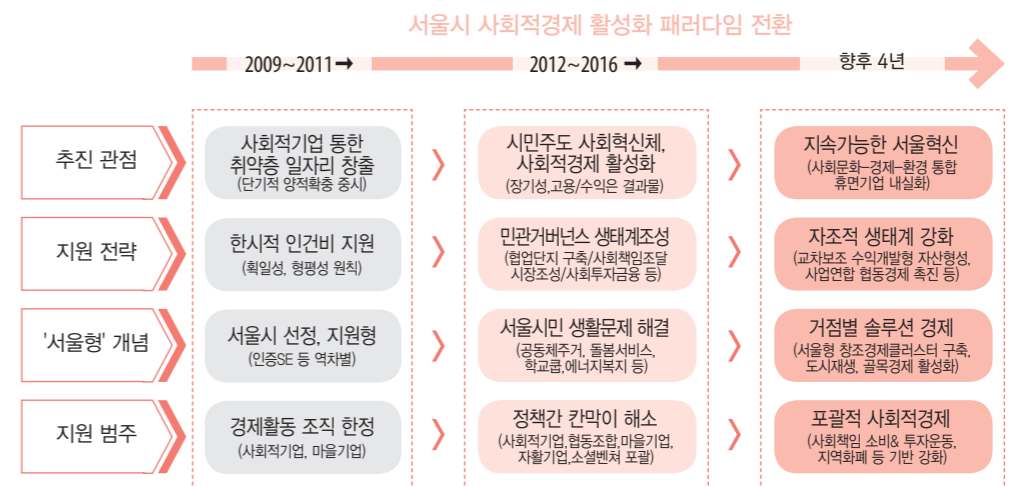
비 지원'이라는 무리한 양적 확충으로 인해 급조된 유사 사회적기업이 증가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지정 후 2년간의 지원이 종료되자 기업의 32.5%가 중도 탈락하면서 취약 계층들의 회전문 고용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창업이 어려운 한국 현실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및 성장 지원 정책이 미흡한 가운데,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이 부족하다보니 사회적기업의 정체성 논란과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II.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패러다임 변화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청책(聽策)' 워크숍을 마련하였다. 11월 30일에는 '사회적기업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 진영을 위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서울형 사회적경제의 육성 목표를 '서울 시민의 주도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와 사회·경제·문화적 수요에 기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지역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사회적 목적 수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새롭게 제창하였다. 특히 재생산 영역의 공동체 활동으로 분류되던 지역화페운동·사회책임소비운동·사회책임투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과 사회적경제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제창하였다.

〈그림2〉 서울시 사회적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안



자료: 이은애(2011 청책워크숍)

1) 청책(聽策): 2014년 서울시가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청聽) 정책에 반영한다(책策)'는 의미.

2012년 초 박원순 시장의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희망서울정책자문단이 출범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협의 창구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에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의 제안으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공동체, 민간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서울 사회적기업 민간협의체(2012년 5월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로 확대)'를 구성했다.

서울 사회적기업 민간협의체는 2012년도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및 예산의 재구성 방안을 제안하였고 서울시는 이들 중 일부를 수용하여 '서울시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1〉 서울 사회적기업 민간협의체 2012년 정책 제안 반영도

정책 제안사항	정책 반영도
1.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전략적 지역특화 시범 사업 운영	2012.5 개시
2. 사회적기업 발전단계별 맞춤 지원 사업 -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 서울시 전략사업 10대 분야 기획 공모 - 성장기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적경제 규모화 및 소셜프랜차이즈 지원	2012. 9 혁신형 사회적기업 공모 2013. 5 소셜프랜차이즈 사업 공모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사업 - 사회적기업가 인력 양성 - 사회적기업 시장조성	2013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서울통상진흥원 지원사업 개시
4.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립 운영	2013. 1 설립
5.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전환 기반 조성 - 공식적 거버넌스 재구성 : 서울시 사회적기업위원회 재구성 - 서울시 사회적기업 민간네트워크 강화	2012.10 희망경제위원회 사회적경제분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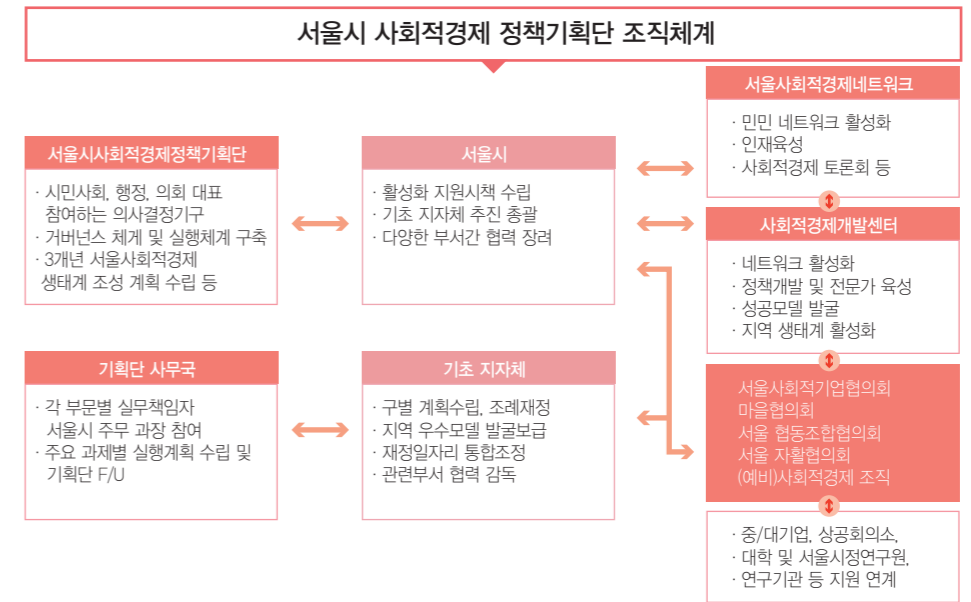
그러나 2012년 3월부터 3개월간 운영된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 TF'의 정책교섭이 '민간이 제안하면 공공이 일부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사회적기업개발센터(현 사회적경제지원센터)²⁾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승인을 시의회가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민간의 정책제안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집행기구의 부재로 인한 사업 지체 현상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2012년 우선 개선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담당하며 2015년 8월까지 사회적경제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2년 초 서울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 등의 사회적경제 대표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단법인을 조직하였다. 이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제안하기 위해 2012년 7월, 서울시장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성에 합의하였다. 이는 충남 사회적경제의 경험을 벤치마킹한 것이며, 이 과정을 전후로 협동조합과 자활기업들

2)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근거. 사회적경제를 포괄하는 실기능 및명칭 개정 합의

의 참여 역시 확대되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현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사업계획을 세우고 민관 공동수립 · 공동집행 · 공동책임 구조를 갖추어 민-민, 민-관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의 틀을 세웠다.

〈그림3〉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 정책기획단 조직체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은 2012년 9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10대 과제 및 정책지표에 합의하고 시장숙의를 통해 이를 공론화하였다.

〈표2〉 민선5기 서울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및 정책 목표

영역	세부과제
기반조성	1. 공공시장 등의 활성화 2. 사회적 금융의 기반조성 3. 사회적기업가 등 인재육성 4. 인큐베이팅 등 공간 인프라의 조성 5. 광역 및 기초 지원 인프라의 조성
발굴 및 성장지원	6. 유형별 · 의제별 발굴 및 성장 지원사업
제도와 거버넌스	7. 사회적경제 부문을 위한 육성 및 지원제도의 도입 8. 협치적 거버넌스의 구축
네트워크와 전략적 공동사업	9. 지역 · 업종 · 부문 단위 네트워크의 활성화 10. 전략적 공동사업

목 표

사회적경제 규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사회적경제 부문의 성장: '12년 600개 → '13년 1,400개 → '14년 2,000개 • 사회적경제의 실제화(GRDP³⁾: '12년 0.3%(0.9조원) → '13년 0.5%(1.5조원) → '14년 1%(3조원)
생태계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장 우선 구매: '12년 500억원(1%) → '13년 2,500억원(5%) → '14년 5,000억원(10%) • 사회적금융자본: '12년 1,000억원 → '13년 2,000억원 → '14년 3,000억원 • 클러스터 공간(입주 기업 수): '12년 4개(104) → '13년 12개(300) → '14년 25개(625) • 신규 사회적기업가 육성: '12년 250명 → '13년 500명 → '14년 1,000명 • 자치구 지원 인프라: '12년 8개 → '13년 15개 → '14년 25개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12년 8개 → '13년 15개 → '14년 25개 - 업종: '12년 5개 → '13년 10개 → '14년 15개 - 부문: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 협의회
사회통합적 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기여도: '12년 0.3%(16,200명) → '13년 0.6%(32,000명) → '14년 1%(52,000명) • 관참은 일자리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비율: '12년 50% → '13년 60% → '14년 70% - 임금 수준의 제고(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12년 50% → '13년 60% → '14년 70% • 공공서비스 제공률 확대: '12년 35억원 → '13년 5% → '14년 10% • 협동경제의 마을 확대: '12년 63개 → '13년 120개 → '14년 180개

출처: 서울시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보고서(2012)

한편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과는 별도로 2012년 4월부터 3개월간 서울시와 협동조합, 협동조합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민관TF'를 구성하여 '서울시 협동조합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1월에는 서울시 협동조합의 성장과 확대를 돕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 선배 그룹이 신설 조합의 설립 컨설팅 및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13년 6월에는 생활협동조합의 제안으로 결성된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가 발족하여 협동조합 진영간의 상호이해와 협동,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연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서울시와 민간의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2013년 1월, 사회적기업개발센터(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서울시가 센터 설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 운영해 온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에서 그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의 간사 조직이자 집행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지원하게 되었다.

'(사)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하여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 포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전국 사회적경제 지방의원협의회, 국회 사회적경제 연구포럼 등의 설립 과정과 운영에 적극 협력해 왔다.

3)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 총생산. 시·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총 생산액을 추계하는 시·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

2013년 8월, 민관정책협의회에서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는 2014년 5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되었다. 이후 서울시 조례는 19대 국회의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과정 등에서 주요한 사례연구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III. 민선6기 지방선거 이후 정책 환경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여야 간의 정책 경쟁과 공조가 더욱 활발해졌다. 국회 차원에서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등을 각각 구성하고 기존의 각 정부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지원·관리 하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구축하고 관련한 금융 정책의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자 사회적경제 기본법·사회적가치법·사회적경제 우선구매법 제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등의 법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되어 20대 국회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다.

2014년 민선6기 지방선거 결과, 재임한 박원순 서울시장뿐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25개 자치구청장 및 시·구의원 중 상당수가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약속하는 선거공약을 제시하였고, 이를 실현하는 다양한 정책 집행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과 환경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소외와 배제가 없는 공동체 문화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시정(市政)을 강조하였다. 60개의 주요 공약을 사회적경제와의 결합도를 중심으로 재분류하면 '창조경제 육성',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주거·문화·환경'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3> 민선6기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공약별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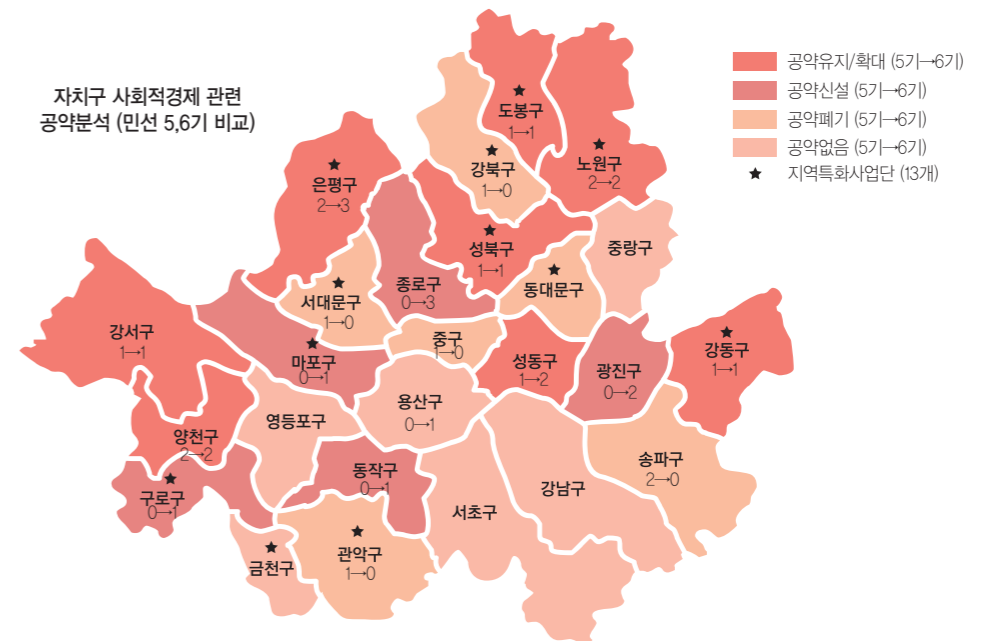
분야	주요 공약	사회적경제 대표 모델	관련 업종	사회적경제 대응 전략
창조경제 육성	5대 창조경제 거점 육성 (G밸리/상암 DMC/동대문/신·홍·합/개포동)	업종협의회, 지역특화사업 연계 예) 동대문 패션디자이너 : 오르그닷 온라인플랫폼 & 윤리적패션네트워크 협력	• 봉제 • 윤리패션 • 재활용 가구디자인 • IT	• 동대문>봉제 수주 지원시스템 운영, DDP 주변 대안노점 구성, 디자이너 협동화 사업, 신진 디자이너들의 협동조합 구성 지원 • 홍대·합정> 석유비축기지 활용한 생태/문화업종 생산혁신기지 설치

분야	주요 공약	사회적경제 대표 모델	관련 업종	사회적경제 대응 전략
창조 경제 육성	사회적경제 특구	부문·업종협의회, 지역특화사업, 자치구허브센터, 은평혁신파크 모델	· 전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형/산업클러스터 연계형/광역형 특구 ·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성 및 지역계획 수립 · 지역자원 조사 및 협동기반 앵커시설 조성 · 지역의제 실현위한 사회적경제 창/취업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대안장터협의회(방물단, 일상예술창작센터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 그룹(오늘공작소, 조각보, 성복신나 등), 농산물 직거래 상생사업단 등	· 장터협의회 · 물류/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장터협의회 협력 강화 · 전통시장 공유형 물류유통시스템 구축 · 자립 가능한 협동조합 사업모델 확산 · 재래시장 활성화 SE기업 육성 (쌈지농부, 모자관협동조합 사례)
일자리 창출	공공형 사회 복지서비스 일자리 5만개	돌봄·보육·장애인·보건의료·주거·교육을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 돌봄 · 주택 · 학교coop ·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별/지역별 고용영향 평가제 시행 · 대학창업도시 연계, 청년주거&진로지원 · 아동보육(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 중고등대학 학교협동조합(매점, 교복 등)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서울형 인두제 시행) · 노인돌봄(공동주거-의료·요양-급식-여가-말벗 통합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 뉴딜일자리 사업 확대
	사회복지 인력 2배 확충	정신건강상담사, 직업상담사, 놀이치료사 등 전문분야 복지인력 사회적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체 발굴 및 네트워크(지역 사회복지기관, 돌봄/의료 업종) · 사회복지 및 간호 자격 취득한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사회 복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0+	성미산 국공립어린이집의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위탁 운영	· 돌봄/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의 30%를 지역주민이 공동출자하는 보육협동조합과 함께 설립, 위탁운영 · (임대)아파트 보육 품앗이, 공단 및 상가지역 공동보육조합 등 설립 지원 · 어린이도서관 개방한 시간제보육 활성화
주거· 문화· 환경	도시재생 기금 2조원 조성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동네목수, 두꺼비하우징, 동작회 망마을네트워크 등)	· 주거·건설 · 지역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리더와 주민 협력하에 마을의 사회·경제적 재생을 위한 자원 조사, 주민 참여형 창업, 소셜 프랜차이즈 모색
	역사문화 관광벨트	역사·문화 관광지 주변 주민 참여형 복원 사업 추진 예)장수마을 동네목수	· 공정여행 · 주거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곽&주변 관광 공정여행 · 실버 지역큐레이터 양성 사업 · 공정여행&역사교육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 벨트 조성

분야	주요 공약	사회적경제 대표 모델	관련 업종	사회적경제 대응 전략
	햇빛발전소 4만호 보급	10개 햇빛발전시민 협동조합	· 대안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 협력 학교 옥상 발전소 추진 · 기후변화기금 설치 운영 · 주거 건설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 저소득층 가구 에너지 효율 증대 지원

서울시 자치구청장 당선자 중 사회적경제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경우는 민선5기의 14개 자치구와 6기의 13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총 19명에 이른다. 민선 5기에는 주로 사회적기업의 양적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면, 민선 6기에서는 지역밀착형 전략사업 추진·협동인프라 구축·주체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정책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4〉 서울시 자치구청장의 민선 5~6기 사회적경제 공약 제시 변화도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고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아이와 어른, 마을과 학교가 어울리는 교육 실현을 제안하였다.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선 후 '사회적경제 TF'를 구성하여 학교협동조합 육성·지원책과 자유학기제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등의 논의와 협력을 활발히 구상하여 실천하고 있다.

IV.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01.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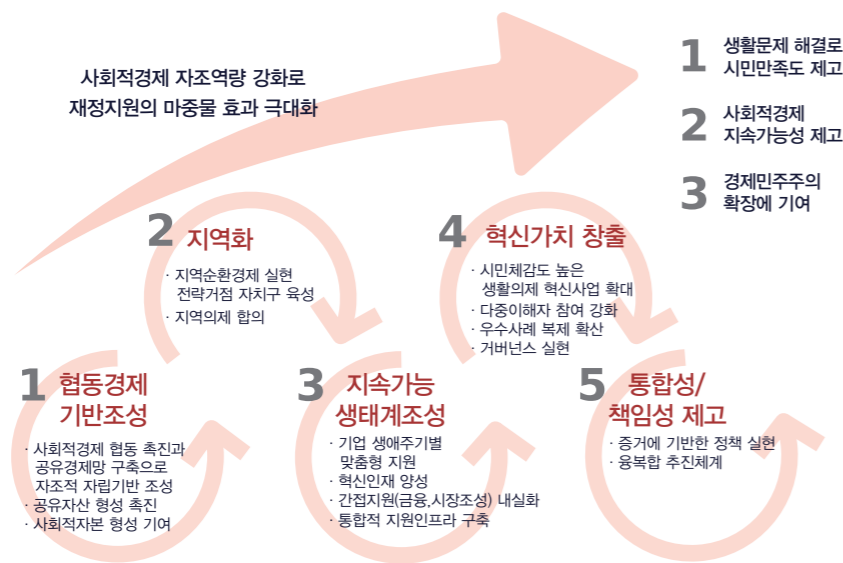
2011년 11월 '사회적기업 정책 워크숍'에서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사회적기업 시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은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서울시민 생활문제의 혁신적 해결 및 경제민주주의 확장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협동경제기반 확충·사회적경제의 지역화·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굿거버넌스 정착 등을 주요한 전략으로 수립하였다. 특히 다양한 사회주체들 간의 호혜적 연대 확장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규모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교량적 사회자본과 커뮤니티 공유자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자조기반의 핵심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자조와 협동을 통해'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시민사회 안에서 우선 해법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공공이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하였다.

서울 시민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민주주의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5)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태계 조성 전략 및 목표



■ 창업 단계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전략으로 이행

선진국과 달리 사회적경제 창업에 필요한 시민투자형 자본조달이 어려운 국내 현실에서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취약층의 고용 창출은 물론 사회적기업의 초기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취약층 피고용자의 인건비 중심의 지원은 사회적기업 고유의 수요를 반영하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이자 실업부조를 대체하는 피고용자 지원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2010년 이후 고용노동부는 직접적 임금지원정책에서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공공시장 판로지원 등 간접적 지원정책으로 이행하여 실행 중이며, 서울시 역시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인건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발전 단계별 또는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전략을 개발하였다. 성장기 기업들의 경우에는 규모화를 위한 대규모의 자본조달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사회적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인내자본과 장기적 기금(Patient & Long term Fund) 방식으로 운영하여 자본조달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우호적 시장 형성

첫째, 공공 기관과 기업의 참여로 사회책임 조달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정비 및 우선구매 목표제를 시행한다. 사회적경제의 일반적인 수익구조는 교차보조(cross-subsidization)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수익성이 높은 사업 분야나 지불 능력을 보유한 소비자로부터 얻은 수익을 이용하여 수익성은 낮지만 사회적 가치가 높은 분야나 취약층 소비자에게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회책임조달'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목적 수행이 지속가능하도록 협력하고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 간의 상호거래 시장을 활성화한다. 교육과 문화예술·공정여행 관련 사회적기업 간에 융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소그룹 형태로 전환되는 중고생 수학여행 시장에 대안상품을 개발하고 공동 마케팅을 수행한다거나, 서울 시내 외식업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농촌지역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공형 사회적기업과의 계약 재배를 하는 등 사회적경제 간의 상호거래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과 지역민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체형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농촌경제 살리기에 일조하는 등 상호 간의 사회적 목적 수행을 지지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 이런 상호협력시스템은 당사자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가운데 충분히 실현 가능해지리라 본다.

셋째, 서울은 인구 천만을 가진 국내 최대의 소비 도시이자 인구 밀집·자원 밀집 지역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체들로 구성된 역동적 도시 서울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 캠페인, 호혜적이고 윤리적인 소비의 장려와 촉진을 지원하고, 사회투자·공익서비스에 대한 후원과 자원봉사, 거버넌스에의 다양한 역할로서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들도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자율적 경영공시 등의 윤리적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서울 시민 대상의 수요 및 자원 조사를 통한 전략사업 및 전략지역 지정사업 개발

2011년까지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이 요구되는 분야나 동원 가능한 지역자원에 대한 사전 조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개별 조직들의 사업계획 심사에만 치중하여 추진됨으로써 공급자 중심형·단순복제형·과다 경쟁형 창업을 양산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서울 시민 욕구 조사 및 지역 자원 조사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전략적 확충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 및 추진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신설하였다.

또한 생활 문제가 발생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거점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체를 발굴 육성함과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기초 지자체 수준의 중간지원 조직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의 정책 효과가 기초 지역 단위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지원전략을 개발하였다.

■ 시민사회 역량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국내외 사례와 연구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있어서의 핵심 동력이 **인재 양성과 네트워크 활성화**에 있음을 보여준다. 핵심 동력으로서 인재를 양성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분야 경력자는 물론 청(소)년, 경력단절여성, 은퇴 시니어, 취약계층 등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업가를 발굴하고 훈련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간의 기초 창업교육 외에 인턴십·기술지원·국내외 기술전수 등이 가능하도록 인력양성 지원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경제협의체의 **업종별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시민사회 조직들과의 협력 하에 포괄적인 사회적경제 구축 활동(지역화폐 운동·품앗이 노동·전문직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인재은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당사자 협의체 스스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선언이나 윤리강령 채택 등의 자구적 노력을 통해 **지역고용 확대·지역 원자재 소비율 제고·지역자산 확충·지역간 불균등 발전 해소·지역 재투자율 제고** 등의 구체적 목표를 실천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 민관 거버넌스로 시너지 제고

서울시의 정책 기초 내에서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에 기초한 분권과 자치적 경제 민주주의의 신장이라는 가치 철학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민관·민민 간의 거버넌스의 효용성에 대하여 재인식하는 과정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였다.

■ 사회적경제의 개별적 생존을 넘어 생태계 조성을 돕는 풀뿌리 중간지원조직 확충

사회적경제와 같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과 시민사회의 중간 지대에서 양자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 중간지원조직은 전형적인 위계질서 하에서 사업위탁권자인 행정의 상부하달식 수행 또는 자문 기구의 역할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에서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및 실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주체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지자체·재계 및 노동계·시민사회계·잠재적 시민 기업가 및 소비자 그룹 등)의 적절한 참여 모델이 제안·연계·조정되고, 사회적경제의 경쟁력 강화 지원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02.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 로드맵

2013년 하반기, 서울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 로드맵'을 개발하였다. 연구를 책임졌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정태인(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역사회 내 시민 기반의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메가시티 서울의 발전 모델로 '퀘벡식 거버넌스 모델'을 거쳐 '유럽식 사회적 자본 기반형 모델'로의 진화를 제시하였다. 즉 퀘벡 지역의 각종 시민운동과 시민참여가 결합한 협력의 문화를 마련하고 볼로냐시의 기업과 주민의 공동체로 정의되는 산업단지 모델을 통해 물질적 성장과 함께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고양하자는 것이다.

〈표4〉 도시별 사회적경제 발전모델 비교

중심 도시	몬드라곤시	볼로냐시	퀘벡주	서울시
면적	30.8 km ²	22,446 km ²	1,542,056 km ²	605.2 km ²
인구	약 2만 2천명 (2015년)	약 376만 명 (2012년)	약 790만 명 (2011년)	약 1,039만 명 (2013년)
1인당 GDP	약 40,000 USD (2010년)	약 35,700 USD (2008년)	약 28,500 USD (2009)	약 25,467 USD (2011)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그룹 • 수직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협의체 발전 • 수평적 지역 소기업 • 네트워크 활발 	정부-시민사회-노동계 협업적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주도에서 민관 거버넌스 및 사회적경제 상호부조 • 주도성 회복 전환기
업종	제조업(전기전자), 금융, 유통, 사회서비스	제조업(기계), 유통, 사회서비스, 금융	사회서비스, 금융, 유통	사회서비스, 기타 서비스, 제조, 유통
사회 금융	협동조합 내부기금, 협동조합 은행	협동조합 네트워크 기금, 협동조합 보험, 정부 예산	공동체 기금, 정부예산, 협동조합 은행	정부 예산, 서울사회투자기금

중심 도시	몬드라곤시	블로냐시	퀘벡주	서울시
장점	규모 및 범위의 경제와 세계화	네트워크 외부성, 일반 신뢰와 협동	시민의 참여 민주주의 노동조합 - 사회적경제 연대	시민운동가 풀 존재 정치리더 철학 공유 청년세대 참여 증가
단점	특수성, 상대적 폐쇄성	문화적 전통과 모방의 어려움	제조업 부재로 인한 고용의 한계	인구 천만의 거대 실험 사회적 자본 취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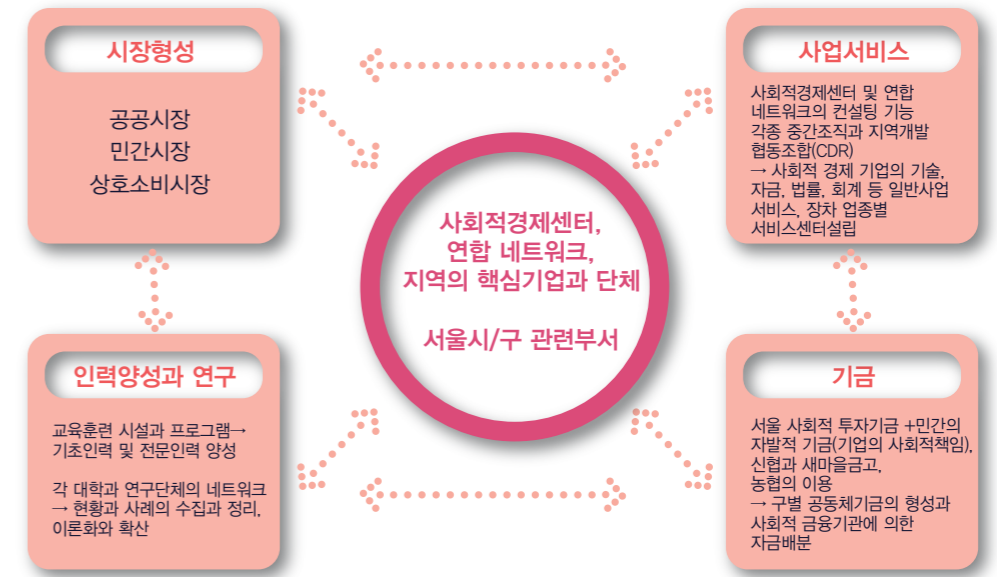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연구보고서(정태인, 2013) 일부 발췌하여 수정 작성(이은애, 2016)

아울러 <그림 6>과 같이 공유자원망 구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과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공유자원은 모두가 접근 가능해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의 기여에 의해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⁴⁾. 공유자원은 사회적경제의 특징을 잘 표현해 주는데, 사회적경제 자체가 바로 시민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자원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되기 때문이다⁵⁾.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공유자원으로 **인력양성과 연구, 사업서비스(경영지원), 사회금융과 기금조성, 그리고 시장형성의 네 분야를 상정할 수 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네트워크는 이런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사업의 성과는 공유자원의 재생산과 축적에 기여 하리라 전망한다.

즉 사회적경제를 통한 내생적 발전전략의 성공여부는 지역공동체 내의 공유자원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잘 이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런 내생적 발전전략을 ‘자산기반 발전(asset-based development)’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로 사회적경제를 상정하고 있다⁶⁾.

4) Ostrom(2009), 재인용(정태인, 2013)
 5) 공동체 내의 신뢰와 협동이 없다면 공유자원은 하딘이 "공유지의 비극(1968)"에서 주장한대로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사용에 의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딘은 공유자원의 유지를 위해 사유(인클로저)와 국가규제(리바이어던)를 해법으로 제시한 데 반해, 2009년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오스트롬(1990)은 신뢰와 협동에 기반한 '공유자원 관리의 8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신뢰와 협동은 사회적경제를 운영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의 네트워크로서 공동체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정태인, 2013).
 6) 구체적인 내용은 정태인(2013)을 참고할 것

<그림6>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유자원망 구축 방향



출처: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정태인, 2013)

3부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 진단

2012년 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 이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2011년 718개에서 2015년 말 기준 3,05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5년간 사회적경제 기업은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매출과 고용창출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근로 조건으로 고용의 질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자율과 권한, 민주적 운영과 협력 문화, 공정성 지표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며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사회적경제 기업 4배 확대, 신생 휴면기업 활성화 대책 필요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과 함께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6년 7월 말 현재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은 3,318개소로 2011년 718개소에서 5년 사이에 4배 이상 성장했다. 이는 또한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78%가 신생 기업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적 성장의 배경에는 2012년 말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신규 협동조합 2,200여개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적경제 신규 창업체 수는 지난 3년간 설립된 서울시 신설 법인의 2.7%에 해당하며⁷⁾, 2015년 하반기부터 협동조합 설립 추세는 완화되었으나 현재도 매월 30~40건이 꾸준히 신설되고 있다.

〈표5〉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증가 추이

기업수(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기업수	718	819	1,766	2,497	3,054
(예비)사회적기업	475	532	433	374	433
협동조합	-	16	1,007	1,772	2,267
마을기업	67	76	108	139	119
자활기업	149	167	188	194	201
소비생활	27	28	30	32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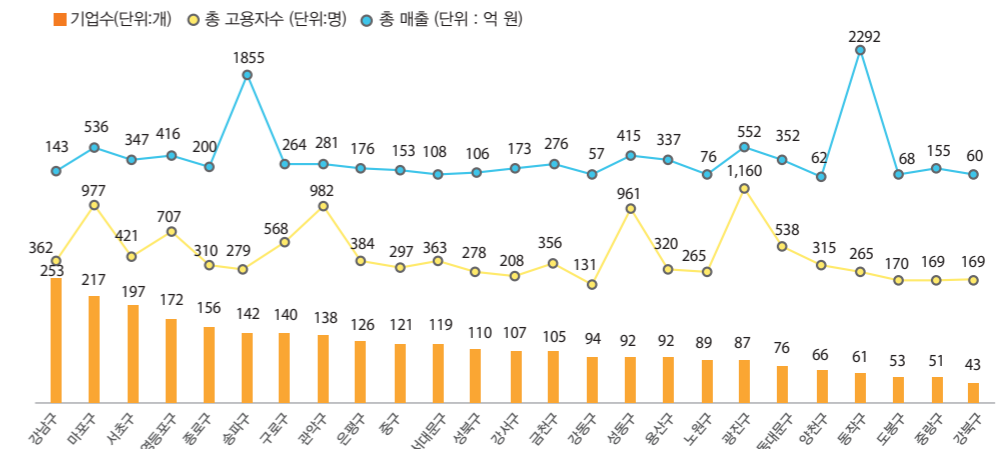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사회적경제 밀집 지역이던 마포·영등포구 외에 강남·서초·송파구가 최근 자영업자·택시기사 등의 다양한 직업군과 청년부터 시니어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최대 설립 지역이 되고 있다.

7) 중소기업청(2016.5)

다음 〈그림7〉은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기업의 분포 및 성과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에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매출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자치구 중 0.63%, 고용에서는 1.54%에 그치고 있다.

동작구와 송파구는 기업의 분포면에서는 높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광진구, 성동구, 관악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은 고용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중 신규 기업수가 30개 이상인 자치구가 22개 자치구이며, 서대문, 은평, 성북, 강북 등 4개의 자치구에서는 5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7〉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기업 분포 및 성과 현황(2014년 말 기준)



반면,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실태 조사와 함께 동작구와 송파구는 기업의 분포면에서는 높지 않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광진구, 성동구, 관악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은 고용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중 신규 기업수가 30개 이상인 자치구가 22개 자치구이며, 서대문, 은평, 성북, 강북 등 4개의 자치구에서는 5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실태 조사와 함께 자치구 생태계조성사업단이나 부문협의체의 연간 활동보고서 등에 근거한 현장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실제 사업 운영률⁸⁾은 평균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은 3,054개소로 집계되었지만, 신생 조직들의 실제 운영률이 낮아 실제 수익활동이 일어나는 기업은 1,956개소(64%)에 지나지 않는다⁹⁾.

8) 사업운영률: 폐업/해산/타지역 이전 등을 하지 않고 유지되는 기업 중 사업을 운영 중인 기업 비율

9) 고용노동부(2015), 기획재정부(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과(2016), 서울광역자활센터(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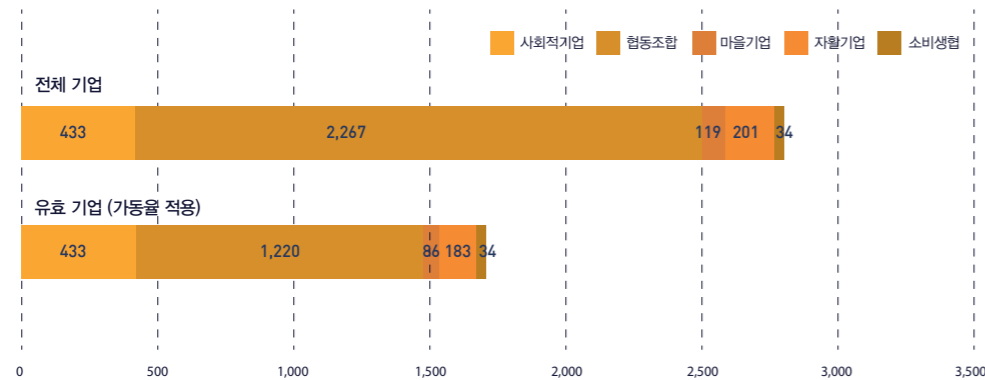
10) 유지율: 전체 인종/지정/신고된 기업 중 폐업/해산/타지역이전 등을 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기업 비율

사회적기업 유지율¹⁰⁾은 90.0%, 자활기업의 유지율은 91.0%로 나타났다. 자활기업의 경우 최대 5년간의 재정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공식적인 기업경영 정보 집계 가능한데, 이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20여년의 역사 속에서 폐업한 기업이 9~10%에 지나지 않으며 유지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마을기업의 경우 유지율이 다소 낮은 69%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지원이 최대 2년에 한정되어 있고, 커뮤니티 관계망이 적극적인 소비자층으로 유입되는 것이 어려운 현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유지되고 있는 마을기업 중 실제 운영하고 있는 비율은 85%였다. 특히 **협동조합의 운영률은 최소 추정치 44.4%에서 최대 추정치 53.9%로 나타나 휴면 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운영률의 최소, 최대 추정치의 차이가 큰 것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각각 근거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실태조사에서는 운영여부에 응답한 기업 모두를 사업 중으로 본 반면, 고용노동부는 응답 후 실제 설문에 답변이 없거나 답변을 거절한 기업은 실질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기업들의 창업 후 유지율이 1년 후 24.5%, 2년 후 19.8%, 5년 이상 유지율은 11.2%에 불과한¹¹⁾ 것에 비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유지율이 꽤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8〉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체별 현황 (전체기업수 vs 유효기업수)



지난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무리하게 추진한 ‘서울형 사회적기업 1천개 육성’ 사업의 폐단으로 인해 민·관 간에 ‘단순한 양적 확충은 지양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양적 확충 및 성장에 치우치는 양상이 나타나므로 신규 창업체 규모를 주요 성과로 지표화하는 정책적 접근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며, 신규 창업 지원에 집중하기 보다는 휴·폐업 기업들의 실제 운영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 중소기업청(2016.5)

■ 사회적경제 주체별 현황

01 협동조합

실제 50%대의 가장 낮은 사업 운영률을 보인 협동조합은 조직 설립 후 사업 개시를 유보한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서울협동조합협의회는 높은 휴·폐업률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자발적 결사체로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사유로는 사업모델 미비가 30.4%로 가장 높았으며 조합원수 미확보(18.1%)와 운영자금의 부족(10.7%)¹²⁾ 등이 뒤를 이었다. 따라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 단순한 법적 설립 정보 제공이 아니라 예비등록제를 통해 비즈니스모델 수립을 돕거나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창업 보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02 마을기업

공간지원금과 용도 제한이 적은 사업비 등의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창업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디딤돌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정책 초기에 참여한 기업의 폐업률이 높고 서울형 마을기업 지원 기업들의 폐업률도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2015년 8월까지 마을기업 육성을 담당했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기반을 갖춘 서울시 마을기업은 30% 이내”라고 2015년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지역화TF에서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대도시 마을기업이 ‘커뮤니티 기반을 이용하고 확충하는 비즈니스’로서 가동되기에는 마을 내 ‘호혜적 경제 관계망’이 취약한 것이 주원인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자치부 제도에 맞춘 마을기업의 양적확충 보다는 마을기반 기업 모범사례의 성공요인 분석과 확산을 위한 기반 정비가 필요하리라 본다.

03 사회적기업

2011년부터 고용노동부 지원 하에 서울시에서만 매년 100팀의 청년 사회적기업가가 육성되고 있지만 이들의 (예비)사회적기업 진입률은 10% 이내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청년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 정책은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제3섹터 전 분야로 청년 세대가 대거 등장하는데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현저히 낮은 비율로 (예비)사회적기업 제도가 청년사업가들에게 주는 메리트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사회적기업 인증 및 지원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기업가의 세대 계승에 난맥이 우려된다.

04 서울시 공유기업

서울시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 및 기업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공유기업의 70% 이상이 이런 사회적경제 지원제도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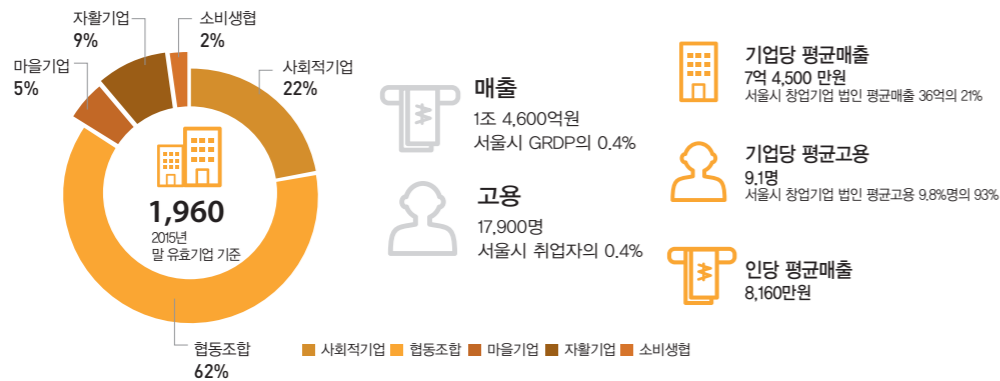
12) 기획재정부(2016)

성장해왔다. 자동차, 주거, 장난감과 의류 등을 공유하는 쏘카·그린카·우주·서울소셜스탠다드·집밥·열린옷장·키플·위즈돔·잇다·자락당·마이리얼트립 등의 다수 사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무(대주주 지분제한, 이익의 공익적 재투자 등)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유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규모 있는 청년 소셜벤처들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은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공유경제의 상업화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II. 사회적경제 기업의 가치 창출 성장

이들 사회적경제 기업이 만들어 낸 핵심적인 경제적 가치를 매출과 고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연매출 약 1조 4,600억 원(기업 당 매출 7억 4,500만 원), 총 고용 약 17,900명(기업 당 고용 9.1명)으로 나타난다. 최근 7년 내 창업한 서울 시내 일반 기업체들과 비교해 본다면 일반 기업의 기업 당 평균 매출 36억 1,028만 원의 21%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회적경제의 기업 당 평균 고용률은 일반기업의 기업 당 평균 고용률 9.8명의 93% 수준에 이른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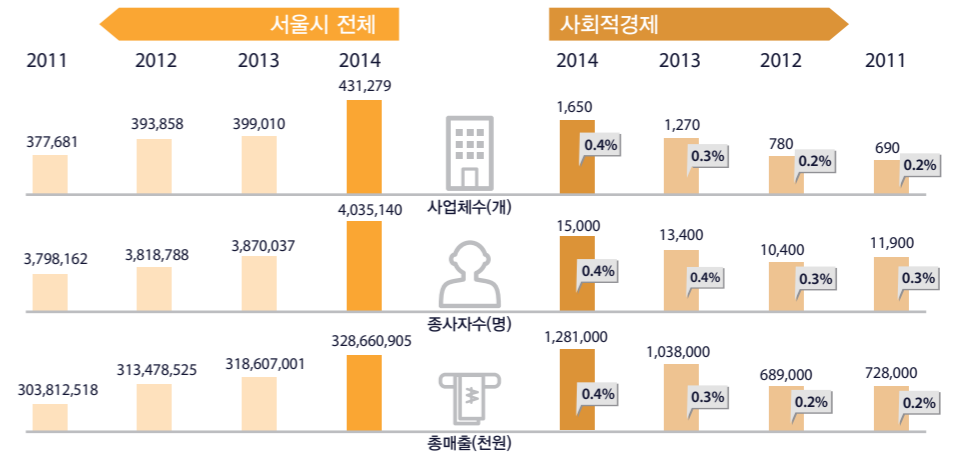
〈그림9〉 2015년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가치 창출 개요



13) 중소기업청 (2016. 5)

2014년 말 서울시 전체 경제 규모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중을 분석해보면, 서울시 GRDP의 0.4%, 지역고용 기여도 0.4% 수준을 보인다.¹⁴⁾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경제 비중을 2020년까지 GRDP의 1.5%, 전체 고용의 4%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말까지는 GRDP의 0.3%, 전체 고용의 1.6%를 달성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매출 비중은 목표를 달성한 반면 고용률 목표는 현저히 떨어져 분발이 요구된다.

〈그림10〉 서울시 경제지표 대비 사회적경제 기여도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성과는 170여년의 사회적경제 역사를 가진 캐나다 퀘벡주와 비교해 보아도 손색이 없다. 2014년 말 인구 9백만 명의 퀘벡주에는 7천여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 고용의 4%(15만 명)를 책임지고 있으며, 이중 절반에 달하는 협동조합의 연매출은 3,340만 달러(368억 5,690만원)¹⁵⁾에 이른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영리기업보다 두 배 이상의 높은 생존율¹⁶⁾을 보이고 있어 후발 주자인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도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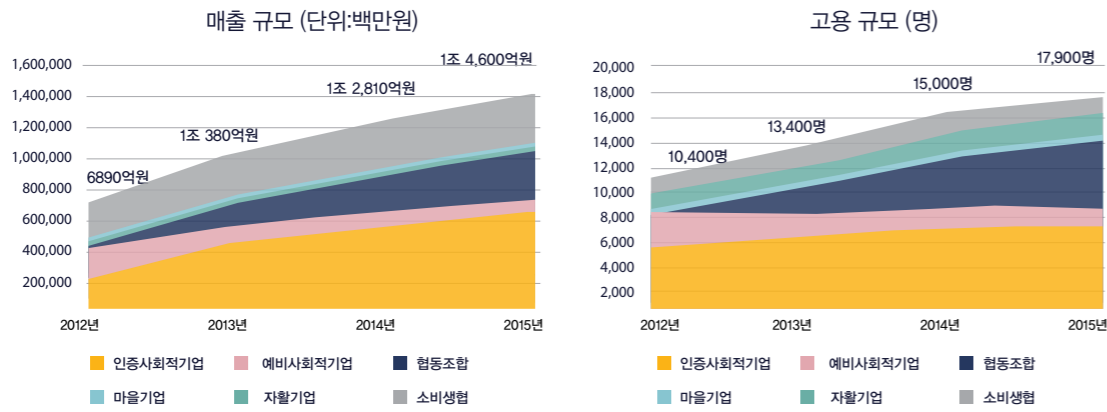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업체 수의 양적 증가와 함께 기업 당 평균 매출과 고용 창출 면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평균 실제 운영률 64%를 적용하여 2012년과 2015년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과를 비교·분석해보면 매출은 2012년 대비 112%, 고용은 2012년 대비 72%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14) 통계청(2015), 고용노동부(2015)

15) 퀘벡주 경제혁신수출부(2016): 퀘벡의 사회적경제 생존율

16) 창업 5년 후 생존율: 사회적경제기업 62%, 영리기업 35%, 10년 후: 사회적경제기업 44%, 영리기업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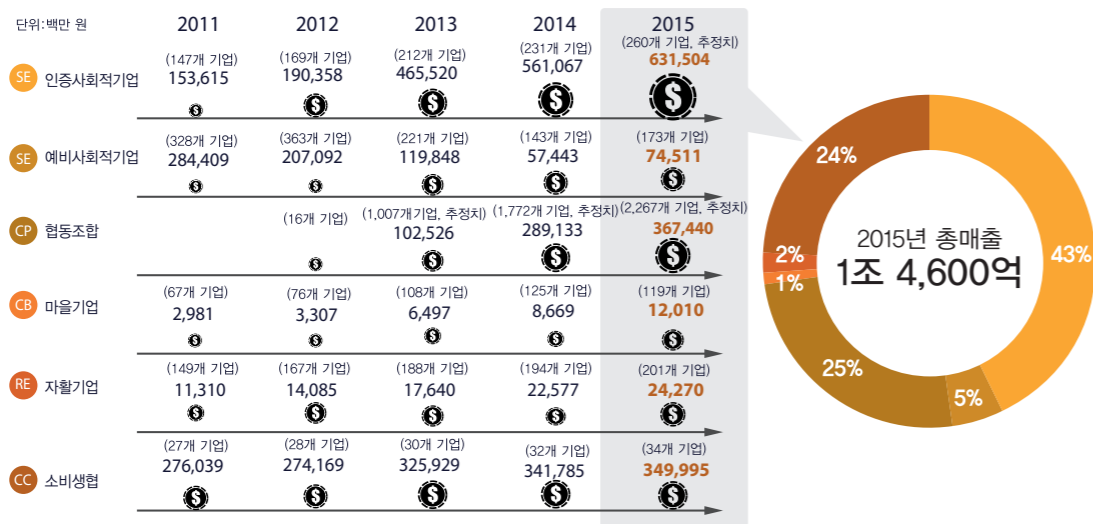
〈그림11〉 서울시 사회적경제 주체별 매출과 고용 규모



자료: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각 기관 보고서 및 자료를 근거로 추정하여 가공(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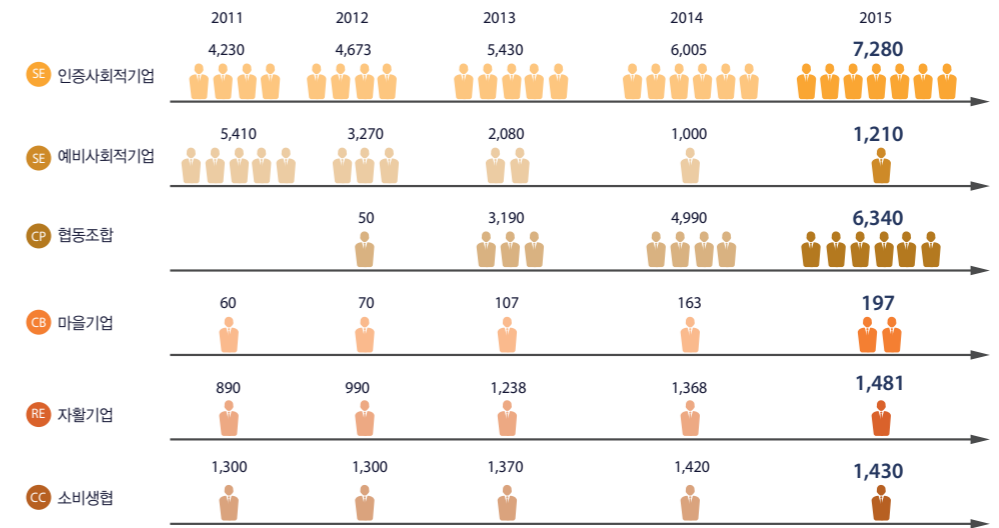
2015년 총매출의 성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이 전체의 약 48%를 차지하고 (기업 당 평균 매출액 16억 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중이 약 24%(기업 당 평균 103억 원), 이어서 신생 협동조합 비중이 약 25%(기업 당 평균 3억 원)로 나타나 부문별 기업 간 격차가 매우 큰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자활기업의 매출은 전체의 2%(기업 당 평균 1.3억 원)로 매출 규모는 작지만 생계비 수입자들의 자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12〉 서울시 사회적경제 매출 성장도



고용창출력에서도 부문별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총고용의 46.5%(8,090명, 기업당 평균 18.3명)를 차지하고,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신생 협동조합이 36.4%(7,120명, 기업당 평균 5.2명), 역사가 가장 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8.2%(1,430명, 기업당 평균 4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고용 기여도가 높은 것은 취약계층의 노동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이 다수이고,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업 활동을 통해 62%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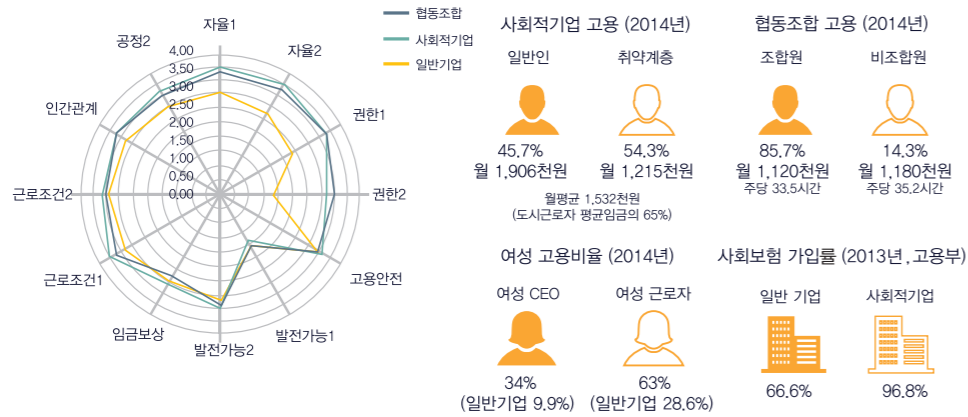
〈그림13〉 서울시 사회적경제 고용창출 규모



고용의 양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 사회보험 가입, 의사결정과정 등의 고용의 질을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사회적기업의 임금 수준은 서울 도시 근로자 평균 급여(월 235만원)의 65% 수준을 보인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전 소득이나 동종업종 영리기업 급여와 대비해 120%가 향상되었다. 사회보험 가입률에 있어서도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고루 가입되어 있어 높은 근로조건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2015)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주관적 고용의 질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임금과 사회보험 등의 근로조건 외에 자율과 권한, 민주적 운영과 협력 문화, 공정성 지표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의 만족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업 문화와 가치 등이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4〉 사회적경제 기업의 고용의 질



한국노동연구원(2015)의 분석 결과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2014)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4월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기업을 상대로 표본 및 전수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임금

구분	평균 고용(명)	최저 월급여(원)	최고 월급여(원)	응답기업수/조사표본수
사회적기업	17	1,023,189	2,053,842	157 / 165
협동조합	5	1,295,711	2,048,384	96 / 202
마을기업	3	1,103,921	1,762,394	36 / 45

자료: 2014 서울시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보고서(서울시, 2016) (N=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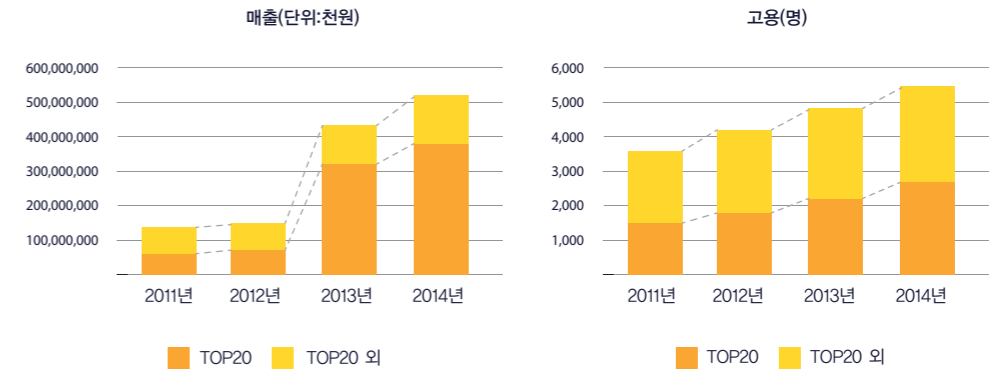
자활기업은 최저임금액 수준이 100만원 미만인 업체가 27개(64.3%)로 타 사회적경제조직보다 월평균 임금액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월평균 최저임금액 분포를 보면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인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차이가 가장 큰 유형은 사회적기업이다¹⁷⁾.

2014년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볼 때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 과정에서 매출과 고용 규모 모두에 있어 상위 기업들의 비중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상위 20대기업의 기여도는 2012년과 2015년을 비교 시 고용기여도가 40%에서 47%로, 매출기여도는 46%에서 74%로 급증함을 볼 수 있다.

17) 서울시 사회적경제과(2016)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고용 창출력은 창업기보다는 매출 발생 이후 성장기에 급증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며, 충성도 높은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취약 계층을 위한 노동통합 인건비를 지원하고, 소규모 신생 기업들에 경영지원 및 사업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

〈그림15〉 서울시 상위 20대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



〈표7〉 상위 20대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2014년 기준)

순위	기업명	매출(억원)	고용(명)
1	행복나래	2,220	151
2	아름다운가게	230	413
3	정립전자	194	160
4	한화비앤비	156	206
5	그린주의	125	44
6	레드스톤시스템	124	45
7	푸른환경코리아	100	394
8	동연디자인	92	26
9	다솜이재단	77	430
10	리드릭	66	73

	기업명	매출(억원)	고용(명)
11	청밀	63	35
12	늘푸름보호작업장	62	42
13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	59	274
14	재단법인행복한학교재단	41	38
15	동천	33	69
16	복지유니온	37	24
17	사람마중	34	56
18	한국이에이피협회	33	56
19	장애인노동진흥회	30	34
20	한국장애인문인복지후원회	27	32

* 정책보고를 위해 집계된 자료이므로, 활용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연락 요망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사회적 기업이 전국 전체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22.5%에서 2014년 18.3%로 감소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공급과 매출 기여도에 있어서는 2년 사이 각각 42.1%에서 44.7%, 28.6%에서 37.1%로 증가하고 있어 서울시 성장기 사회적기업들의 가치창출 효과가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역시 2012년 25억 원에서 2014년 약 148억 원으로 증가하여 사회적기업의 사명과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매출비중은 2012년 49%에서 2014년 30%로 대폭 감소되어 기업들의 공공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립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8〉 서울시 소재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구분	2012년			2014년		
	전국	서울시	서울시 공헌율	전국	서울시	서울시 공헌율
인증 사회적기업(개)	751	169	22.5%	1,228	225	18.3%
사회서비스 수혜자(천명)	18,467	7,781	42.1%	16,045	7,169	44.7%
총 매출(백만원)	661,985	189,232	28.6%	1,465,156	544,065	37.1%
공공시장 매출비중 ¹⁸⁾	40%	49%	N/A	36%	30%	N/A
유급 근로자(명)	18,297	4,673	25.5%	28,201	6,005	21.3%
취약계층 유급근로자(명)	11,091	2,677	24.1%	17,009	3,261	19.2%
유급근로자 평균임금(천원)	1,246	1,408		1,362	1,532	
취약계층 평균임금(천원)	1,058	1,080		1,170	1,215	
사회적목적 재투자(백만원)	28,600	2,500		71,539	14,815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2, 2014)

18) 공공시장 매출 비중: 전국과 서울의 총매출액 중 공공시장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계산

4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5년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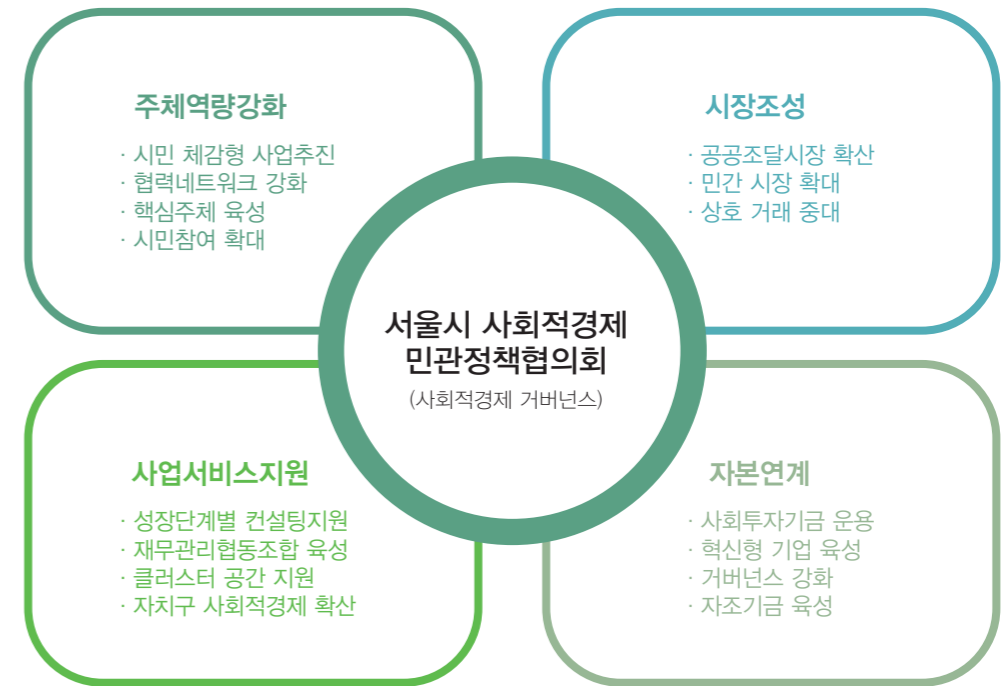
서울시는 복지·기술연구개발·교육·금융 등의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를 모델로 '사업서비스 지원', '시장형성', '인력양성과 연구', '사회적금융의 확대'라는 전략을 통해 사회적경제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본 장에서는 이런 서울시의 구체적 노력들이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화 측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공공재정 효율성, 사회성과지수, 행복지수 등의 세 가지 관점에서 측정해본다.

그 결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지원체 등이 육성되었으며 지역별로 사회적경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성화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자원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면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축소되고 사업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지원금 대비 사회서비스 가치창출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는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자본을 증가시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1.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측면의 성과

서울 시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체를 발굴하고 규모화를 돕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시는 혁신형 사업공모 외에도 업종별 간담회·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의 기획 과정과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서울 시민들의 생활 문제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 사회적경제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 업종을 선정·분류하고 업종 간의 협업사업을 촉진해 왔다. 사회주택 건설 및 공동관리, 공익보육시설의 확충, 지역 노인 종합돌봄서비스 등에서 사업모델 혁신과 협업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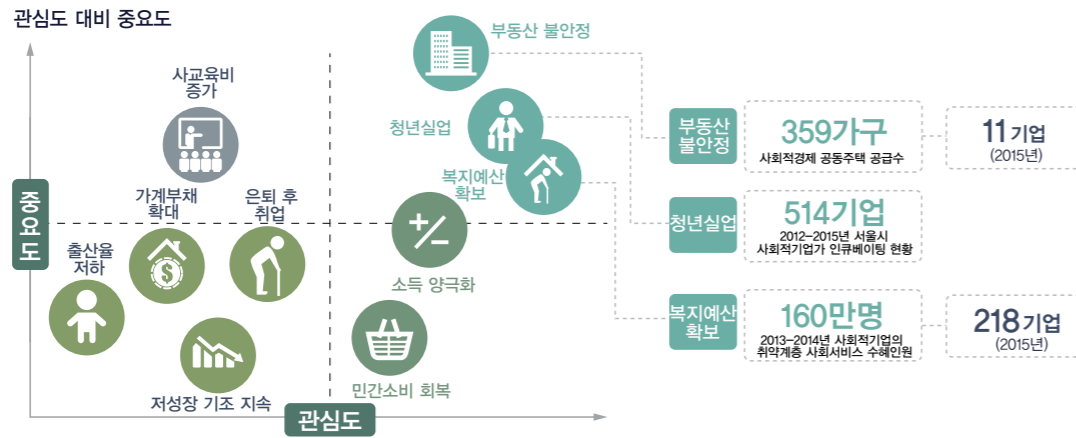
01. 주체역량강화

01 시민체감형 사업 추진

서울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2015년 서울시민들이 생각하는 주요 경제이슈”에 따르면 주거·청년실업 해소·복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⁹⁾ 이런 서울시민의 핵심 이슈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생활재 생산 공급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거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주택협회를 만들기 이전부터 359가구에 대한 공동체주택 건설관리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서울 사회적경제의 10% 달하는 보건복지 분야 기업들은 연간 10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 서울인포그래픽스 115호, 서울연구원(2014. 12)

〈그림17〉 서울시민의 핵심 생활의제에 대한 사회적경제 기여도



출처: 서울연구원(2014.12)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기여도 조사 편집(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 공동체 주택 건설관리 서비스

대도시 시민들의 가장 큰 생활문제인 주거 분야의 경우, 2015년 서울시의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이 35% 수준으로 전국 평균 20.3%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2012년 25.5% 대비 약 10% 가까이 증가했다.²⁰⁾ 이에 따라 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늘어났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기존의 빈집이나 낮은 가격의 노후주택을 발굴·활용하여 청년 및 주거약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전용공간(방)을 제외한 공용공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필요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유주택 등의 공동체주택 359가구를 건설·임대·관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 5월 (사)사회주택협회를 창립하여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목표를 수립하였다²¹⁾. 이 과정에서 민간임대주택의 15%인 3천호를 사회적경제 방식의 공동체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SH공사, 생활협동조합 등과 공동으로 공동체 주택의 보급·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주거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고 있다.

20) 국토교통부 통계누리(2015. 4)
21) 서울시 주택정책과 자료 참조(2015)

〈그림18〉 서울시 사회적경제 사회주택분야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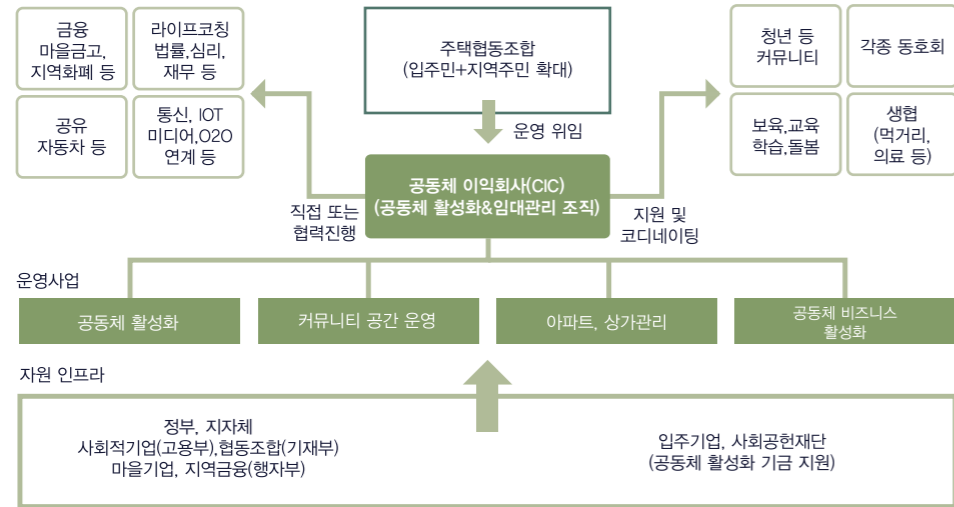
정책목표 (임대주택 8만호)	공공임대 (75%)	민간임대 (25%)		
핵심정책	공동체주택 (15%)	규제완화 (15%)	준공공임대 (10%)	민간임대 공공성강화 (60%)
세부유형	토지임대부 (매입임대/비매각부지)	빈집 리모델링 (자금 융자)	민간임대지원 (중개수수료인하)	
지원 전략	주체	공급주체 발굴/ 사업정보 공유		
	기술	공동체주택 공급역량 강화		
	규모화	사회주택 사회적경제 협회 설립, 컨소시엄 활성화		
추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주택정책과와 협조, 공동체주택포럼 (15.2~12) · 사회적경제 생활패키지형 주거 공급모델 제안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내에 사회주택기금 추가 조성 · 사회적경제 임대관리협동조합 모델 개발, 보급 · 민간임대주택 중 공동체주택 건설, 보급 			

서울시는 자본조달 지원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에 사회주택 건설기금을 추가로 출연하고, 소셜하우징 용자사업을 통해 총 7채의 공동체주택을 건설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동체주택 공급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서울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주도의 '협동조합형 뉴스테이²²⁾ 모델'을 기획하여 향후 500세대에 달하는 다양한 계층들의 안정적인 주거 제공은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재를 입주민들이 설립한 사회적경제를 통해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직주근접(職住近接) 일자리도 통합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사업을 추진 중이다.

22) 뉴스테이: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에 도입한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임주자에게 최소 8년의 거주기간과 연 5% 이하의 임대료 상승률을 보장한다. 사업자에게는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공급과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그림19〉 서울시 사회주택 사회적경제 우수 사업 모델



— 돌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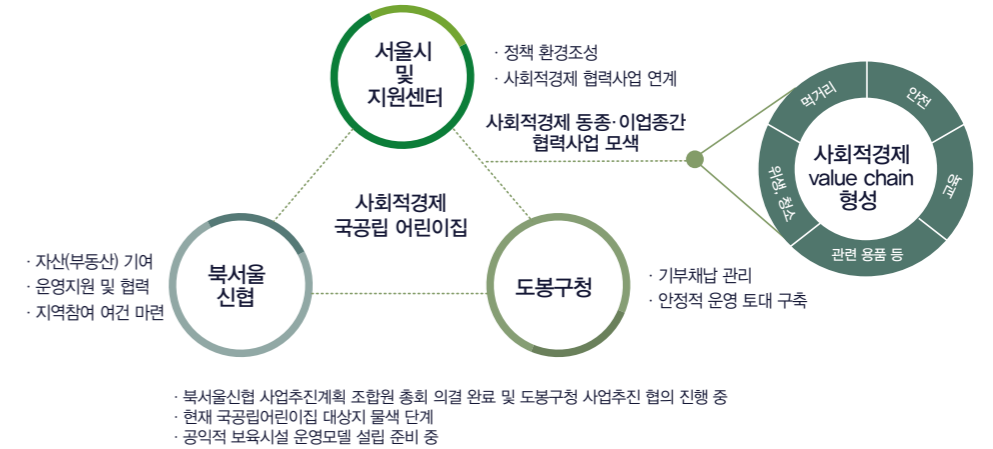
아동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및 사고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공공의 관리책임과 부모참여 경영이 가능한 국공립 보육시설 등 돌봄 분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났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확충 계획인 국공립어린이집 1,000곳 중 10%에 해당하는 100곳을 사회적경제와 협력하여 설립, 위탁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3월 발표하였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에 아이돌봄 분과를 설치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돌봄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공공어린이집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살림 서울과 행복중심동북생협은 강동구와 노원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로 각각 수탁 받아 운영 중이며, 북서울신용협동조합 등에서는 신협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제공하고 시민과 공공이 협력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 모델인 ‘서울형 카라박 프로젝트²³⁾’로 돌봄사업을 추진 중이다.

23) 카라박 프로젝트: 이탈리아 볼로냐 시정부와 지역의 협동조합 카디아(CADIA)가 민관 연대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돌봄 사업. 보육시설을 설립하여 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요자들에게는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이다.

〈그림20〉 서울시 한국형 카라박 프로젝트 모델

지역 신협의 자산 출연을 통한 사회적경제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및 운영



02 사회적경제 핵심주체 인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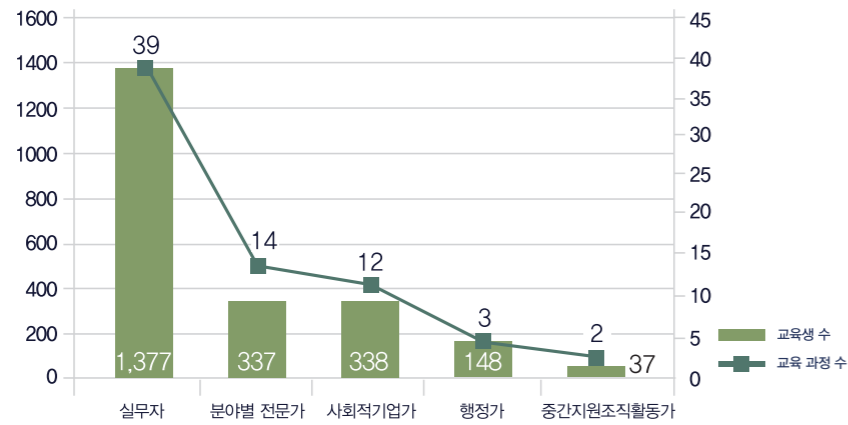
— 인재육성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형 인재양성이 필수적이다. 인재양성은 특성상 단기간에 효과를 얻기가 어렵고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사회적경제형 인재는 비즈니스적 관점 외에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주적 조직 운영을 해야 하는 등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로운 분야라 할 수 있다. 2013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앞으로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인재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기획단’을 구성하고 인재육성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인재육성 로드맵을 통해 사회적경제 직군을 5개 역량모델(사회적기업가, 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행정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로 구분하고 역량모델별 액션러닝(action learning)²⁴⁾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였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기본 역량 및 실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교육생 간의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17억 4천여만 원의 교육훈련 예산을 투입하여, 총 86개 교육과정, 4,452명이 교육 참여하였으며, 5개 역량모델별 교육과정으로는 총 42개 교육과정, 2,237명이 교육을 참여하였다.

24) 액션러닝(action learning): 영국의 레번스(Revens) 교수가 개발한 팀 학습 훈련법. 과제 해결을 위해 모인 구성원들이 실제 과제를 해결하거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질문과 성찰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프로세스.

〈그림21〉 5개 역량모델별 교육과정 및 수료현황(2013~2015)



2016년 8월 초 실시한 수료생 추적조사 결과, 수료생의 88%가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계속 종사 중이며, 사회적경제 영역에 종사하지 않았던 수료생 중 31%가 교육 이후 취업·창업 형태로 신규 진입하였다. 또한 수료 이후 “향후 사회적경제 영역에 진입을 희망하게 되었다”는 비율도 50%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온라인 플랫폼(academy.sehub.net)을 구축하여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교육 정보 964건, 강사 정보 21건, 교육 자료 379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재양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정보 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교육과정을 주체별, 분야별, 단계별로 범주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교육과정, 강사, 수료생 등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9〉 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온라인 플랫폼 사업 안내

인재양성 플랫폼	운영 목표	세부 추진 계획
	교육 공급 역량 강화	서울시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공유 - 교육 과정 중복 및 누락 해소 - 교육 검색 - 수강신청/관리 시스템 운영 - 교육 과정 개설 경향 등 지속적 분석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
	사회적경제 인재풀구축	강사, 인재, 구인/구직 정보 공유 - 다양한 커리큘럼의 강사풀 구축 - 프로보노, 영리분야 이직 희망자, 사회 초년생 등 사회적경제 분야 진입 희망자 풀 구축 - 사회적경제 분야 구인/구직 정보 제공을 통한 취업연계 지원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지원	사회적경제 현장 수요 반영 커리큘럼 개발 지원 - 교육과정 공모 및 시범 교육 진행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	정보 공유 및 교류 촉진 - 교육 주제 간 소통과 네트워킹 강화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 시민이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혁신 주체를 발굴·육성하고자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2년 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 4회 대회까지 4년간 온라인 플랫폼(www.wikiseoul.com)을 기반으로 1,845건의 시민 아이디어가 등록되었고, 166개의 실행팀을 선정·지원하였다. 실행팀을 선정하고 아이디어를 실행하기까지 혁신주체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대상 행사 및 캠페인, 주요 언론 및 SNS 노출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공개하여 시민과의 사회적경제의 접점을 마련하고 홍보 효과를 높였다.

또한 서울시 청년창업센터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소셜벤처 경연대회 등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정책 등과 연계하였으며, 2015년 12월에는 10개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하고 글로벌 사회혁신재단(사)아소카 한국과 함께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표10〉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정책화 및 창업률

구분	2012년 (사업비)	2013년 (사업비 4.8억)	2014년 (사업비 1.9억)	2015년 (사업비 2.2억)	합계 (사업비 8.9억)
실행팀	42팀	47팀	30팀	47팀	166팀
정책 연계	11건	8건	1건	10건	30건
창업	17팀	7팀	9팀	15팀	48팀

로컬의 삶을 여행하다,
크리에이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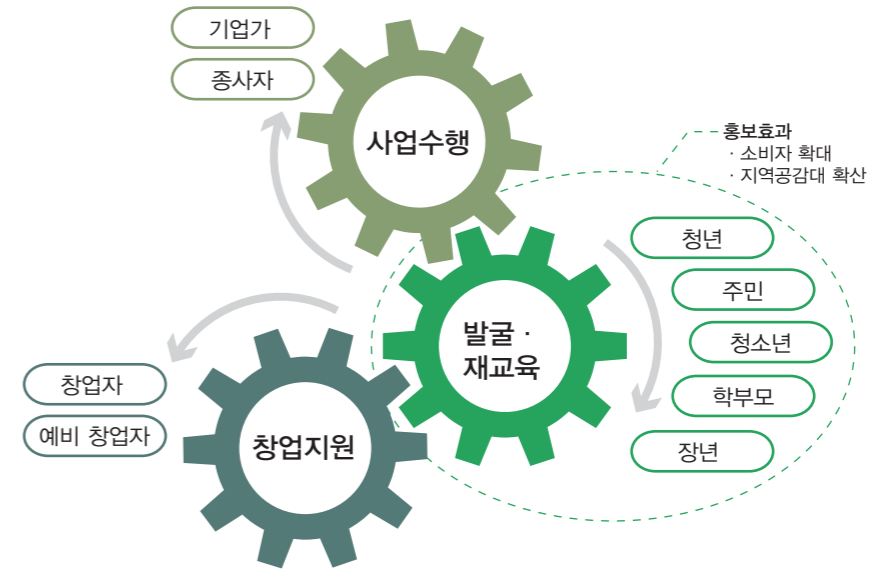


크리에이티브는 2015년 위키서울 실행팀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이 방문하는 장소는 주로 프랜차이즈 상점이 많은 대형 쇼핑몰이나 널리 이름이 알려진 명소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로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관광코스가千篇一律적이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재방문 의사는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크리에이티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여행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로컬 여행코스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위키서울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현한 크리에이티브는 2015년 12월 제10회 아시아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2016년 2월 (주)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로부터 투자를 유치, 2016년 4월 1일에는 대만의 저비용 항공사 '브이에어'와 부산여행 마케팅 제휴를 맺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혁신활동가와 청년창업팀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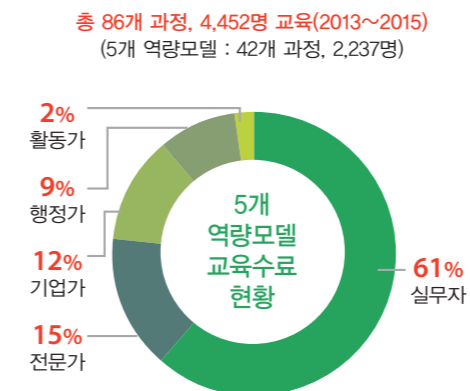
지식 산업 위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경기침체 악화에 따라 20대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환경에서 청년층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채로운 고용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 해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더불어 사회적경제 영역의 일자리 수요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의 직군을 개발하고 현장 중심의 훈련과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사회적경제의 예비 주체를 육성하게 되었다.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 거주 청년실업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뉴딜 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분야 참여사업장과 참여자를 선발하고, 사회적경제 기본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다양한 공동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기관을 통해 514개의 청년창업팀을 육성하였다.

〈그림22〉 다양한 주체 발굴 및 양성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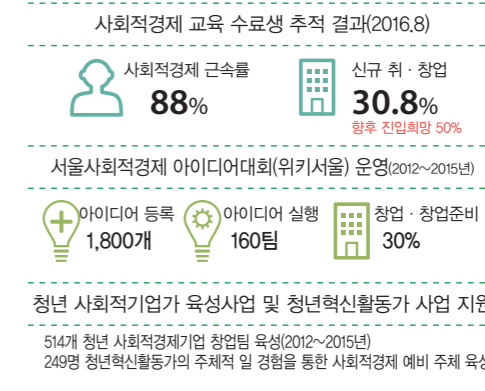


〈그림23〉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 지원

인재육성 로드맵 기반
5개 역량모델 교육과정 운영



사회적경제 다양한 분야
주체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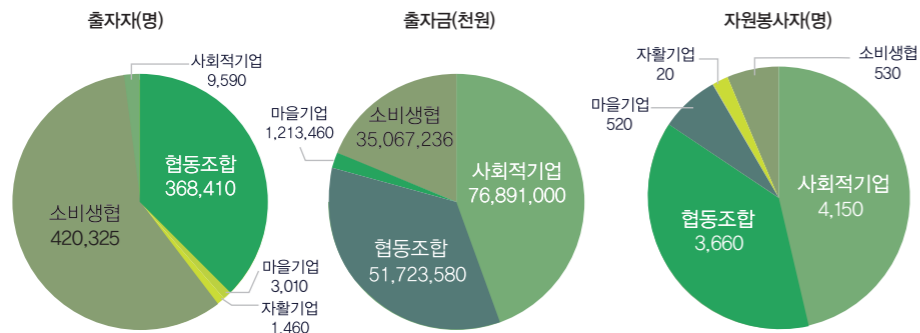


03 협동기반조성

■ 시민참여 확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민 참여도를 2015년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소비자생협 등의 연구보고서 및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살펴보면, 2015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출자자는 80만2천8백 명, 총 출자금은 325억여 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24〉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민 참여도(2015년 기준)



*기재부, 고용노동부, 소비자생협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2015년 기준 사회적경제 조직의 각 주체별 출자자, 출자금, 자원봉사자를 살펴보면 출자자와 출자금에 있어 소비자생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11년 이후 연평균 6%씩 꾸준히 성장하여 2015년 말 조합원 가입 세대가 약 41만에 이르며 이는 서울시 전체 363만 가구의 약 11%를 차지한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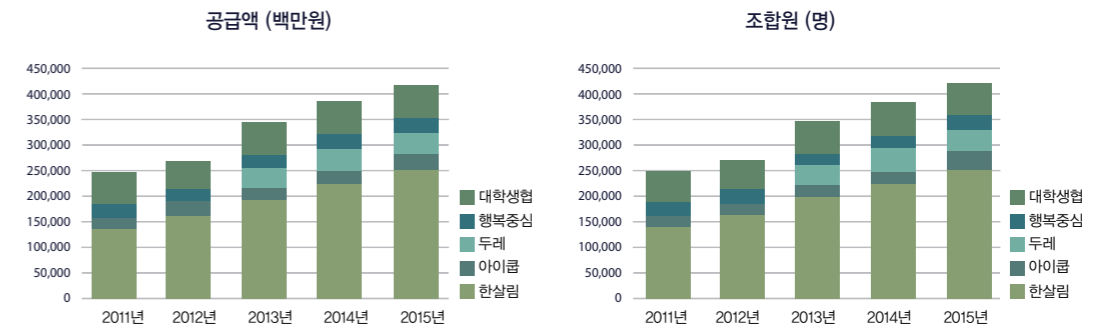
〈표11〉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2015년 말 기준)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생협	전체
출자자(명)	9,590	368,410	3,010	1,460	420,325	802,800
출자금(천원)	76,891,000	51,723,580	1,213,460		35,067,236	164,895,276
자원봉사자	4,150	3,660	520	20	530	8,900
매출액	706,015	367,440	12,011	24,270	346,598	347,707,608

자료: 서울시(2016), 사회적기업진흥원(2015) 등을 바탕으로 추산 및 집계. 소비자생협의 경우 각 생협 자료 참고.

소비생협의 경우 조합원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매출액이 다소 하락한 것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25〉 서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민 참여도



〈표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성장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성장률
공급액(백만원)	266,960	270,629	329,470	350,862	347,072	7%
출자금(백만원)	20,246	23,716	27,231	31,171	35,388	15%
조합원(명)	282,353	303,647	342,660	379,066	451,395	12.75%
직원(명)	1,218	1,277	1,405	1,556	2,027	14.0%
단위생협(개)	27	28	30	32	34	5.9%

한편,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는 약 8,900여 명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원봉사자 비중이 타 조직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 고용인원 대비 지역주민의 근로자 비중은 자활기업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기업이 23.1%로 전체 지역주민 근로자 비중 31.8%에 비해 가장 낮았다. 연간 약 170억여 원이 사회적 목적으로 지역사회에 재투자²⁵⁾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취약계층 및 지역민의 고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재투자 등을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로 보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고용영향평가 연구'(한국노동연구원, 2016), 서울시사회적경제실태조사(2016)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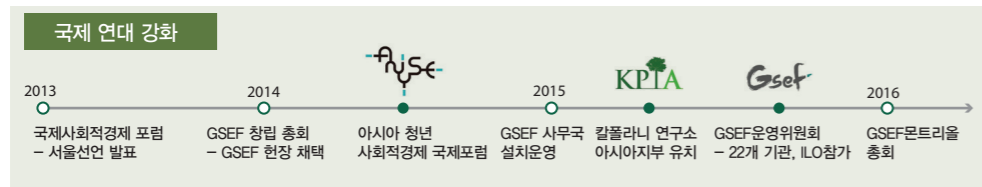
■ 국제연대 강화

2013년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정책에 관심을 가진 주요 도시정부와 현장네트워크 조직 간의 국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에 2013년 11월 서울에서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2013)**을 열고 전 세계가 직면한 사회와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사회적경제 국제 연대의 필요성과 각 도시 간의 성과 공유 등의 구체적 협력을 약속한 **‘서울선언문’**을 결의하였다.

서울선언문에 근거하여 2014년에 창립총회(GSEF 2014)를 열고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부문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사회적경제포럼 (GSEF: Global Social Economy Forum)을 발족하였다.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맡아 사무국을 유치하였으며, 23개 지방도시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회원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원 기관 간 교류 및 교육, 정책 모범사례 확산, 연구, 사회적경제의 의제화를 위한 옹호활동** 등이 있다.

2013 GSEF 이후 사회적경제의 국제교류와 연대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서울시가 후원하는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ANYSE: Asia Network for Young Social Entrepreneurs)을 매년 개최하여 지역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들의 경험을 나누는 플랫폼을 마련했으며, 2015년에는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 지부**를 유치, 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하여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사상들을 연구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그림26〉 국제 연대 강화 노력



지난 9월에는 GSEF 제2차 총회가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어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을 주제로 62개국 330개 도시에서 50여명의 시장단을 포함한 1,800여 명이 참가했다.

GSEF 의장도시 리더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세계적 경제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적경제를 강조**했으며, 사회적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시민의 참여를 통해 협동, 연대, 평등의 가치를 되살리는 운동이며 **행진임을 강조**했다. GSEF 설립을 주도한 **서울시는 2018년까지 의장도시를 연임**하게 되었으며 스페인 빌바오시가 차기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드니 코데르 몬트리올 시장, 마리아 우바레체나 몬드라곤 시장과 국제지식 전수센터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제지식전수센터는 세계 각국의 사회적경제 모범 사례와 관련 지식을 확산하고 지방정부-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GSEF의 실행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 2차 총회 성과를 집약한 **‘2016 몬트리올 선언문’**은 협동조합, 공동체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개발, 경제와 사회도시 발전과정과 운영 등에 두루 참여하는 경제개발 모델로서의 **‘사회연대경제’**를 제시하였으며, 지역과 성향을 뛰어넘은 경제적 연대를 이루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GSEF 의장도시 서울이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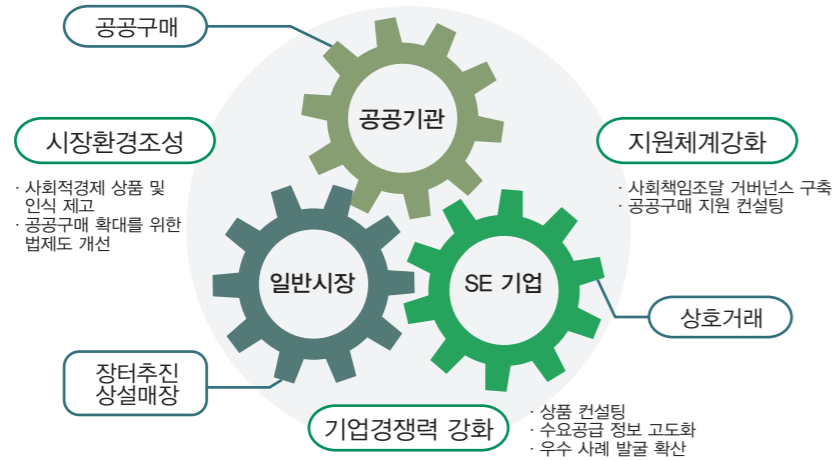
〈그림27〉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



02. 시장조성

비영리 단체나 공익 활동 조직과 달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판로는 기업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사회적경제는 일반 민간시장뿐만 아니라 보호된 시장으로서의 공공구매 시장 역시 매출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 내 협동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거래 시장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모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이루기 위한 시장조성을 위해 공공시장, 민간시장, 상호거래 등의 세 영역의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림28〉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전략



01 공공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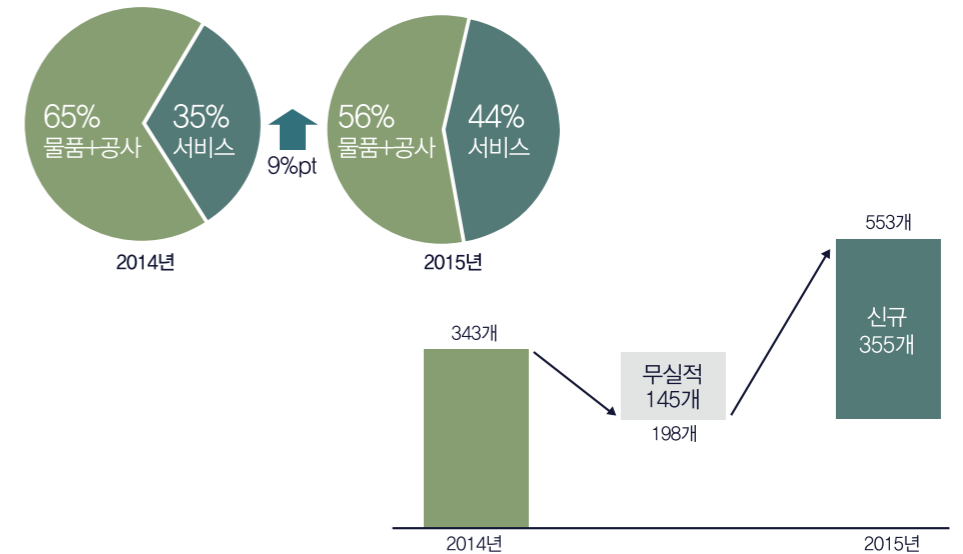
서울시는 7조원 대에 달하는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왔으며 구청과 교육청, 사회적경제 협의체 등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책임조달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였다(2015년 11월).

또한, 사회적책임조달의 확대를 위한 제도와 조례를 마련하여 2013년에는 ‘계약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가산점 제도를 확대하여 신설하고, 2014년에는 『서울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서울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서울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의 마련으로 공공조달에 신규로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참여기업의 평균 매출도 2년 새 132%로 신장되었다²⁶⁾. 조달 품목 역시 장애인 배려 물품 중심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까지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용역) 비중이 2014년 35%에서 2015년 44%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6)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영단, 2016,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자료(2016)

〈그림29〉 서울시 공공조달 중 사회적경제 참여도 변화



자료: 서울시 공공구매 보고서와 경영공시 자료를 통합 분석(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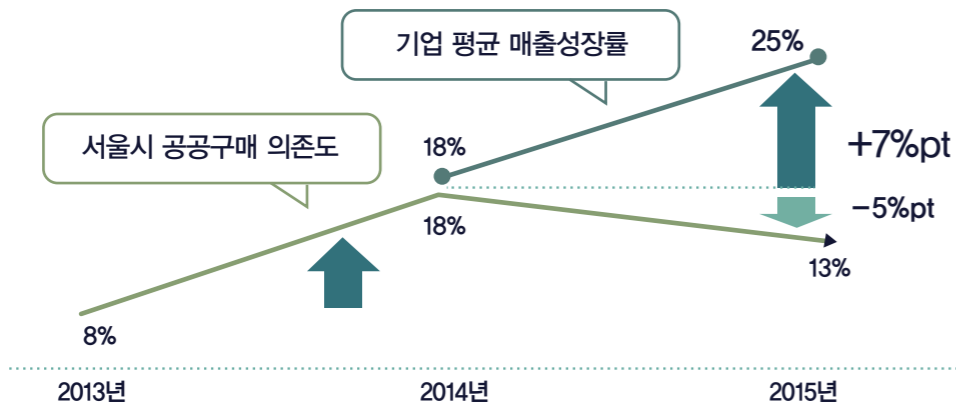
서비스(용역) 분야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에 있어서 참여하는 기업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구매 금액 정도가 영세하여 지속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전체 940개 기업 중 상위 50개사가 전체 공공구매 비중의 60%를 맡고 있으며, 상위 112개가 80%를 담당하고 있어 기업 간 편차가 심한 형편이다.

전체 품목에서 전통적인 배려 구매 품목인 인쇄·출판, 시설관리, 의류, 쓰레기봉투, 건물청소 등의 비중은 2014년 40% 수준에서 2015년 33%로 7% 가량 축소하였고, 상대적으로 문화, 예술, 교육, 행사 등의 기타서비스 분야²⁷⁾ 비중이 높아졌다.

공공조달에 참여한 기업은 2014년 343개에서 2015년 553개로 증가하였고 그 중 355개가 신규기업으로 전체의 64%에 이른다. 2년 연속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98개이며 145개 기업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신규기업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공공조달 시장이 신규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과 판로개척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7) 기타서비스 영역은 문화, 예술, 교육, 행사서비스 등이 혼재되어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음.

〈그림30〉 서울시 사회적기업 매출 성장률 및 공공조달 비중도 변화



자율 경영공시에 참여한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 20개소의 지난 3년 매출 성장률 및 공공매출 비중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²⁸⁾, 2015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의 매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공공조달 매출은 5% 감소하고 일반 시장 매출이 7% 높아졌다. 서울시의 공공시장 구매 금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2014년 공공시장의 구매 증대가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로 이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공공 조달 매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업이 자립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공공시장이 사회적기업의 테스트마켓으로서 시장개척에 긍정적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02 민간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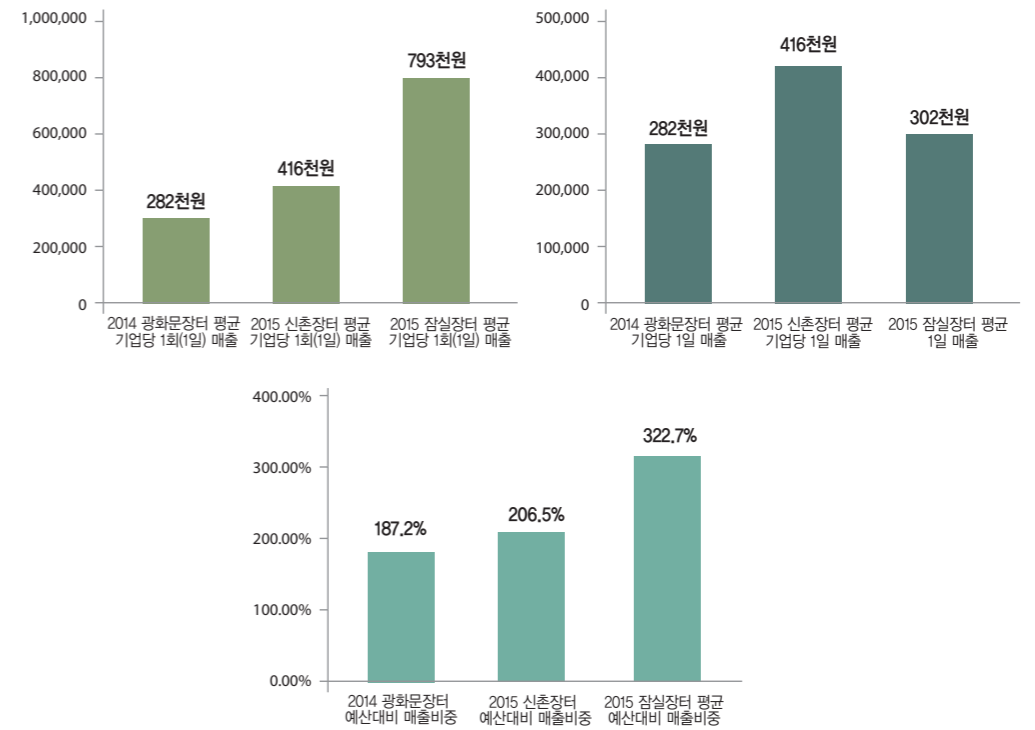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장터

서울시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품 및 활동을 알리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사회적경제장터 사업을 기획·추진하였다. 초창기 및 진입기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매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대안유통채널을 확보하여 실질적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이다.

대규모 상설 장터뿐만 아니라 소규모 이동형 장터, 팝업스토어 등을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15회 운영하여 121~142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자치구 단위로도 사회적경제 장터를 기획하여 학교 및 각 지역에서 특색 있는 장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회적경제 주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를 창출했다.

28)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공구매영업단, 2016,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자료(2016)

〈그림31〉 2014~2015년 사회적경제 상설장터 성과



〈표13〉 2014~2015년 도시형 기획장터 성과

구 분	개최수(일수)	참여 기업수	매출액(A)	운영경비(B)	경비대비 매출율(A/B)
계	42회(64일)	1,250개	600,677	148,070	406%
광화문광장	17회(17일)	389개	109,635	58,900	187%
청계광장	4회(13일)	293개	182,099	28,840	631%
덕수궁길	5회(13일)	226개	218,785	비예산	-
서울대공원	5회(10일)	112개	68,482	27,000	254%
어린이대공원	4회(4일)	46개	8,460	12,120	70%
혁신파크	7회(7일)	184개	13,216	21,210	62%

*단위(천원)

■ 희망상단 MD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구조의 이해를 돕는 컨설팅과 홈쇼핑, 마트, 소셜커머스, 국내외 온라인 마켓, 백화점 등의 유통채널 입점을 지원하는 희망상단 MD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 기업 19개와 유통바이어 및 전문가 18명이 참가하여 상담과 매칭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유통 시장 및 상품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03 협동경제 시스템 구축 : 상호거래

협동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사회적경제 시장의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상호거래이다. 사회적경제 기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그룹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소비자가 되어준다면 소셜미션 달성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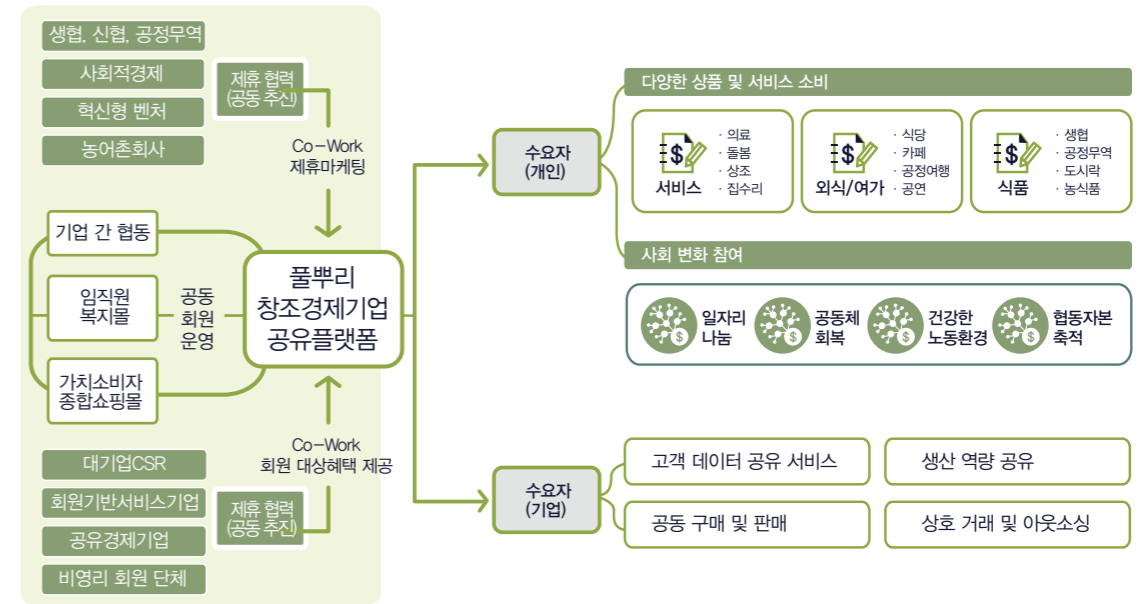
서울시는 2014년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추진단을 발족하고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4대 생협 등을 중심으로 공동사업 및 협력 기반 조성하고 협력적 유통 판매 사업을 추진했다. 상호거래 '소셜마켓'을 8개월간 34회 운영하여 생협, 아름다운가게에 입점된 사회적경제 제품을 타 생협 조직으로 확대 공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상호거래 DB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상호협력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도 점차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부문협의체 회원 조직화율도 점차 확대되어 2013년 5.4%에 그쳤던 참여율이 2016년 6월 기준으로 약 10배 증가하여 사회적기업 29%, 협동조합 14%, 마을기업 30%, 자활기업 29%가 참여하고 있다. 회비를 통한 운영 자립률도 2015년 결산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34%, 협동조합 74%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사업연합 방식인 업종협의체의 경우 업사이클 디자인, 공정무역, 공정여행, 노동자협동조합, 윤리적패션, 사회주택 등 10개의 업종협의체가 형성되어 사업적 연대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이러한 협동화의 기초를 확대하여 업종 기반의 협업사업 지원 비중을 더욱 넓힐 계획이며, 기업들 간의 부족한 자산과 정보, 소비자망도 공유할 수 있는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려 한다.

〈그림32〉 서울시 사회적경제 사업기반 공유플랫폼 구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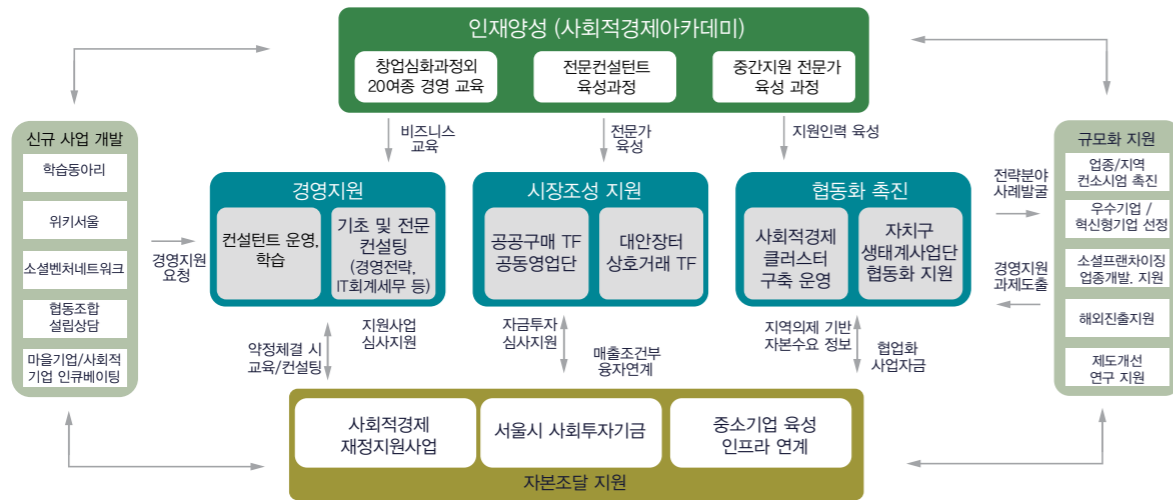


03. 사업서비스 지원

01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 개발 개시

서울시는 창업기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사업들을 2012년부터는 기업의 생애주기별로 적합한 지원방안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해 왔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단기간 운영하며 구체적인 창업 준비로 나아가는 시민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동종업종 선배기업가를 통한 피어컨설팅, 검증된 사업모델의 확산을 위한 소셜프랜차이즈형 사업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방문하는 국내외 39개국 44개 도시, 연 평균 1,197명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에도 제도 개선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33)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 경영컨설팅 지원

2012년부터 매년 3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및 홍보마케팅 컨설팅·회계대행 서비스 지원·법률지원·IT 기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다. 다수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구축·사업전략·고객 창출 등의 경영전략분야의 컨설팅을 필요로 했고, 전문컨설턴트와 전문분야 관련 주체들이 함께 이를 지원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기업은 총 348개이며, 이 중 '컨설팅 성과 분석 및 분석연구' 설문에 응답한 수진기업 81개를 대상으로 컨설팅 이후 2년간의 경영실적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출 29%, 고용창출 49%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표14) 경영 컨설팅 수진기업 성장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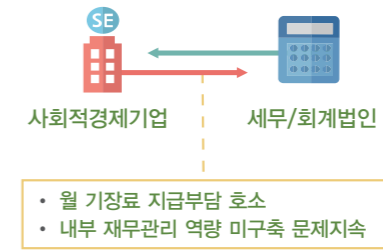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성장률
평균 유급 근로자(명)	10.6	15.7	48%
평균 연매출(백만원)	271	350	29%

경영전략뿐만 아니라 법률, 인사·노무, 세무·회계 분야의 기초교육과 함께 프로보노 전문가를 연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신생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계 및 법률 분야를 지원하여 창업기의 불필요한 혼란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회계지원단과 법 센터 등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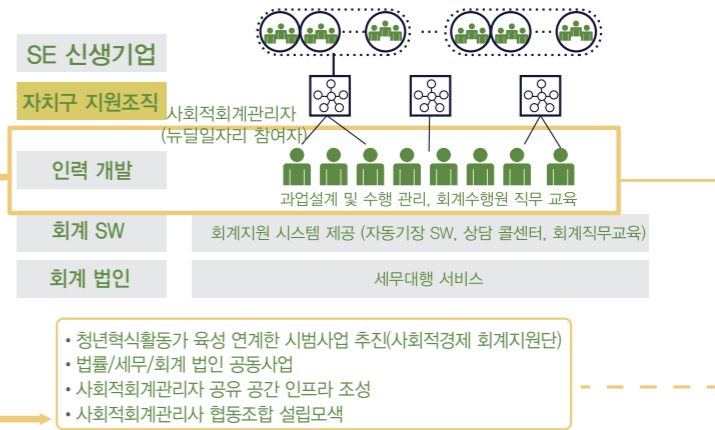
재무관리협동조합육성 : 회계지원단 운영

신생 소규모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재무회계 관리를 지원하는 '재무관리 협동조합 육성사업'을 2015년부터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회계 전담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신생 사회적경제 기업 100개소를 대상으로 8명의 회계사무지원단 여성들이 회계법인 총괄 하에 기장 대리 및 부가세·원천세 정리 등의 회계 정리 및 세무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회계관리자를 확충하고 재무관리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기업매출 성장에 따른 유료 실비 서비스제를 도입하고자 하며, 권역별 회계사무지원시스템을 더욱 확장할 계획이다.

- 기존방식**
- 신생기업 회계 전담인력 부재
 - 성장기 기업 한해 내부 고용
 - 경영공시 사회적경제 정체



- 공동관리방식**
- 주1회 현장방문 회계업무 대행서비스
 - 세무/법률 상담 서비스
 - 경영성과보고서 작성 지원 서비스



공공구매영업단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구매영업단과 공공구매지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 구매담당자들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보 부재를 해소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품목별로 사회적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상 매칭을 지원하였으며, 상시대응이 가능한 현장 코칭 기능의 비즈니스 콜센터를 통해 공공시장 신규 진출 기업들이 실무와 관련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재설계, 구매기업 매칭 활동 등을 수행하여 2016년 6월까지 공공구매 신규 계약 8건을 성사시켰으며, 총 34.5억의 공공구매 시장 매칭 성과를 이루었다. 더 나아가 지난 5월에는 공공구매 정보포털 세나비(SENAVI; Social Economy Navigation, <http://senavi.org>)를 오픈하여 공공기관과 사회적경제 기업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보와 매칭의 역할을 하고 있다.

02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서울시는 지역거점을 만들어 사회적경제 기업을 돕고, 기업 간의 협동을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2013년, 유희공간이 된 소방서 터를 개조하여 만든 '은평상상허브'를 시작으로 2016년 4월에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문을 열어 지금까지 6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하였으며, 양천, 서대문, 용산, 성동, 도봉 등의 자치구도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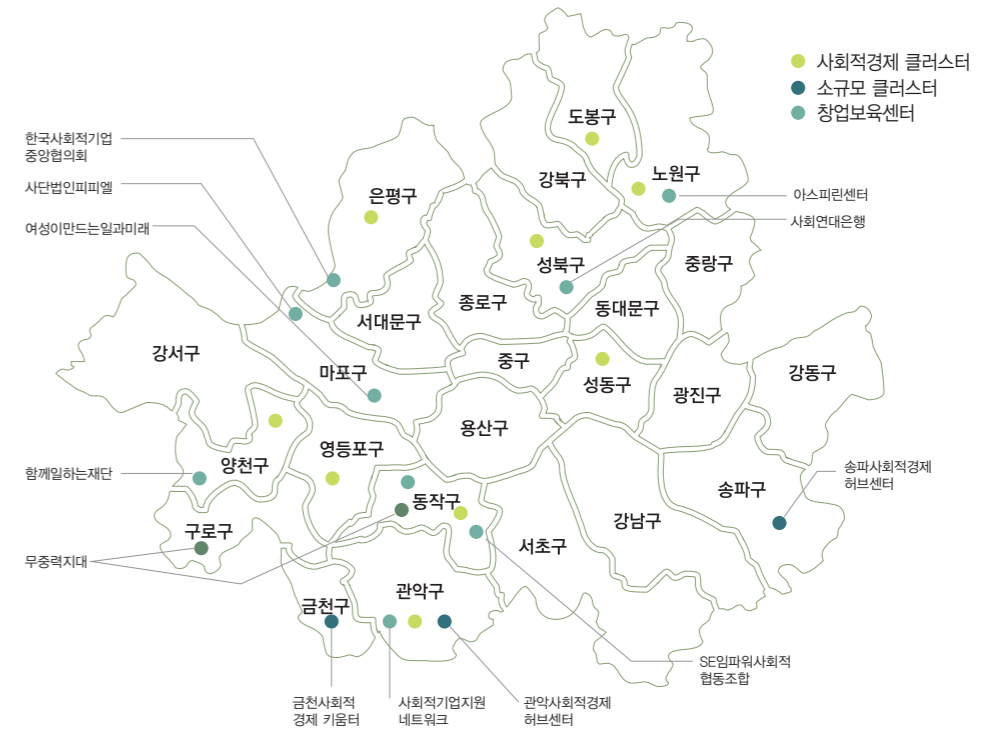
각 자치구 센터들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저렴한 임대료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사회적경제 제품과 기업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성북 도시재생 지역관리회사와 은평 자유학기제 대응 학습과정 개발 등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이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는 지역사회 생활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활동의 기반이자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거점의 역할을 할 것이다.

〈표15〉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현황

구분	규모	운영주체	운영구조
은평	1,100㎡ (지상3층)	은평센터 위탁	센터 운영위원회
성북	2,096.8㎡ (지하1층/지상6층)	성북센터 위탁	센터-구청 협의
영등포	734㎡ (지상2~4층)	구청 직영	사회적경제 육성위-실행위
관악	355.96㎡ (지상4~5층)	기업 대부 계약	구청 결정
노원	971㎡ (지상1~2층)	노원센터 위탁	구청 결정
동작	651.88㎡(지상2층)	구청 직영	센터 운영위원회

〈그림34〉 서울시 클러스터 공간 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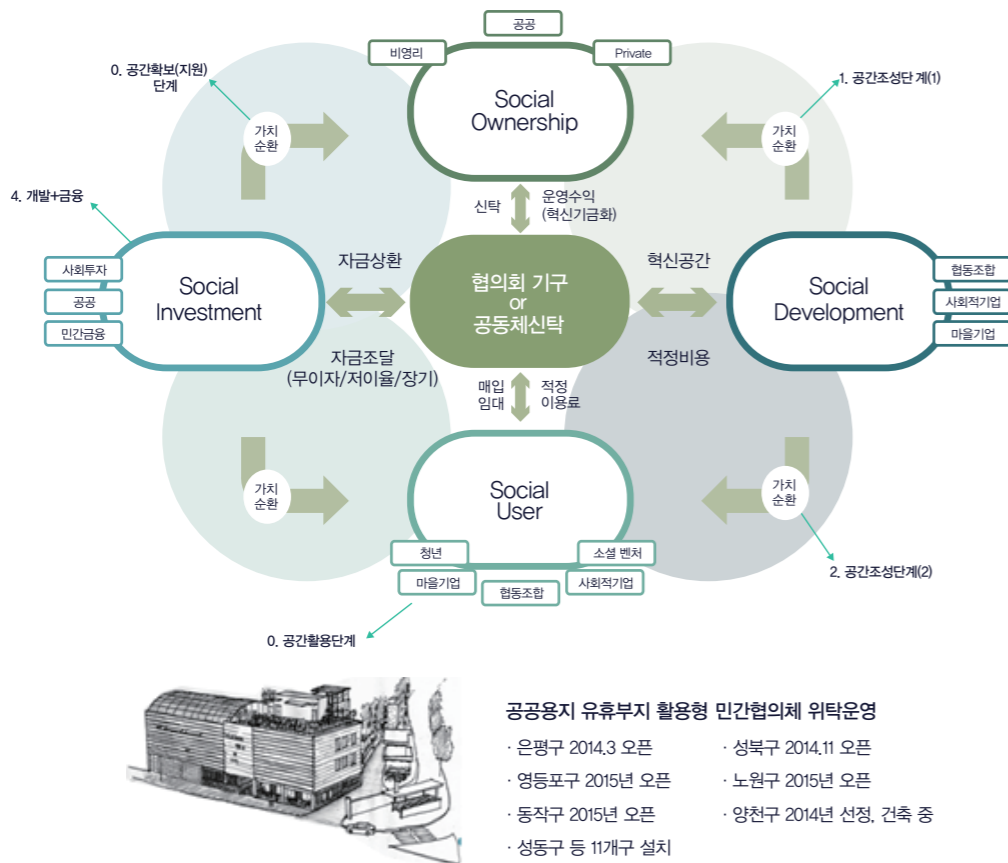


03 사회적경제 협업화단지 조성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다양한 역량들의 일상적 협동이 가능할 수 있는 공유 공간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민·관 협력으로 공간과 예산, 사업을 만들어 조성하는 공유공간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동개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11개 자치구에 연면적 6,000㎡ 규모의 협동단지를 조성하여 73개 사회적경제 기업과 지원기관의 협력과 네트워크의 거점이 조성되고, 창신·송인, 장위동, 성수, 마포석유비축기지, 세운상가 등 도시재생 지역 내에도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주민들이 협업할 수 있는 생활기술작업장을 조성하였다.

〈그림35〉 서울시 사회적경제 협동단지 조성



04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 사업

서울시는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시민홍보 및 공공조달 구매지원 등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초까지 18개의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이 선정되었고, 이들의 경영성과 분석한 결과, 선정기업의 2013년과 2014년도 총매출 성장률이 각각 57.2%, 18.1%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 매출증가율 3.6%²⁹⁾와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으며, 이들 서울시 우수기업의 실적은 전국 사회적기업들의 실적 평가와 비교하면 상위 7%에 해당한다.

〈표16〉 서울시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 매출 성장도

구분	2014년	2015년	성장률	
매출 총액 (백만원)	2013년 선정 12개소	34,996	55,029	57.2%
	2014년 선정 6개소	5,052	5,964	18.1%

기업 간 연대로 만드는 소중한 일자리, 워시마스터 서울세차협동조합



워시마스터는 2015년, 서울 시내 6개 자활기업이 모여 설립한 사업자 협동조합이다. 3~4명씩 일하는 소규모 사업체들의 연합으로, 2011년부터 서울시 공유기업인 쏘카의 세차 및 차량 관리를 맡아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조합기업별로 약 150대의 물량을 맡아 처리 중이며, 하루 평균 40여대의 차량을 세차하고 있다.

지금은 비록 사업자협동조합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에 워시마스터 협동조합의 정지선 대표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자활사업 참여 주민을 위한 세차교육 교재를 만들어 16개 지역자활센터 세차사업단에 세차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 일자리의 밑거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29) 통계청, 2015. 2014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04. 자본 및 자산 연계

01 사회적경제 금융 자본 연계

■ 사회투자기금

기업 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창업기 사회적경제 기관은 물론 업력이 상당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도 은행의 문턱은 높은 형편이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500억 원을 출연하여 서울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사업개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지원받은 31개 기업의 성장추이를 조사한 결과, 지원 전 대비 총매출이 129%, 일자리 창출이 157%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사회투자기금 지원 전후의 성장 비교

구분	지원 전	지원 후	비고
매출(억원)	1,800	2,315	129% (515억 원) 증가
고용(명)	737	1,158	157% (421명) 증가

또한, 사회적경제가 활용 가능한 주요 정책 금융과 비교해보면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활용도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사회투자기금은 타 정책 자금의 대출 금리 3.25%보다 낮은 평균 1.2%의 가장 낮은 이자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해 왔다.

〈표18〉 사회투자기금과 기타 정책 금융 지원 비교

구분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서울사회투자기금	330억 원	109억 원	75억 원	146억 원
사회적경제 활용 정책금융*	163.9억 원	51.8억 원	61.3억 원	50.8억 원

*시행 기관 : 서울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자료: 사회적금융네트워크, 사회투자기금 주요성과 보고서(2016.7)

대출 업무 외에 기부금 모금, 매칭 사업 등을 통해 민간 사회투자 재원을 171억 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사회투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사회적 금융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 캐나다 퀘백의 RIS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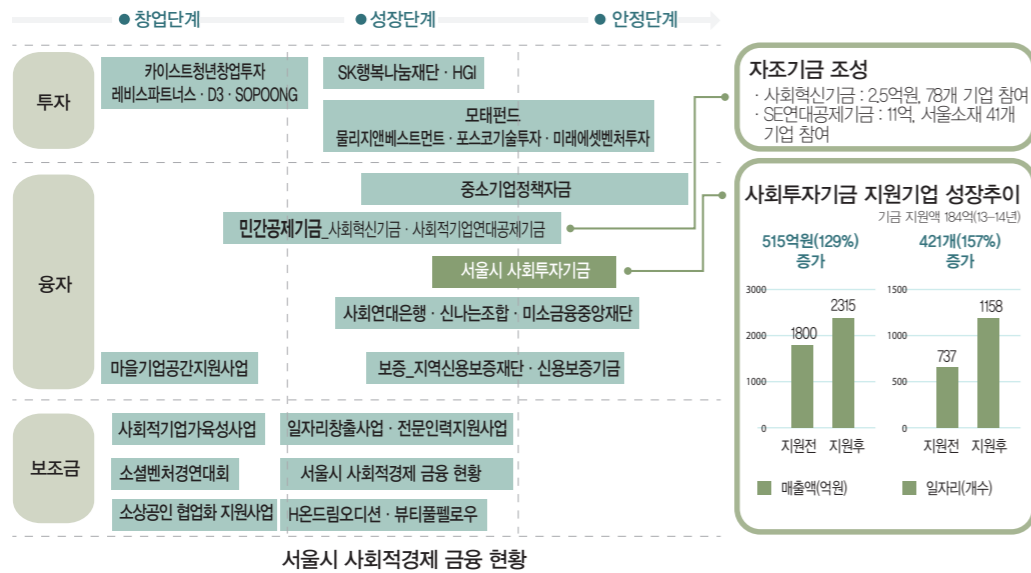
캐나다 퀘백의 퀘백사회적경제투자네트워크(RISQ)는 20년 간 400여 개 작은 사회적기업에 투자했는데, 일반적인 스타트업기업들의 생존율은 20%인 반면, 이 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90% 이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금의 특징은 투자 자본의 '수익률 극대화'라는 목표보다 '시장수익률 이하의 배당'과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혼합된 가치창출에 집중하는 '사회투자자본'이라는 점과 무담보 장기대출의 '인내자본'이라는 것이다. 이 기금은 상환기간이 무려 15년인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커뮤니티 관계를 맺는 경우 어려움이 있어도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 자조기금조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익률만이 아닌,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인내자본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에서 이러한 자본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포럼, 행사 등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장터 수익금 또는 협의회 회비 등을 초기 자본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의 노력은 규모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금 조성을 통한 경제적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6억7천만 원(2015년 11월 기준)을 조성하여 회원사에게 대출하였고, 이와 별개로 사회적기업 종사자 긴급자금 대출사업에 1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또한 78개 기업이 가입한 사회혁신기금이 약 2억5천만 원 조성되어 8개 기관에 대출을 진행했다.

〈그림36〉 서울시 사회적경제 금융 현황



02 사회적 자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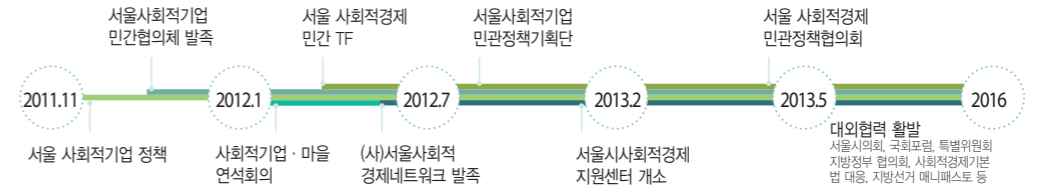
■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특성으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는 단시간에 형성되지 않고 반복되는 협력의 결과로 서서히 축적되는 가치로서 사적 소유가 아닌 **공동의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 자치구들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물질·제도적 인프라 설치를 위해 공간 설립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지원사업’**을 추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1개 자치구가 선정되어 사회적경제 협력 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의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구매 액수가 25개구 전체 기준으로 2014년 239억 원에서 2015년 338억 원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7개 자치구가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25건의 자치구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이 진행되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기초단위는 자치구 범위임을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있어 유의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변화되는 사회적경제 환경 속에서 자치구 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요소 구축에 있어 광역-기초 단위 협력을 촉진하여 상호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 주체의 협력과 자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37〉 서울시 사회적 자본 형성



■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 민-민 거버넌스 활성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역화의 방향은 **‘민간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해 민간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스스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서 **‘역량강화’**는 협동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의 축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물질 토대 축적**을 포함한다. 지금의 단계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토대로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실험해 보면서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자치구의 민간 역량을 축적하는 초기단계라 할 수 있다. 민간의 자조노력이 괄목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금천, 광진, 영등포에서는 공공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경제 간 시장을 열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 구축 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거래**를 권장하고 있으며, 은평사회적경제협의회, 성북사회적기업협의회와 노원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36.5스토어를 위탁하여 운영하며, 도봉사회적경제협력추진단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창동역 아래 판매장인 **‘SE마켓’**을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을 만드는 노력도 꾸준히 지속되어 강동의

경우 장터사업의 수익금이 마중물이 되어 2015년 말 기준 1,050만원을 적립하여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4곳에 대출을 진행했다. 시작은 미미하지만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간의 이런 지속적 노력을 통해 앞으로의 물적 토대의 성장이 기대된다.

〈그림38〉 사회적경제 지역화 후 자치구 변화상



II.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화 측면의 성과

01. 지역 밀착형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촉진 및 문제해결역량 구축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 전략은 기존의 '공공/기업의 외부 의존형 양적성장'에서 '시민 사회 자조역량 강화를 통한 내부지지망 공동구축과 지속가능성 제고'로 전환하였다. 국내 사회적기업의 개별화된 지원과 사회 기여, 협동조합 간의 협동 부재, 부문을 뛰어넘는 경제적 연대 경험과 신뢰 부족으로 사회적경제계의 '자조, 자립'을 위한 공동 안전망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기초는 자치구 차원으로 확대되어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의 지역화를 과제 및 목표로 삼고 지역의 기초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자 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원(공급, 생산)과 지역 내 소비실천 주체(수요, 소비)의 의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역시민사회, 지방 자체단체 등의 3자가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가 되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역 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와 자원을 연결해 온 지역 생태계 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조직화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있어 민간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나서고 부족한 부분을 공공이 지원한다는 '보충성의 원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내 당사자협의체를 통한 부문 내-부문 간 협동기반 조성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회원사들의 가치 공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소통과 협동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당사자 네트워크가 광역과 기초 단위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 운영 주체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 마을기업사업단(현재 운영주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은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를 포괄하는 사회적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 등을 지원하며,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는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상담뿐만 아니라 전문 창업교육과 컨설팅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광역자활센터(한국자활기관협회 서울지부)는 교육생태계 구축으로 주민 리더를 양성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며 자활사업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종합 지원하고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현재 운영주체: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도 포괄적인 사회적경제 부문과 자치구 협의체, 민간 지원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광역뿐만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조직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문제를 상호 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

기 위해 민간이 협동의 단초를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 지역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지원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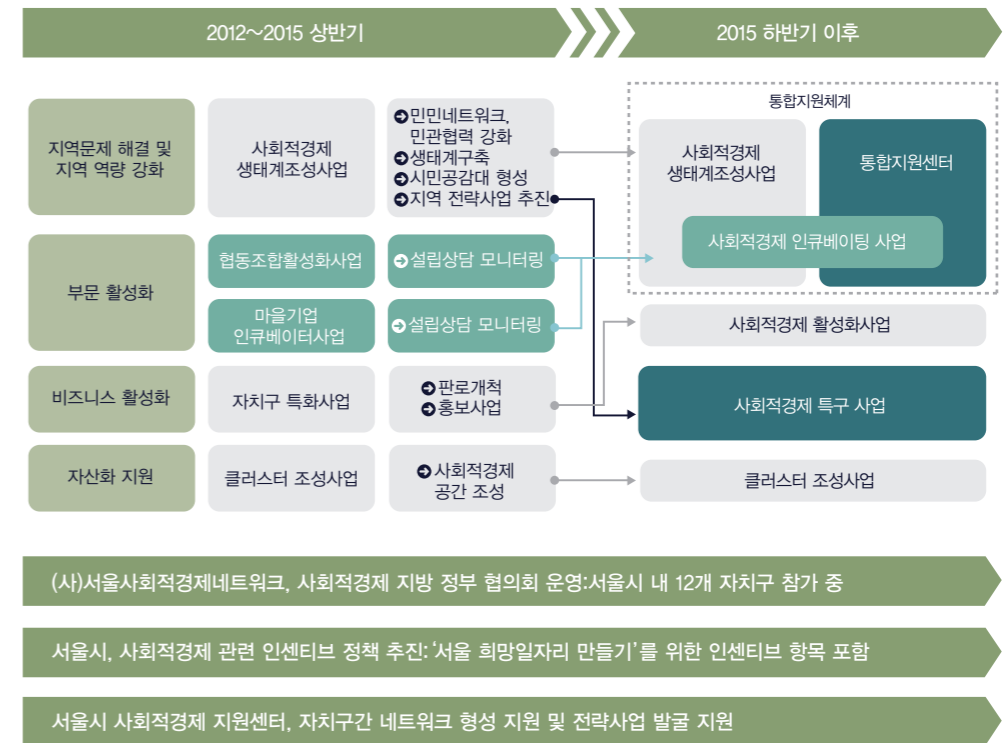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치구내의 의지도 정책적으로 제고되고 있다.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에 12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하였고, 평균 2.6억 원의 사회적경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5년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공구매 338억 원을 달성하였다. 자치구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이 39건 이루어졌고, 성동과 은평 자치구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설치' 등이 진행되고 있다.

〈표19〉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구분	주요 내용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관련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조례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수립 등이 명시화됨 • 우선구매, 기금설치,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하게 하여 지속적인 공공구매 확대를 모색함 • 본 예산 확정 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계획 공고를 의무화하여 공공구매에 대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함(공고 내용 : 품목 및 구매목표율,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계약의 특수조건 규정 등)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 교육, 재정 지원 사업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조항 기술 • 우선구매 촉진 조항을 통해 공공구매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의 재원 중 '일반회계로부터 출연금 규정' • 기금의 용도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 지원 외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사회적경제 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발전구역을 지정하여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 임대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 상권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업소일 경우 주민협의체의 사업개시 동의를 받은 후 입점하도록 절차를 둠

그러나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의지나 재정 투입 가능성이 달라 균형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어렵고, 특정 지역 이전이나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는 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자치구의 노력은 물론 광역 차원의 예산매칭제 등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39〉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정책 개요



-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지방 정부 협의회 운영:서울시 내 12개 자치구 참가 중
-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인센티브 정책 추진: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인센티브 항목 포함
-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자치구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전략사업 발굴 지원

02. 지역의 사회적경제 의제 발굴 및 특성화 사업 육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지원체를 육성하는 과정을 통해 21개구에 당사자협의회가 설립되어 협력 활동을 추진 중이며 총 51개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383개 기관이 참여하여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돌봄사업,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은 편이며, 서울시의 정책지원과 맞물려 도시재생사업, 학교협동조합, 공정무역 등에 대한 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공유자산이나 지역 문제 해결 역량이 부족하고, 네트워크 내부 리더십 구축과 자생력 확보에 있어 지역별 편차도 심한 상황에서 서울시 자치구들이 개별 기업 지원이 아닌 지역 차원의 생태계 조성에 합의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회적자본을 서서히 축적해 나가기로 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지역화의 체계적 협력과 지원을 위해 구성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은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모임을 갖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간사 역할을 함으로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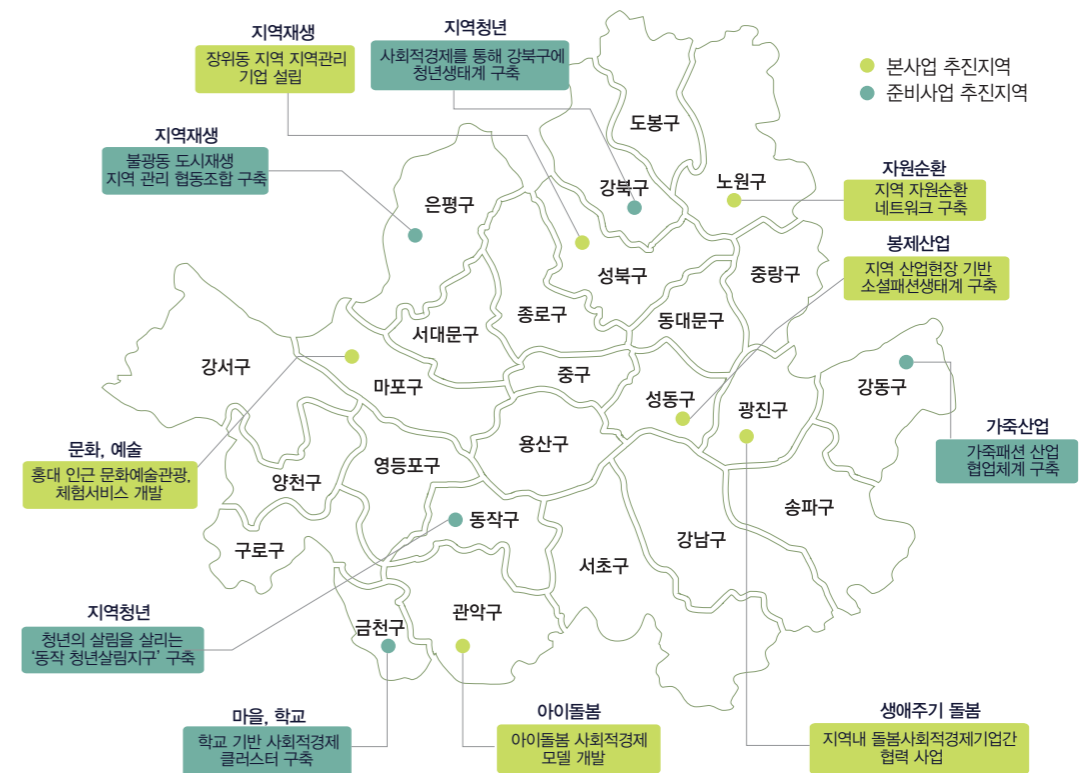
〈표20〉 자치구별 지역생태계사업 현황

자치구	생태계사업단 명	지역 의제 수	참여 기관 수	지역의제 명
관악	관악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5	18	의료복지, 햇빛발전, 아이돌봄, 청년주거, 어르신돌봄
금천	금천구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단	3	37	건축, 봉제, 돌봄
성북	성북구사회적경제 지원단	3	22	지역기금, 도시재생, 돌봄
은평	은평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4	22	마을관광, 상상학교, 자유학기제, 소셜하우징
강북	강북구사회적경제 지원단	4	27	자원순환, 먹을거리, 주거복지, 교복생산
구로	구로사회적경제 특화사업단	2	15	학교협동조합, 도시재생
노원	노원사회적경제 활성화추진단	4	29	되살림, 청소년, 어르신돌봄, 먹을거리
성동	성동협동사회경제 추진단	4	18	안심돌봄, 의료복지, 봉제패션, 시장활성화
강동	강동구사회적경제생태 계조성지역특화사업단	3	48	도시재생, 문화예술, 학교협동조합
마포	마포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지원사업단	4	52	문화예술, 마을카페, 돌봄, 클러스터
광진	광진구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단	4	44	돌봄, 교육, 마을화폐, 문화예술
동작	동작구협동경제지원단	2	7	공동체금융, 청년
양천	양천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2	11	먹을거리, 영유아돌봄
영등포	영등포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7	33	노인돌봄, 문화예술, 장애인일자리, 영유아돌봄, 방과후마을돌봄, 청소년, 도시농업
합 계		51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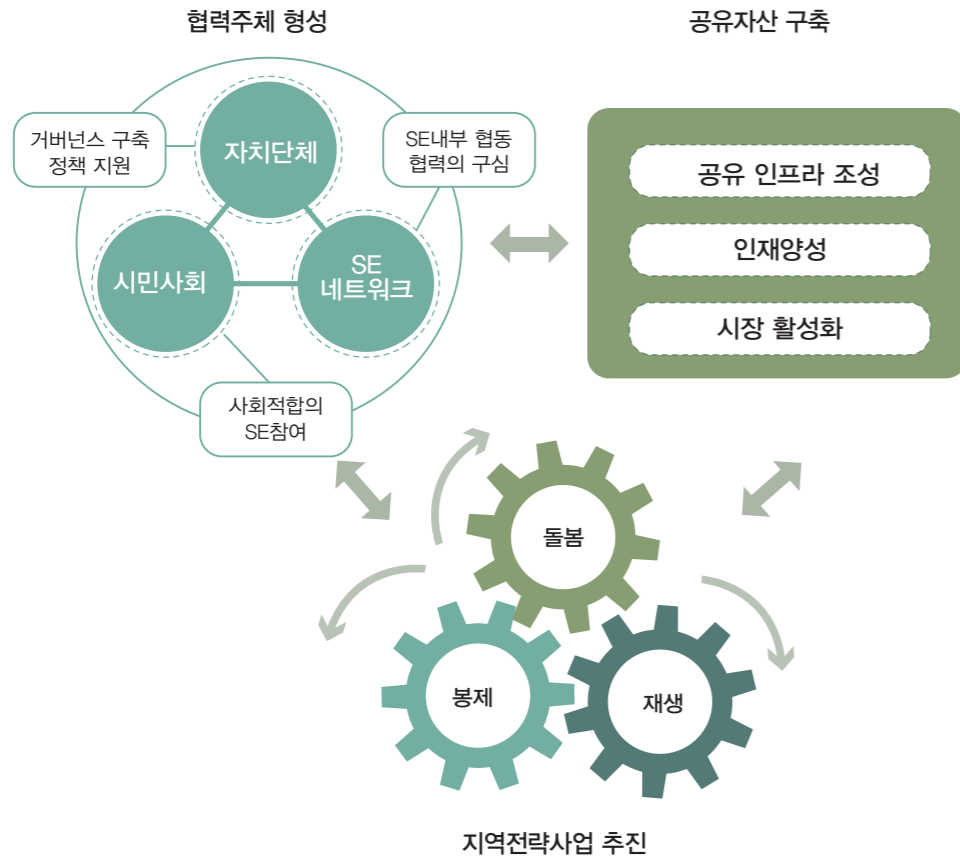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특구

자치구 단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은 2012년 초 사회적기업협의체에서 제안했던 자치구 기반의 사회적경제 지역화를 위한 장기 지원사업의 결과물이며, 서울시 민선6기에는 이러한 인프라의 성장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예비)특구 지정사업’으로 발전시켰다. ‘사회적경제 특구’란 기존 산업 요소를 통한 지역재생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수요나 추진 역량이 우수한 기초 지자체를 우선투자지구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림40〉 사회적경제 특구 현황도



〈그림41〉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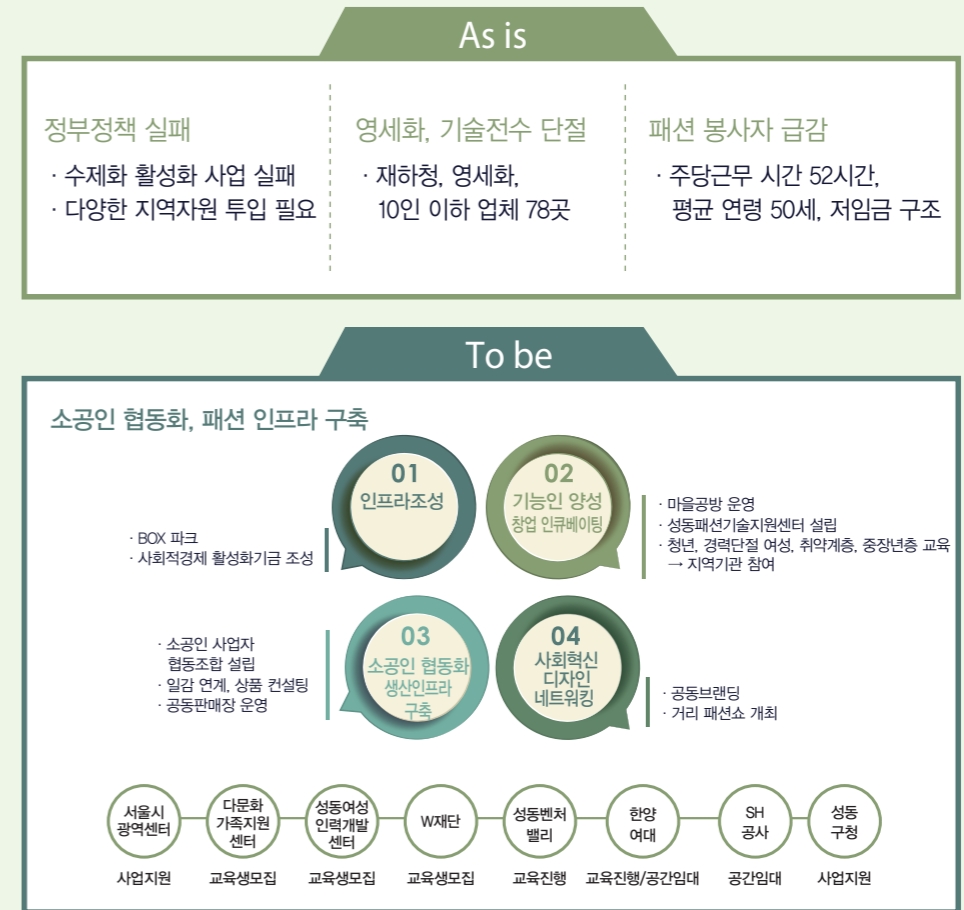
사례 1. 성동구 소셜 패션 특구

봉제 공동작업 공간이 열악한 지역을 복합 희망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성동구는 산업현장에 사회적경제를 접목시켰다. '봉제'라는 전통산업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키고자 자치구와 지역, 지역 내 대학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협력하고 있다.

성동구는 소규모의 가족생계형, 가내수공형 공장이 대다수인 봉제 산업을 생산자 간의 협업 및 연대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감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의류패션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는 사회적경제 기업 약 40개, 수제화, 패션잡화, 봉제 산업 관련 협동조합이 다수 존재하며, 청년 사회혁신기업(소셜벤처) 약 50개가 밀집하여 협업모델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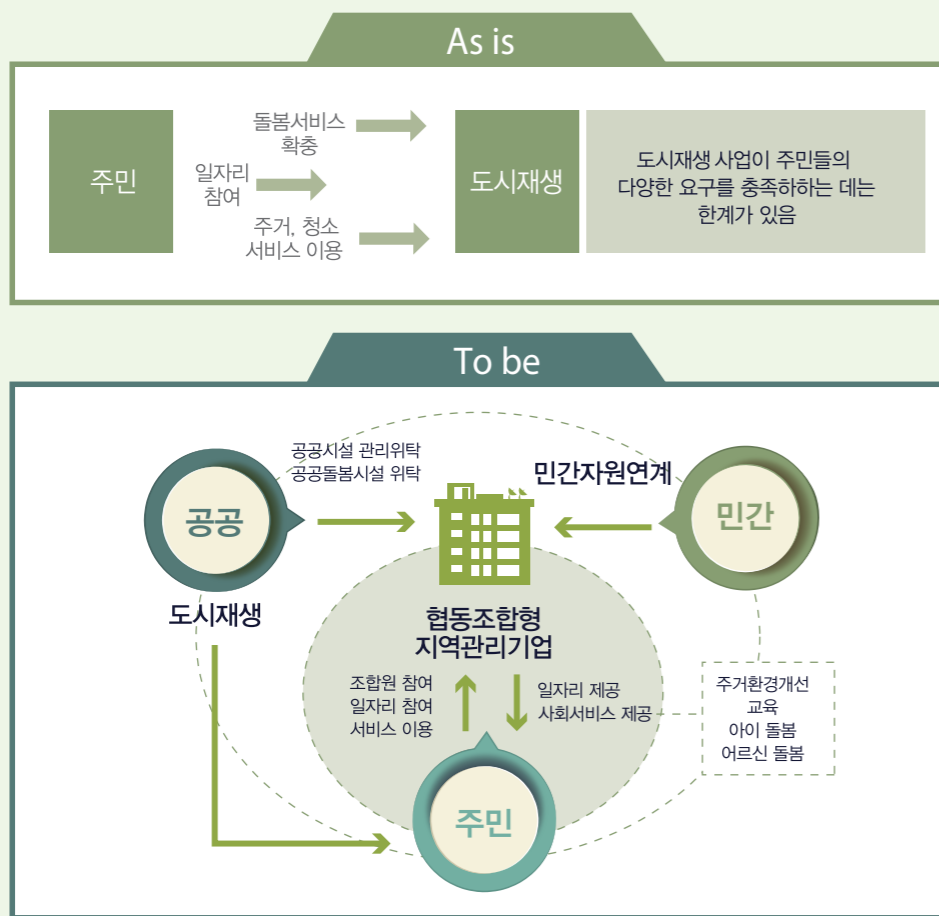
〈그림42〉 성동 소셜패션 특구 :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사례 2. 성북구 도시재생 모델 구축

재개발해제지역인 장위 13구역에는 노후화된 주택 및 도시기반시설이 분포하고, 여기에 취약 계층과 다문화가정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성북구는 이 지역의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유지하여 슬럼화를 방지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성북구는 성북구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함께 성북구 사회적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돌봄과 같은 지역 내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기회를 만들고 주민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접점을 마련하였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공동 주거관리는 물론 주차장 관리, 아동 및 노인 돌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지역관리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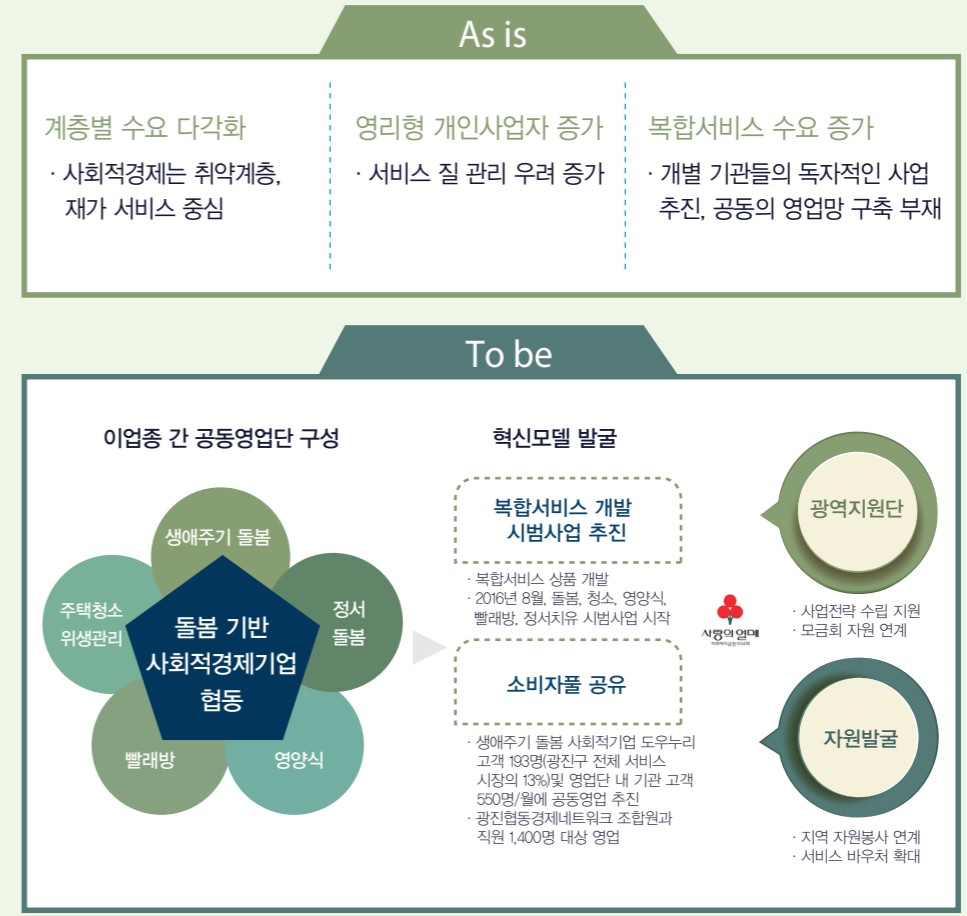
〈그림43〉 성북구 도시재생 :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관리회사 설립



사례 3. 광진구 돌봄사업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 조직들은 서비스 개선 및 부가 서비스의 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며 서비스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미흡한 편이다. 광진구는 지역 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서비스 니즈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해 가는 전략을 구상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조직의 협업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산재해 있는 다업종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사업연합을 구성하여 지역 내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은 물론 주민모금을 연계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도 구상 중이다. 특히 이 사업연합은 서비스의 통합뿐만 아니라, 고객들을 상호 공유하는 혁신을 통해 서로 간의 이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44〉 광진구: 돌봄서비스 조직의 협동화를 통한 지역 돌봄 서비스 혁신모델 발굴



〈표21〉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명	2016년 주요사업
금천구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단체복, 생활복 관련 수요조사 • 학교 내 먹거리, 교육 분야 만족도 조사 • 공동브랜딩 확대 전략수립 및 추진
동작구	청년의 살림을 살리는 '동작 청년살림지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조사 및 시범사업 • 로드맵 및 세부사업모델 수립 • 청년만남프로젝트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 지역관리협동조합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관리기업 모델 수립 • 주택관리(잔존보기) 시범사업 추진 및 실시
강북구	강북구 청년, 사회적경제와 만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자율아카데미 설립 준비 • 본 사업 계획 수립
강동구	청년 중심 스마트팩토리를 통한 가족패션 산업 협업체계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가족패션 산업관련 실태조사 • 청년 팩토리 시범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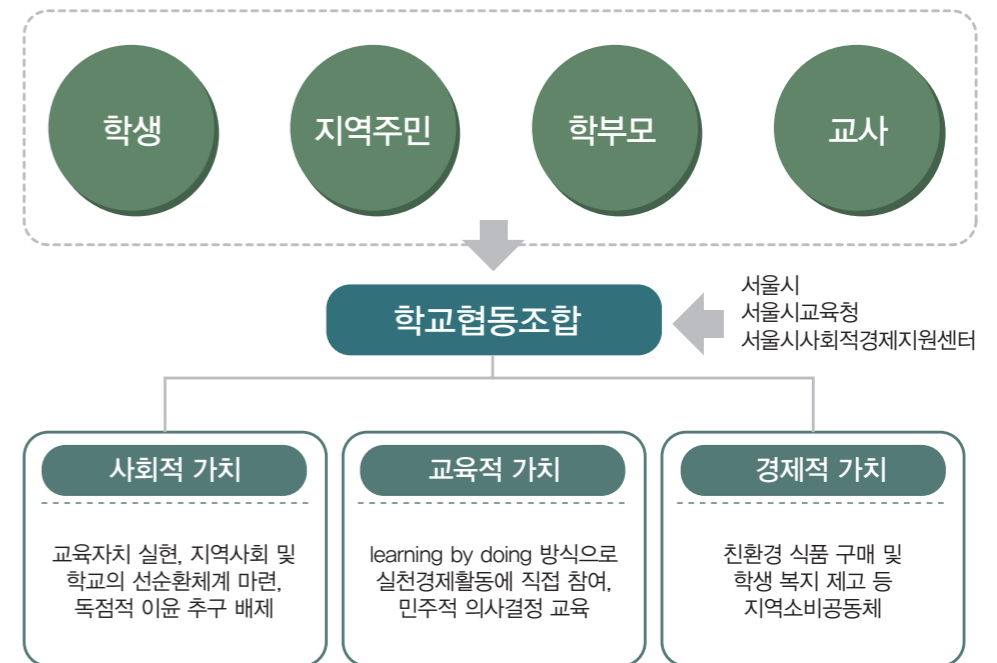
〈표22〉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추진 현황

구분	사업명	2016년 주요사업
성동구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장비, ERP프로그램 구축 • 인터넷 플랫폼 개발 • 소셜패션산학디자인센터 운영 • 토탈패션 공동판매장 운영
광진구	노인돌봄서비스 클러스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러스터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돌봄 서비스 복합공간 개설 • 사회서비스 바우처 개발
성북구	마을 사회적경제 융합형 도시재생모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개보수 상담 • 집수리 교실 및 사업 • 초등 틈새돌봄
노원구	되살림 사업연합으로 자원순환 마을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살림 매장 개소, 홍보물 제작 • 공동물류 선별장 공사, 트럭 구입 • 전산시스템 구축
마포구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대 문화예술 탐방 • 피어컨설팅 • 지역 거버넌스 구축
관악구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돌봄센터 운영 • 보육모임 발굴육성(워크숍 등)

■ 학교협동조합

서울시는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2014년 말, 20대 공동 협력과제로 학교협동조합 사업을 선정하여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로 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을 구성하고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윤리적 경제활동을 실천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교육, 경제 공동체이다. 친환경 먹거리를 판매하는 학교매점 운영, 교복과 문구류 등의 학교생활용품 공동구매, 방과후 교실 및 돌봄서비스와 같은 학교 구성원의 필요에 따른 공익적 사업을 운영한다. 2015년 3개이던 학교협동조합은 2016년 10월 현재 14개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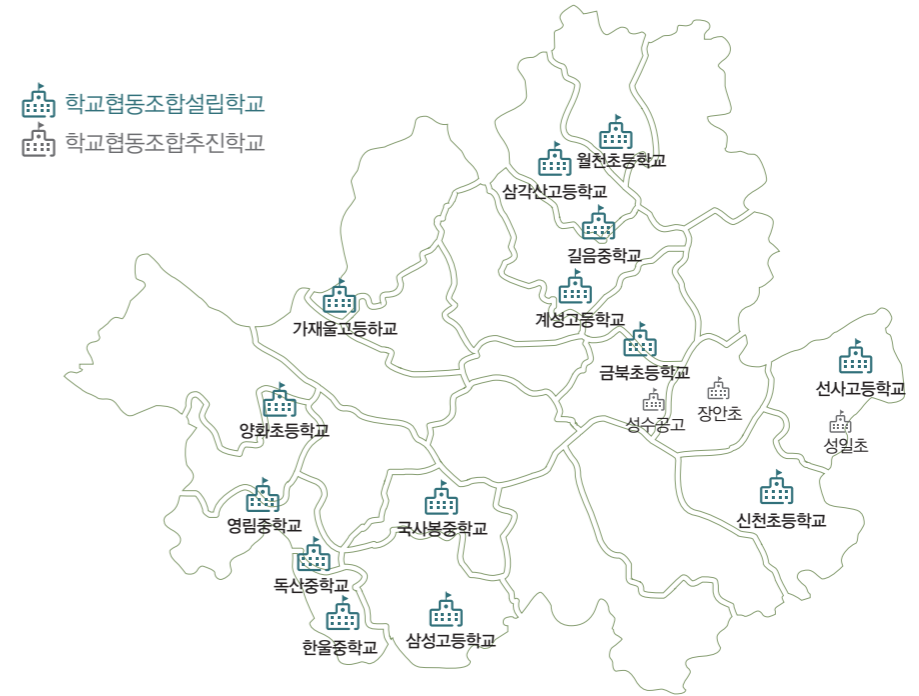
〈그림45〉 학교협동조합 운영 시스템



〈표23〉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현황(2016년 10월)

연번	기관	지역	유형	조합원수 (명)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1	영림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구로구	매점	16	87	6	21
2	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	금천구	매점	22	23	80	26
3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강북구	매점	29	48	130	6
4	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관악구	매점	17	30	90	15
5	선사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강동구	매점	31	55	123	9
6	국사봉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동작구	매점	8	39	40	2
7	월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도봉구	방과후	21	19	-	11
8	가재울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서대문구	매점	13	20	27	3
9	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양화초)	양천구	돌봄	6	7	-	10
10	계성고등학교샛별 사회적협동조합	성북구	매점	33	25	-	-
11	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성북구	매점방과후	5	35	54	1
12	신천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송파구	방과후	2	30		9
13	금복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성동구	방과후				
14	한울타리 사회적협동조합(한울중)	금천구	매점	2	9	2	2

〈그림46〉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추진 현황(2016년 10월)



■ 햇빛발전소

서울시는 2013년 4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용량 50kW이하 발전사업자(학교 시설의 경우 100kW)를 대상으로 kWh당 100원의 보조금을 5년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햇빛도시 조성 사업”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핵심 사업이자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햇빛발전협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청사, 학교, 주택, 업무용 건물 옥상과 지붕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2012년부터 암사 아리수 정수센터, 강서 농산물 시장 등 26개 공공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총 22.0 MW의 햇빛발전소를 설치했으며,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던 햇빛발전소 258개소를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온라인으로 보는 ‘공공시설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2016년까지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표24〉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 발전소 발전량 (2016.5.31)

조직명	발전소	용량(kW)	기준일수	총 예상 발전량(kWh)
강남햇빛발전 협동조합	서초구 품질시험소 바우미햇빛발전소	36	609	70,157
	탄천물재생센터	40	190	24,320
금천햇빛발전 협동조합	독산고등학교 8월 준공 예정			
노원 햇빛과바람 발전협동조합	노원구청주차장	30	962	92,352
우리동네 햇빛발전 협동조합	삼각산고등학교	20	1,081	69,184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50	773	123,680
	동부여성발전센터	30	136	13,056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상원초등학교	37.2	780	92,851
	인현고등학교 8월 준공 예정			
태양과바람 에너지협동조합	은평공영차고지 1호기	50	794	127,040
	은평공영차고지 2호기	50	703	112,480
	난지물재생센터	100	171	54,720
동근햇빛발전 협동조합	서울 가락교당	11.25	714	25,704
	서울 송천교당	12.24	522	20,446
	서울 홍제교당	13	485	20,176
합계		479.69		846,166

*기준일수: 준공일부터 2016.5.31.일 측정일까지 일수
 *예상발전량 측정: 일일 발전시간을 3.2 시간으로 잡고 기준일수와 용량을 곱한 수치
 *출처: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 공정무역도시, 서울

‘공정무역’이란, 국가 간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하며,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공정한 가격의 지불,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보전, 생산자의 경제적 독립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래를 말한다.

서울시는 2012년 5월 “세계 공정무역의 날(World Fair Trade Day)” 한국 페스티벌에서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선언문”을 발표한 이후 제3세계에 대한 공정거래 및 빈곤 퇴치를 위한 공정무역 가치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윤리적 소비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주요 사업으로 서울 시내 18개 구 지역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72

회의 공정무역 교육을 진행하여 6,373명이 참가하였고, 69회의 공정무역 캠페인을 실시하여 120,346명이 참여하였다. 서울시민청 지하 1층에는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을 설립, 운영하여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누적 판매액이 약 17억에 이르며, 약 50만개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민간 부문에서는 2002년 아름다운커피를 시작으로 공정무역단체들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5년 12월 기준 113명이 공정무역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 820개의 판매처에 공정무역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조직형태는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이 6개, 협동조합자회사를 포함한 협동조합이 3개로 대부분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표25〉 공정무역단체 및 공정무역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단체명	시작연도(년)	조직형태	판매처(개)	주요 품목
아름다운커피	2002	재단법인(사회적기업)	269	커피, 초콜릿
두레APNet	2004	주식회사(협동조합자회사)	110	설탕, 커피
카페티모르	2005	주식회사(사회적기업)	96	커피
아이쿱생협	200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58	설탕, 바나나
페어트레이드코리아	2007	주식회사(사회적기업)	11	의류, 수공예
얼굴있는거래	2007	개인회사	1	커피, 축구공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2009	재단법인(사회적기업)	30	커피
어스맨	2011	주식회사	22	수공예, 건과일
더페어스토리	2012	주식회사(예비사회적기업)	6	수공예
아시아 공정무역네트워크	2012	주식회사(사회적기업)	95	건과류, 건과일
이피쿱	2013	노동자협동조합	22	커피

출처: 쿠퍼협동조합 연구자료(2015)

공정무역단체 및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고용인원이 2012년 94명에서 2015년 113명으로 성장하였으며, 공정무역 매장 개설 및 공정무역 생산자 협력 관계를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의 공정무역 제품 판매장 ‘지구마을’은 2015년 12월 기준으로 직원 5명과 매장 일용고용직 12명을 고용하고 있다.

〈표26〉 공정무역 관련 조직 고용 현황

단체명	설립년도(년)	2012년(명)	2015년(명)
아름다운커피	2014*	36	44
두레APNet	2004	4	7
카페티모르	2012**	13	12
아이쿱생협	1997***	4	5
페어트레이드코리아	2007	14	14
얼굴있는거래	2007	1	2
기아대책 행복나눔	2012	1	3
어스맨	2011	3	3
더페어스토리	2012	8	8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2012	10	10
이피쿱	2013	(설립 전)	5
총 합계		94	113

* 2002년 사업시작, 2014년 아름다운커피 신선행인 설립
 ** 한국YMCA연맹에서 2005년부터 동티모르 커피 거래 시작, 2012년 사회적기업 카페티모르 설립.
 *** 아이쿱생협은 1997년 경인지역 생협연대로 사업 시작하여 2002년 한국사업연합회 창립, 2007년 공정무역 사업 시작.
 출처 : 쿠파협동조합 연구자료(2015)

사회주택 (주택공급수, 2015년 기준) 359가구	시민햇빛발전 (누적 발전량, 2016년 5월 기준) 846,116kW	학교협동조합 (설립현황, 2016년 10월 기준) 14개교 학생조합원 552명
공정무역 (2015년 총 거래액) 160억원	부모참여 어린이집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13개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 세대 현황) 7,632세대
사회서비스 (2013~14년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 160만명	취약계층 고용 (전체 고용 17,900명 중) 40%	사회적 성과 (재정지원 대비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 12.9배 *2016년 현재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대상 (서울연구원)

III.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지원 전략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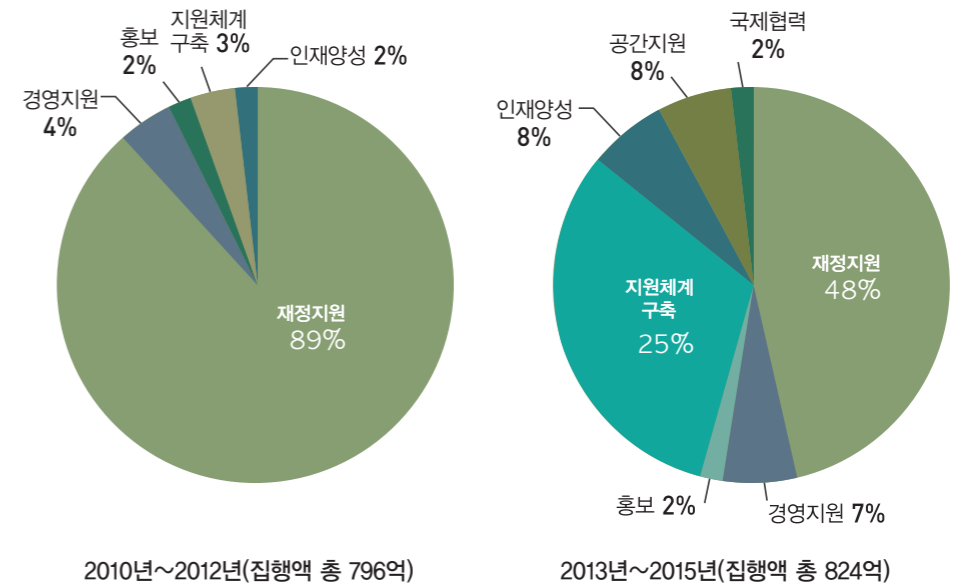
01. 공공재정 효율성 제고

사회적경제의 지역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역 범위에서 다양한 주체와 역량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시도하는 자치구가 늘어나고 있다. 광역의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관의 자원이 결합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의 재원도 축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2011년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의 예산은 90%가 개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금으로 구성되었다. 반면 2012년 이후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에서의 합의를 통해 직접적 재정지원 사업을 89%에서 48%로 줄이고 간접비 성격의 생태계 조성 사업비를 52% 수준까지 확대하였다.

직접적 재정지원 사업	89%(2010~2012년) ⇒ 48%(2013~2015년)
간접적 생태계 조성 사업 지원	11%(2010~2012년) ⇒ 52%(2013~2015년)

〈그림47〉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 변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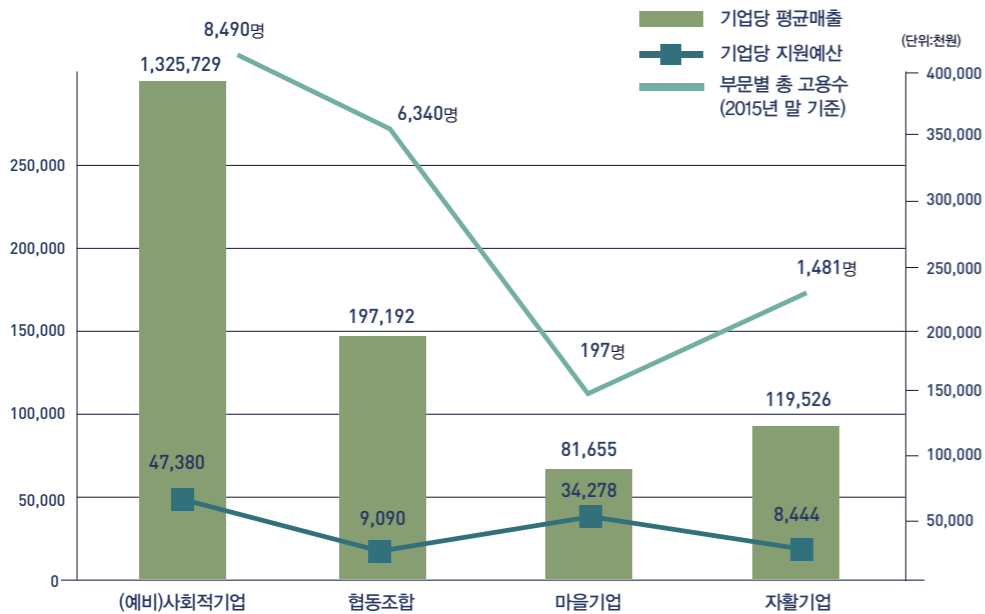


주목할 점은 2012년 이후 매년 10% 정도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채 7조원 상환을 위한 예산 절감' 기조 하에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89%에서 48%로 줄어들었지만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와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기업 지원과 인프라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유효하였으며, 재정효율성도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예산은 총 1,319억 원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이러한 직·간접적 지원예산을 활용하여 총 3조 1,390억 원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고, 15,800명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투입대비성과율(ROI) 15.3의 건전한 성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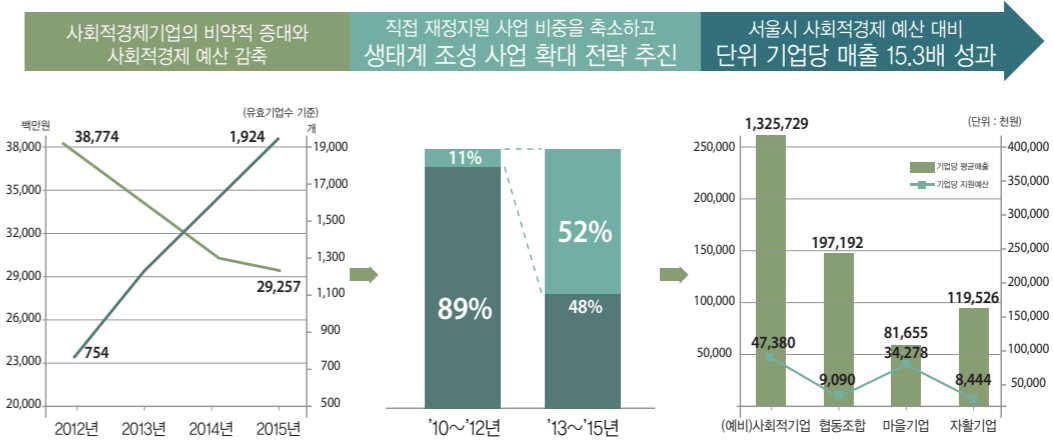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부문별로 재정지원의 편차가 있으므로 재정지원 대비 성과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부문별로 나누어 분석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기업 당 연평균 4,7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연매출 13억 원, 19.6명의 고용(총 8,490명)을 창출하였다. 마을기업은 기업 당 연평균 3,400만 원을 지원받아 8,1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2.3명(총 197명)을 고용하였다. 협동조합 중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중복 인가받은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들은 기업당 연 900만원 수준의 간접 지원비만을 받고 있으며, 기업 당 연매출 2억 원, 5.2명의 고용(총고용 6,340명)이라는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48〉 서울시 사회적경제 부문별 지원재정 대비 매출성과 비교



*2012~2015년 합산 기준
자료: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예산편성표 바탕으로 가공(사경센터, 2016)

〈그림49〉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 정책 변경 후 성과



02. 사회서비스 가치 창출 효과로 보는 사회성과지수³⁰⁾

2013년 서울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 지원 및 유사 사업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들의 여건이 많이 변경되었다. 이런 변경된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효과를 분석한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³¹⁾, 사회적경제 지역 생태계조성 정책 추진 이후 사회적기업의 경제·사회성고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서울연구원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측정에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이라는 특수성, 사회적 가치의 계량화, 기업의 지속가능성, 이종기업 간 상호비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성과' 지표를 고안하여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목적의 실현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성과'는 취약계층에서 제공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화폐적 가치를 활용하여 측정했다. 비용 대비 편익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비용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자치구 등의 정부지원금과 기업 및 개인 기부금 등의 지원금의 총합으로 보고, 편익 효과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로 발생하는 화폐적 가치로 설정하였다.

30) 본 장은 조달호 외(2016)을 참고, 정리하였음.
31) 조달호 외(2012; 2016)

사회성과지수 : 기업에 투입된 지원금 대비 고용·사회서비스 가치 창출 효과

*조사대상 : [2016년] 서울시 예비(지역형+부처형)사회적기업 137개 중 38개 (37.6%)

$$\text{사회적 성과 최소값} = \frac{\text{①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가치} + \text{②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치}}{\text{③ 투입}}$$

$$\text{사회적 성과 최대값} = \frac{\text{① 취약계층+④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가치} + \text{②+⑤)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가치}}{\text{③ 투입}}$$

- ①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연간 임금 총액 +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 상해 보험료)
- ②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연간매출액(시장가격 반영분) +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무료서비스에 대한 연간매출액(시장가격 반영분)
- ③ = 정부·지자체·개인·기관 등으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의 합
- ④ = 일반인 유급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 + 4대 보험 회사 부담금 + 중증 및 지체장애인 근로자 가족원 임금총액 + 환자 가족원 임금 총액)
- ⑤ =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유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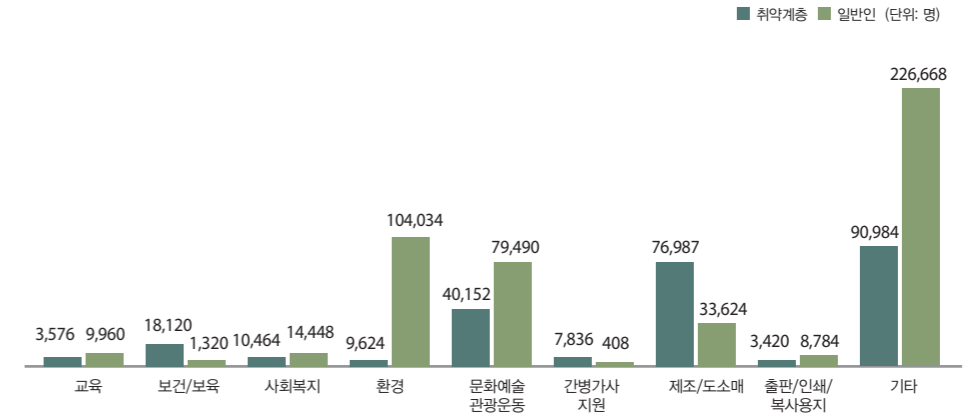
사회적 성과 지수는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화폐적 가치만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최소값'과 취약계층과 일반인 모두에게 제공된 화폐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출되는 '최대값'으로 구성되며, 이중 최소값이 사회적성과를 판단하는 주 지표 역할을 한다. 사회적성과 최소값이 1보다 클 경우 투입된 각종 지원금과 기부금보다 사회적기업에 의해 창출된 가치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최대값은 사회적성과 지수의 보조지표로 사회적기업의 수혜자를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포함한 광의의 사회적 성과값을 의미한다.

2015년 말 기준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사회성과지수는 12.9가 나왔고 이는 재정지원 대비 최소 12.9배 이상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인을 포함한 사회적성과 '최대값'은 평균 29.5로 이는 투입 예산 1에 대해 창출되는 사회적가치가 29.5배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생태계 조성을 우선하는 지원 정책으로의 변화 이후 사회적 성과 창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3.7%에 해당하는 3개 기업의 사회적 성과 최대값은 판단 기준 1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사회적기업 중 3.7%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출된 성과가 투입된 자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50〉 서울시 사회적기업 업종별 사회적가치 창출 정도

업종별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



사회적기업의 업종별로 사회적 성과를 분석해보면 사회적 성과 최소값과 최대값이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수혜 혜택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업종과 일반인을 포함한 사회계층 전반에 사회적 가치가 전달되는 업종 등, 업종별로 수혜자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회적 성과 최소값과 최대값이 모두 1보다 작은 업종으로는 보건·보육 및 사회복지 업종이 많았으며, 최소값과 최대값 모두 1보다 큰 표본은 일자리 제공형, 제조·도소매, 환경, 출판·인쇄·복사용지 업종으로 나타났다. 보건·보육 및 사회복지 업종의 경우 지원금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며, 최소값은 1보다 작지만 최대값이 1보다 큰 교육, 문화예술·관광·운동 업종의 경우는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기업의 가치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고루 전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03.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행복지수³²⁾

지난 6월 서울연구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³³⁾. 사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같은 비경제적 성과를 식별해내고 비교 가능한 단위로 측정한다는 것은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에서 난제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대개 사회적 응집력과 사회적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조직문화를 발전시키는 경향이 크기 때문

32) 본 장은 장종익(2016)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33) 장종익 외(서울연구원, 2016)

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이 증대될수록 그 조직들이 속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질'이라는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소득, 연령, 학력, 직업 등의 다른 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이 증대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질이 향상될 것인가를 측정하였다.

2014년 10월 서울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주민 45,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서베이'를 바탕으로 행복도 변수를 추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운영 중인 협동조합 등의 기업 수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활동 변수로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사회적경제 조직 1개가 증가하면 지역주민의 행복도가 0.033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치 0.033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매우 작은 수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면, 해당 지역 주민 소득이 23,400원 증가했을 경우의 행복도 증대와 맞먹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의 평균 주민수가 40만 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지역 총소득이 약 93.6억 원 증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평균 개수는 약 33개로 일반 영리추구 기업의 구별 평균 개수 약 31,000개의 0.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인과적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추구기업에 비해 밀도가 낮긴 하지만 영리 추구기업에서는 찾기 어려운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 및 지배구조는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에게 열려있는 개방형이며,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업 활동의 결과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밀도는 낮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 활동들이 주변 지역사회 주민들의 행복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실제 '사회적경제 조직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도'가 '사회적경제 조직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복도' 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에 더욱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이 인과관계의 근거를 뒷받침해준다.

불평등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반면, 소통, 신뢰,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행복지수를 높인다. 덴마크, 노르웨이와 같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사회적 자본의 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지수가 높다는 건 그 사회 구성원 간 신뢰도가 높고, 소통이 잘되며,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다. 경쟁보다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는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을 높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것이다.

5부 향후 과제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2014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공약권고 사항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의 정책적 변화가 민선6기 지방선거 과정에서 타 지방 자치단체들에 영감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의 선두주자로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감히 자평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지난 5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내발적·민주적 경제 발전 원리'가 주류 시장경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본 성과분석은 사회적경제가 아직은 미약한 초기 정착기에 있다고 결론 내리고 앞으로의 당면 과제와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서울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인재양성·기술개발 및 의제연구·협업사업이 가능한 공유플랫폼·금융과 시장 조성' 등의 핵심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국회 및 중앙정부·현장조직들이 함께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사회적경제 사업연합 활성화

사회적경제가 발달한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와 영국의 협동조합그룹 등을 살펴보면 '내부자원과 사업역량'을 축적한 선배 사회적경제를 주축으로 동·이업종 간의 기업들이 사업연합체를 구성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협업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공정무역협의회·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아름다운가게 뷰티풀팰로우 지원사업·해피프릿지협동조합 외식업경영연구소 등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 좋은 사례이다. 국내 지역사회는 시민들 간의 신뢰나 소비망이 부족하고, 사회적경제 내부에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전문 중간지원조직들과 정책별 부문협의체를 통한 자원개발 및 정책 교섭이 중요했었다. 그러나 기업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고 생존하며 나름의 전략을 익혀온 선배 기업을 통한 사업 지원과 연대이며, 기업들 간의 사업연합 활성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표27〉 해외 사업연합 모델

주체	전문 중간지원조직	당사자 연합회	사업연합체(컨소시엄)
해당국가	영국, 스웨덴, 벨기에 등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이탈리아, 스페인/영국
대표사례	<p>영국 CDA(coop development agenc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SE가 회원, 협동조합 UK 회원조직 • 대규모, 생협과 노협 성과에 기반 • 1976년 이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하에 30개 설립, 1980년대 보수당 정권 하에서 폐업, 소규모화함. 이후 사회적기업과 CB 지원 통합, Big Society 하에서 지원 축소 예) SEL(런던 ICOM, CDA 교육기관 통합) • 재원 : 공공기금, 회비, 생협기금, 서비스 비용 cf) 벨기에 : 기본지원 + 성과형 인센티브 스웨덴 : 지역자원 동원시 공공 매칭펀드 • 사회적 감사 제도 전파 • 한계 : 전국적 공유시스템, 전문가 양성 부재 <p>COOPERATIVE ENTERPRISE HU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최대 '협동조합 그룹' 산하, 기금 조성 • 4일 무료 컨설팅 등 동일 문제 선배 멘토링 • 거버넌스 컨설팅 최다, 수익모델 자문 및 자본조달 연계 (협동조합 그룹펀드 대출 등) • 연합회 가입비 지원(전국 현황 통계 가능) • 7개 지역, 130명의 전문 컨설턴트 보유 	<p>이탈리아 CONFCOOPERATIVE, LEGACOOP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연합회 발전, 2011년 전국 연맹체 설립 • 재원 : 개별 SE가 지불하는 연매출 4%회비,연간 세전수익 3% 개발기금 활용 • 지역연합회 : 창업컨설팅, 정보 및 교육 제공 <p>스페인 COCETA(1986, 16개 광역지자체협의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0~1975년 정체기, 1970년대 민주화와 지방분권화시 재주목, 지자체 지원 활발 • 재원 : 회비, 지자체 지원 • 법률 지원, 제도 개선 교섭에 주력 • 사업지원은 업종네트워크에서 자발적 추진 	<p>컨소시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리아 발달, 1909/1971 법률 제정 • 협동조합간 연대형 2차 협동조합 • 공동 회계, 공동 입찰, 자금조달, 컨설팅, 대출 및 공공 계약시 보증, 품질 관리 • 유사/동일 업종간 공동사업 연합체 • 농업 수직계열화, 생협 공동구매, 지역밀착 사회적 COOP 공동 입찰 활발 • 컨소시엄간 연합인 CGM 전국 입찰, 전략개발 조사 연구, 교육훈련 담당 <p>그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발달, 1999년 법제화 • 그룹을 통해 경영지도 권한 부여 • 경영시스템, 위기 및 성과 공유 예) 스페인 몬드라곤복합체그룹 <p>SDB(sectoral development bod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빠르게 성장, 업종네트워크 주도 • 업종별 시장 정보, 전문 노하우 제공 • 업종 전략, 사업연합, 표준화, 글로벌 허브 예) cooperative college
배경	1990년대 후반 이후, 실업해소, 낙후 지역재생 등 공공 정책 실현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와 파트너십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에 공공지원	대규모 생협, 노협의 개발기금 활용 Basev법(1947) 연합회 통한 개별 SE 지도감독 권한 부여 cf) 프랑스 유사	재원은 사업연합체를 통해 연대의 이익을 취하는 회원 협동조합 부담금에 전액 기반

이러한 업종별 사업연합회가 활성화된다면 기업의 규모화나 가치창출의 규모화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협의체들의 낮은 회원 조직화율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향후 사회적경제 인프라 확충 시에는 공공과 지원기관 외에 당사자 협의체의 고유한 위상과 역할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도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28〉 사회적경제 조직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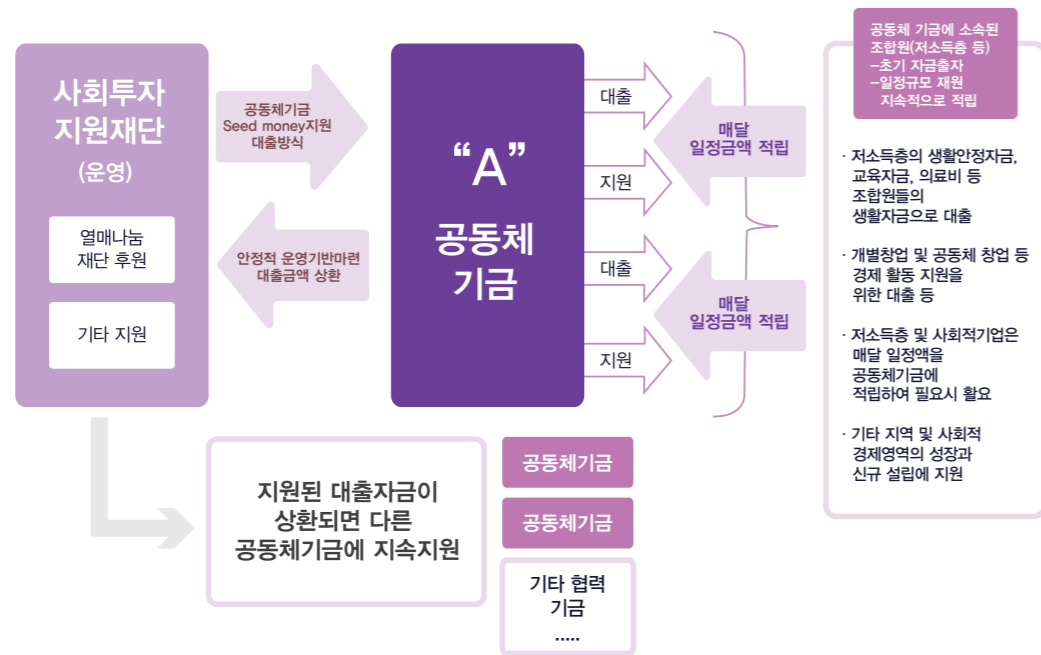
구분	2013년 6월말 기준		2016년 7월말 기준		부문협의체 설립 여부 및 핵심사업
	해당기업수 [유효기업수]	회원기업수 (조직화율)	해당기업수 [유효기업수]	회원기업수 (조직화율)	
사회적기업	433	95 (21.9%)	435	124 (28.5%)	2008년 7월 ·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컨설팅, 제도개선 · 사회혁신기금 조성
협동조합	519	6 (1.1%)	2,541 [1,128]	162(6.4%) [162(14.4%)]	2013년 6월 · 협동조합 교육, 컨설팅, 제도개선 ·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수탁 운영
마을기업	111	-	110	32 (29.1%)	2015년 4월 · 마을기업 네트워크, 컨설팅
자활기업	167	-	201	72 (35.8%)	2016년 3월 · 자활기업 네트워크, 전략업종 육성
광역 소계	1,230	101 (8.2%)	3,287 [1,874]	390(11.9%) [390(20.8%)]	
자치구 사회적 경제협의체	678 (11개 자치구 기준)	187 (27.6%)	2,396 (20개 자치구 기준)	599 (25.0%)	

II. 상호공제조합(기금) 육성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생산에 필요한 자금 확보뿐 아니라 피고용인을 위한 관혼상제 상호부조기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이에 당사자들의 수익금 여수신과 상호부조보험 등이 가능한 사회적경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기본법 및 조례를 제·개정하고,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매칭하는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 기금 육성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제조합 설립 시 당사자 조직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공·기부금 출연을 연계하고, 당사자 협의체에 운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조금융으로의 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2011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 사업을 허용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시행 중인 바, 사회적경제 공제조합을 통해 창출된 잉여를 커뮤니티 내부에서 순환하게 하며 조달계약 확대에 따른 보증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가족들을 위한 상조서비스를 운영 등의 다각적인 사업 모색이 가능하다.

〈그림51〉 서울형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모형



출처 : 문진수(2013), 정태인(2013)에서 재인용

III. 조직유형별 지원에서 미션유형별 지원제로 재편

중앙부처 제도를 기초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활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4개 부문으로 유형화되고 각기 다른 부처와 상이한 지원 제도 하에 놓여 있으며, 최근 들어 부문 간 중복화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문·지역·업종별 네트워크에 모두 참여해야 하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 조직들은 조직 유형보다는 미션 유형별로 의제의 시급성·자본 조성 방식·주 소비자의 지불 능력·사회적 지지망·시장형성도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설계를 기대한다. 따라서 서울시를 선두로 부처 간 칸막이를 깨는 융합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토대로 우선 서울시의 독자 예산 사용에서부터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미션유형별로 재구분하여 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 유형 간의 이행 경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52〉 미션별 지원제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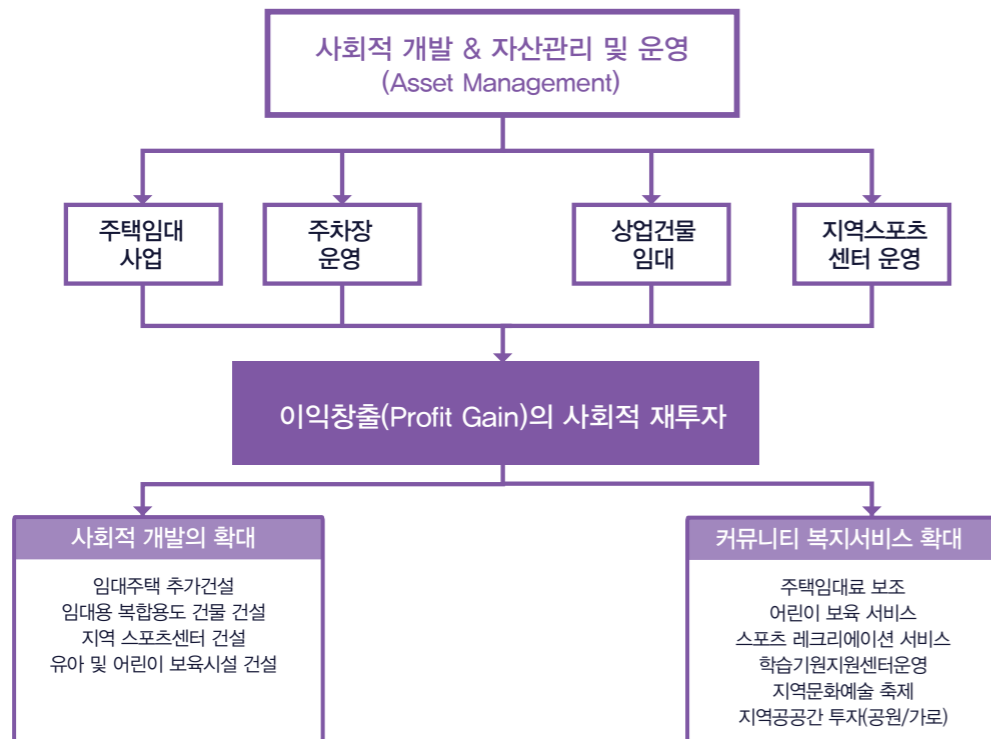


IV.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공공자산의 커뮤니티 위탁경영 확대

201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의 30%까지를 자산조성비로 전환하지는 민관협업체의 공감대가 있었으나 자치구 협동화단지 조성비 이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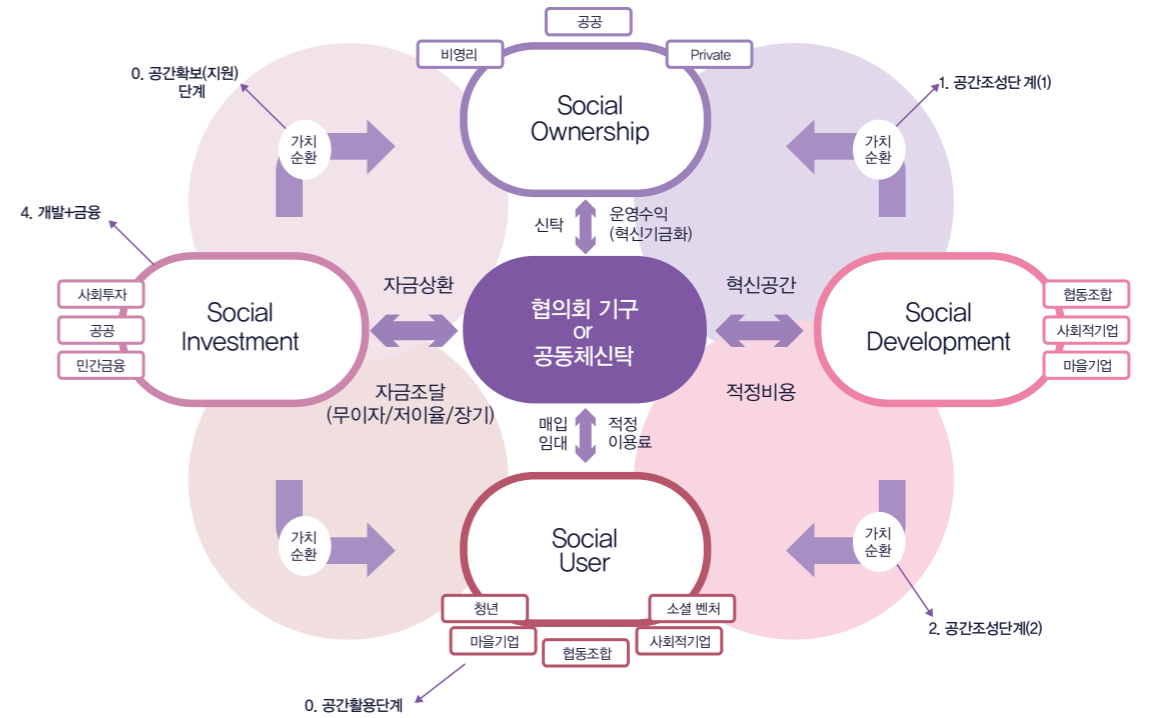
반면 국내 기초 지자체 중 사회적경제의 양과 질 모두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마포구가 직면하게 된 젠트리피케이션의 악영향·상업지를 포함한 도시재생지 및 유명 관광지의 부동산 투기 열풍·현금성 재정 지원에서 시장조성(공공계약 확대)과 자산운용 위임을 확대한 선진국의 지원제도 변천사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서울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업형 공간자산 조성을 위한 사회투자기금 용자 확대 및 민간주도형 협동화 단지 조성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그림53〉 커뮤니티 자산관리 모델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자산 가치 하락기를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유휴 공공자산 공동체 신탁'을 만들어 공간자산 운용과 자산수익의 사회적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장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림54〉 민간주도형 공동자산화 & 공공부지 민간경영 확대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제들은 서울시의 정책 의지나 민간 역량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서울시의회를 통한 적극적인 조례 제·개정,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의 제·개정 등의 과정을 통해 협력적 기반을 조성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별첨

민선6기 지방선거 사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공약권고 및 서울시 이행도

I.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 행정조직 및 민관 거버넌스 체계, 제도 기반

구분	주제	범위	공약 및 내용	제안주체	서울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정도 (*과제)
I	행정 체계	광역 기초	• 사회적경제 통합 부서 설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12년 서울시 최초 도입 ▶ 광주, 전주, 경기 통합 중
			• 각 지자체에 사회적경제과 설치	대전충청	성북, 성동, 금천 등 확대 중
			•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설치	협동조합연구소	서울시 및 자치구 도입 *부문별 팀제의 적정성 평가 필요
			• 사회적경제 전담공무원 장기근속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일부 시행 *장기근속 인센티브 개발 필요
			• 협동조합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협동조합연구소	서울 사경센터 & 인재개발원 기본교육&자치구 추진 중
	거버넌스	광역 기초	• 시도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12 서울시 희망경제위 구성 *15 조례개정, 재구성 완료
			• 협동조합협의회-담당팀 정책협의회	협동조합연구소	'123 서울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설치, 지속 운영 중 *부문별 협의방식 평가 필요
		광역	•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협의체 설치 - 민관 개방형광역 정책조정협의회 - 실국별 사업과 기초지자체 연계	대전충청	서울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 전국적 확산 *다양 실국 연계 강화 과제
			기초	•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협의체 및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대전충청

구분	주제	범위	공약 및 내용	제안주체	서울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정도 (*과제)
I	지원 체계	광역 기초	•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센터 설치	한국사회적기업대전충청기획단	'13.1 서울시 최초 설치 ▶ 강원, 경기, 충남, 광주, 제주, 대구, 인천/전주, 화성, 서울시내 10개구
			• 민간·지역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육성	의료복지연합	'12 서울 보건소&의료생협 협력 사업 후 중단 *16 전략업종 협동화 구상
			• 긴급 일자리 제공기관으로서의 지역자활센터 역할 확대	한국자활협회	서울, 부산 자활센터 희망리본 사업 경험 보유
	제도 및 계획	광역 기초	•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한국사회적기업	'12 충남, '15서울시 제정·확산
			•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12 충남, '13 서울 연구, '14 강원, '16 경기 추진 *서울 중기 계획/평가 필요
			• 사회적경제에 자활기업 포함 •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례 제정 • 자활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	한국자활협회	- '15 서울 조례 포함 - '12 서울 사회투자기금 조례 제정 및 기금 운용 *사회투자기금 개편중
			기타	광역	• 전문 사회적경제연구기관 설치

II.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와 기반 조성

구분	주제	범위	공약 및 내용	제안주체	서울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정도 (*과제)
II	공공 서비스 위탁	광역 기초	• 공공서비스 사회적기업 위탁 확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12 서울시 목표제, 최다성과 '15 조례, 조달 5%할당 반영 *공급력 제고, 서비스 위탁 확대
			• 사회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바우처의 30~50% 우선배분 조례	협동조합연구소	'15 여성대회 시 돌봄서비스 10%할당 협약, 성과 부진 *조직형태별 경쟁 부적절
			• 신규 공공서비스 30% 할당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합의/R&D 필요
			• 전략분야 협동조합 육성	협동조합연구소	'13 서울시 추진, 성과 미미

II	시장 조성 및 판로 지원	광역 기초	• 유류 공공자산 사회적기업 위탁	한국사회적기업	'12 서울시 사경클러스터▶'15 타시도 인수위 최대관심 사항, 경기 따복타운 등으로 확산 *적극적 자산 활용 연계 필요
			• 사회적기업 재화 우선구매 조례	한국사회적기업	'14 서울 사회적가치 조달 조례 ▶ 타시도 민간 최대 관심사항 *공기업 지방이전 후 감소, 다양, 공공기관 참여 유인 지속필요
			• 사회적경제 재화 의무구매공시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13 사경센터 목표대비 성과분석 *서울시 재무국 정보공개망 필요 의무구매 전환 사회적합의 검토
			• 사회적경제를 위한 사회적책임조달 4개년 계획 수립 (2015년~18년)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서울시, 부분도입 중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15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동운영단 ▶경기 등 복제 중
			• 1공공- 1사회적기업 매점/카페	한국사회적기업	'13 서울 함께누리물 운영개시 자치구클러스터/역사 복합매장
			• 사회적기업 복합매장 설치	한국사회적기업 대전충청	
			• 지자체 주관행사에 사회적기업의 참여 촉진	한국사회적기업 대전충청기획단	서울시 / 자치구 기 시행 중
	자원 연계	광역	• 협동조합 공동창업센터 설립 및 운영 위탁	협동조합연구소	'13 서울 협동조합종합센터 → '16 휴먼조합 설립 후 지원 확대
			• 사회적기업 공유자원허브 설립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3 사경센터 서울자원공유업 '15 사경센터 공유플랫폼 기획
• 사회서비스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협동조합연구소	'14 서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적정기술(사회기술) 지원강화			대전충청 기획단	'15 사경센터 사회적경제 기술혁 신립 설치 준비, 장소 애로 발생	
사회적 투자	광역	• 민관합동 로컬거버넌스기금 운용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 대규모 자본 투자 장기상환 지원	대전충청 기획단	*서울사투기금 개선 & 연대기금	

III.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재생

구분	주제	범위	공약 및 내용	제안주체	서울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정도 (*과제)
III	지역 재생 및 개발	광역 기초	• 사회적경제 우선투자지구 지정 및 장기적 종합지원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5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 도시재생본부와 정책협의회 참여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책 강화 지역개발회사 접촉
			• 소지역 단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지역공동체회사	매니페스토 대전충청기획단 협동조합연구소	
	창업 육성 및 지역 경제 진흥	광역 기초	• 지역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문 사회적경제 육성 농촌활성화	대전충청 기획단	'13 농산물유통쿠팡 증가 *개별적 접근 한계 보완책 필요
			•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협업구조 규모화와 시스템화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사업자조합 75%, 재정지원 중 *소상공 협업 노하우, 모델 부족
	에너지	광역 기초	•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도입	대전충청 기획단	서울시 햇빛발전 위탁 지속
			• 노후건물 에너지 진단과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추진	대전충청 기획단	서울시 일부 도입

IV.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회서비스 제공

구분	주제	범위	공약 및 내용	제안주체	서울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정도 (*과제)
IV	일자리 모델 확대	광역 기초	•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공공 근로사업의 새로운 전략 수립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3~'14 서울시 공공근로 개선 TF 운영, but '경과형 일자리' 미 추진 *서울시 일창출 정책 개입 필요
			• 취약계층 자활기업(self-help firm)에 대한 적극적 지원 강화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 자립형 노인일자리 모델 확대	대전충청기획단 사회적기업협회	
		• 지역일자리창출형 사회서비스 개발 - 지역특화사회서비스민관협의체 - 자활사업 연계, 지역사회 투자	한국자활협회		
	보육	광역 기초	• '제3섹터형 공보육시설' 설치 운영 - 사회적경제와 공공 공동설립 - 직장보육시설 보육협동조합 전환 - 지역돌봄 일시보육 공간 마련 - 부모놀이교실 개설 • 장애아 가족 행복나눔 서비스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15 서울시 공보육 확충 MOU, 사회적경제 추진단 운영 * 단순 위탁 아닌 제3섹터형 설립 추진을 낮음
			의료	기초	• 동단위 "건강협동센터" 설립 - 주민참여형 마을건강위원회 운영 서비스는 사회적경제 제공
	장애인 복지	광역 기초	• 생산성복지 사업장 운영 - 정신지체장애인 자립생활훈련, 힐링치유 프로그램 운영 - 정년퇴직한 전문가의 재능 기부 및 노령인력 창출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	'08 고용부 프로보노단 지원 전문 민간기관(세스넷) 설치, 연계 미흡 '16 서울시 50+재단과 협력모색
주거			광역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한국자활협회
기타	광역	•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신설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자활근로사업' 시행	한국자활협회	'15 박원순시장 민선6기 공약	

V. 사회적경제 교육과 인력양성

구분	주제	범위	공약 및 내용	제안주체	서울시 추진 현황 및 확산 정도 (*과제)
V	공교육 관련	광역 기초	• 초중고생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전면 실시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5 서울시/교육청 교재교구 개발 '11 고용부 교육부 교섭, 미추진
			• 정규 교과과정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내용 확산	대전충청 기획단	
	진로 교육	광역 기초	•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한국사회적기업협회 대전충청 기획단	'13 사경센터, 학교협동조합추진단 현재 7개소 설립, 교육청TF *매점형 vs 교육서비스형 재합의
			• 사회적경제조직 연계 진로체험·동아리·방과 후 교육 지원 활성화 • 테마형 수학여행 확대	한국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15 서울 교육청, 동아리 지원 *개별학교 교섭 미흡
	시민 교육	광역 기초	•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100개 육성	대전충청 기획단	'13~'14 서울사경센터 추진
	인재 양성	광역 기초	• 협동조합 심화교육프로그램 운영 •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지정 육성	협동조합연구소	'13 협동조합센터 역할 & 사경센터 아카데미, 부문협회 피어컨설팅 *자치구센터/타부문 협업 과제
			• 국공립 대학의 지역평생학습 특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 도시재생 학위 제도 실시	대전충청 기획단	'14 서울 대학 협력 확대 중 *수도권 학사 규제, 대학 소극성 대응 필요
			• 인재육성 펠로우 기금 조성 - 잠재 지역리더 청년 생활비 지원	대전충청 기획단	'13 서울 청년혁신활동가 기추진 '16 서울시 청년수당
			• 청년단체 활성화 및 네트워크 거점 공간 제공	대전충청 기획단	'11 고용부 청년사회적기업 육성 기관 서울 내 6~7개소, 협력 중 '13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 사회자본형 청년정책플랫폼 '청년정책 네트워크'	대전충청 기획단	

VI. GSEF 서울선언문

서울 선언문

세계의 위기와 사회적경제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촉발된 위기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최근 아시아 및 신흥경제의 금융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시장원리에 대한 지나친 강조와 규제 없는 금융세계화의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경제위기는 소득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는 종종 사회정치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화석연료 의존 체제는 기후온난화, 생물다양성의 파괴, 그리고 에너지·식량 위기 등 인류 전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생태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서, 우리는 “다원적 경제”를 모색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주목한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사회적경제 운동”은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생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가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삶”을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회적경제는 왜 중요한가?

사회적경제는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효율성과 형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려 한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영리기업 제외), 신용조합과 마이크로 금융, 그리고 비영리 단체가 사회적경제를 구성한다. 물론, 자선단체와 사회투자부문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가 공공 부문, 그리고 시장경제와 조화를 이룰 때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과 국가,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생태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존엄성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과 보육, 보건과 돌봄서비스 등 관계재(relational goods)를 공급하는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사회적경제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형성과 식량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는 그 동안 충족되지 못한 필요(needs)를 사회 구성원의 협동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다.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로컬푸드 운동, 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는 우리가 당면한 생태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임을 입증해 왔다. 생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국제협약 가입과 국가 차원의 에너지체제 전환 등을 통해 세계와 나라의 여러 제도와 결합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풀뿌리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재생의 토대이다. 사회적경제에 내재해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룩하며 연대와 지속가능성의 정신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은 국제협약에서부터 개인의 규범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에서 나날이 증대되고 있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향하여

지금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는 어느 한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한 연대를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자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지역공동체와 국가를 포괄하는 글로벌한 사회 경제적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통로이며, 전 세계 우리 모두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장이다.

본 포럼은 세계 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운동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전을 다 함께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1. 각 지방정부는 공공 - 민간 - 공동체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
2. 우리 모두는 시민 권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 사회적경제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동체 리더십을 지지한다.
3.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상이한 집단을 위해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4.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표준적인 교과서와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역량을 증진시킬 것이다.
5. 우리 모두는 사회혁신을 위해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 간 사회적경제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6. 우리 모두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및 기타 소통수단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토론하고 공유한다. 각 도시정부는 이러한 정보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시로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7.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모델을 개발한다. 정부의 공공정책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 연합체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9. 우리 모두는 심각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의식을 공감하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빈곤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10.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공동 행동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다. 여성 단체와 노동 단체, 환경 단체 등 사회적경제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도 이러한 과정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글로벌 사회적경제 협의체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에 임시 사무국을 만들어 2014년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모든 참여자는 2014년 총회에서 주최 도시 선정, 사업 확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협력한다.

2013 국제사회적경제포럼
11월 5~7일 서울에서 모임
본 선언문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채택됨

VII. 2014년 기준 서울시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섹터'의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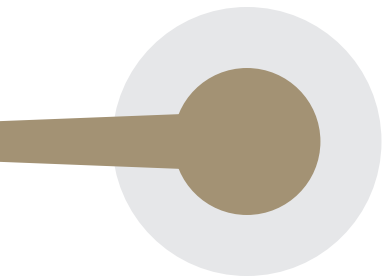
구	사회적협동조합 수	인증사회적기업 수	마을기업 수	운영 중인 협동조합 수	구별 총계
종로구	3	16	4	28	51
중구	3	15	3	27	48
용산구	0	10	10	8	28
성동구	1	10	5	10	26
광진구	4	8	3	16	31
동대문구	0	4	4	16	24
종랑구	1	3	3	8	15
성북구	6	15	11	5	37
강북구	2	3	5	7	17
도봉구	4	4	6	8	22
노원구	3	5	2	11	21
은평구	1	13	5	15	34
서대문구	3	4	7	22	36
마포구	4	19	11	44	78
양천구	0	4	2	4	10
강서구	1	5	4	14	24
구로구	2	11	10	18	41
금천구	5	9	6	12	32
영등포구	12	24	4	20	60
동작구	2	7	7	10	26
관악구	1	9	4	8	22
서초구	7	11	5	20	43
강남구	5	13	6	24	48
송파구	1	4	5	26	36
강동구	2	1	7	8	18
총 계	73	227	139	389	828

VIII.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동체주택 공급 및 운영 현황

업체명	계	주요 사업내용	2013년	2014년	2015년
소행주	63 (분양 55/ 임대 8)	공동체주택 : 1호점_9가구, 2호점_ : 4호점	(21) 마포구 11 강북구 10	(8) 마포구	(8) 마포구
아이부키	30 (분양 30)	보린주택 :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1~3호) 시소주택 : 창작자 맞춤형 공유주택(1호점)		(16) 금천구	(14) 금천구
함께주택 협동조합	19 (임대 19)	공동체주택 : 1호점(1인가구)_10가구 2호점_9가구		(10) 마포구	(9) 마포구
서울소셜 스탠다드	14 (임대 7/ 전대7)	세어하우스(통인동_청년) : 1호점_7가구	(7) 종로구		(7) 마포구
민달팽이 주택협동 조합	7 (전대 7)	달팽이집(청년) : 1호점_6명, 2호점_총4세대 12명, 3호점_13명, 4호점_13명		(5) 서대문구	(2) 성북구
일상예술 창작센터	7 (임대 7)	예술가 맞춤형 공유주택			(7) 마포구
어반 소사이어티	6 (임대 6)				(6) 성동구
두꺼비 하우스	37	(빈집프로젝트_1인가구)공가 : 총 37명 - 1호점_6명, 2호점_9명, 3호점(대학생)_6명, 4호점(여성)_1명, 5호점(여성)_2명, 6호점(남성)_3명, 7호점_10명 사회주택 : 장위동(공사 중)			
녹색빈구들	23	사회주택 : 더블어숲 1호(마포구 성산동 59-12번지, 11세대) 더블어숲 2호(서대문구 창천동 388번지, 12세대)			
희망동네	6	함께사는집(청년) : 총 6명			
woozoo	147	세어하우스(1인 청년) : 총 147가구 1호점_3명, 3호점_6명, 6호점_11명, 8호점_8명, 9호점_9명, 12호점_8명, 13호점_7명, 14호점_8명, 16호점_6명, 17호점_6명, 18호점_7명, 19호점_8명, 20호점_8명, 21호점_ 6명, 22호점_8명, 23호점_7명, 24호점_7명 25호점_8명, 26호점_8명, 27호점_8명			
총계	359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2014,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정교화 및 활용을 위한 연구」
- 고용노동부 · 한국노동연구원, 2016,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고용영향평가 연구」
- 김경희, 2013,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공공사회연구, 3(2)
- 박종찬, 2015,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용가능한 금융상품들의 이해」, (재)한국사회투자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6, 내부 보고서
- 서울광역자활센터, 2015, 활동보고집
- 서울시, 2016, 내부 보고서
- 서울시, 2016, 「2015 서울서베이(2014년 기준)」
- 서울시, 2016, 「2015 서울시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 서울연구원, 2015, 「2014년 4/4분기 서울지역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 부가조사」
- 이향숙 · 이문희, 2014, 「생협의 사회 가치 2014 아이쿱생협을 대상으로」
(재)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 이철선 · 박세경 · 권소일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전략
Ⅲ: 사회서비스 산업-제3섹터-고용창출 연계모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종익 외,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성과 측정과 관련정책의 평가」, 서울연구원
- 정태인 외, 2013,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
- 조달호 · 김범식 · 최봉, 2012,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 조달호 · 유인혜 · 정현철, 2016,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평가」, 서울연구원
- 중소기업청 · 창업진흥원, 2016, 「2015년 창업기업 실태조사」
- 통계청, 2015, 「전국사업체 조사, 통계정보보고서」
- 길현중 · 안주엽, 2014, 「협동조합의 고용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기초분석)」
2014, 「사회적기업 성과분석(기초분석)」
- 한국사회투자, 2015, 사회투자기금 실적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비매품/무료

15060



9 791197 014949

ISBN 979-11-970149-4-9 (PDF)